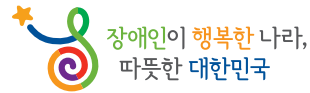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911-10



제III권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상품판매시설)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장애인등록, 생활안정)	[제I권]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 (지역사회복지, 기타복지사업 등)	[제II권]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III권]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제IV권]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V권]
201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제VI권]
201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제VII권]
201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VIII권]



함께하는 행복 울타리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이 지침은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부터 지방이양 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동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매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관련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목차 Contents

제 1 장 '14년 개정사항 안내 / 1

1. '14년 주요 변경 사항 3
2. '1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9

제 2 장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 13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대상 및 절차 15
2.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21
3. 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28
4. 소방시설 등 안전설치 관련 46
5. 장애인 거주시설 통계 49

제 3 장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사업 / 51

1.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53
 - 1-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미충족시설) 및
미신고시설 관리 70
2.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76
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95
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02
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 111
6.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 116

제 4 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운영 / 127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29
2. 장애인 복지관 운영 137
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52

제 5 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157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59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184
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204
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215

제 6 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225

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227
2.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 지원 243
3.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62

제 7 장 부 록 / 281

1.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283
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기준 308
3.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규정(안) 예시 335
4.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점검기준 341
5.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413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436
7.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447

CHAPTER 01

'14년 개정사항 안내

1. '14년 주요 변경 사항
2. '1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1

'14년 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사업명	2013년	2014년	변경사유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감독 (P23)	2. 기본방향 <신설>	2. 기본방향 ○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처리절차 - 피해자 격리조치, 전문기관조사 시설폐쇄 등 처분 - 사복법 제22조에 따른 임원해임명령 등	처리절차 안내
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 (P28)	3. 구 성 가. 위원회의구성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구 성 가. 인권지킴이단의구성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설 직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직원의 연임 제한
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 (P29)	3. 구 성 나. 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의 선출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은 직원 위원중 1명을 지명한다. ○ 회의 종류 및 개최 횟수 - 정기회의 : 연 2회 이상 실시 - 사례회의 : 연4회(분기별 1회) ○ 회의내용의 기록 및 보고 -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회의에 관한 기록을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전체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3.구 성 나.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 단장의 선출은 호선으로 하며, 간사는 직원단원 중 1명을 단장이 지명한다. ○ 회의 종류 및 개최 횟수 - 정기·사례회의 : 연4회(분기별 1회)이상 실시 ○ 회의내용의 기록 및 보고 -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회의에 관한 기록을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전체 단원 및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인권지킴이단의 설치 ○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장과 별도의 논의구조를 가지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에는 시설장, 이사장 및 이사, 법인 직원의 가족·친인척이 포함될 수 없음	운영상황 시군구 보고 등



사업명	2013년	2014년	변경사유
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 단운영 (P31)	<p>5. 운영</p> <p>가. 인권교육</p> <p>1) 공통사항</p> <p>○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이용자와 직원 및 자원봉사자 인권교육은 각각 연1회 이상 실시</p> <p>3) 직원 인권교육</p> <p>○ 직원 인권교육은 반드시 연4시간 이상 실시한다.</p> <p>나.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과 기준 <신설></p> <p>라. 인권점검 정례화</p> <p>○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매년 연 1회 이상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한다.</p> <p><신설></p>	<p>5. 운영</p> <p>가. 인권교육</p> <p>1) 공통사항</p> <p>○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이용자와 직원 및 자원봉사자 인권교육을 실시</p> <p>3) 직원 인권교육</p> <p>○ 직원 인권교육은 반드시 연2회(8시간)이상 실시한다.</p> <p>나.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과 기준</p> <p>○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은 시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p> <p>라. 인권점검 정례화</p> <p>○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매년 상반기에 1회 이상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상황에 대해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바.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p> <p>○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p>	교육강화 등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P57,64)	<p>5-1.관리운영비 지원 <신설></p> <p>[별표2]</p> <p>○ 2013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p> <p>- 시설당 기본지원 : 40,779천원/년</p> <p>- 인원가중지원 : 611천원/년</p>	<p>5-1.관리운영비 지원</p> <p>○ 생활지도원의 경우 종사자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야간 및 시간외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시군구 허가를 받아 시간외 수당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p> <p>[별표2]</p> <p>○ 2014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p> <p>- 시설당 기본지원 : 42,002천원/년</p> <p>- 인원가중지원 : 629원/년</p>	대체인력 채용 및 단가 인상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운영 (P100)	<p>○ 관리운영비 지원 단가</p> <p>- 1,970천원(10인기준)/인/년</p>	<p>○ 관리운영비 지원 단가</p> <p>- 2,029천원(10인기준)/인/년</p>	단가 인상

사업명	2013년	2014년	변경사유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 (P112)	2. 실비 입소 비용 ○ 거주시설 실비 이용장애인 수납한도액 - 월 320,000원 ○ 실비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수납한도액 - 월 594,000원	2. 실비 입소 비용 ○ 거주시설 실비 이용장애인 수납한도액 - 월 335,000원 ○ 실비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수납한도액 - 월 605,000원	13년도 통계 반영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운영 (P135)	○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 시설당기본지원 : 13,596천원/년 - 인원이증지원 : 113천원/년	○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 시설당기본지원 : 14,000천원/년 - 인원이증지원 : 116천원/년	전년도기준 3%수준 인상
장애인 복지관운영 (부록)	<신설>	○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신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사업명	2013년	2014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 근거법령 가. ~ 다. (생략)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 무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	2. 근거법령 가. ~ 다. (생략)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다 만, ④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도가 시설 을 직영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임명 또 는 위촉함) ① 근로장애인 또는 근로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 대표 ④ 시설종사자 대표 ⑤ 관계공무원 ⑥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 <신설> ⑧ <신설>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 리 등에 관한 사항 - <신설>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신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 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① 시설의 장 ② 시설 이용자 대표 ③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⑤는 반드시 포함하고, ⑥~⑧은 선택하여 위촉)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설장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사업명	2013년	2014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p>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라.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시행</p>	<p>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라.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시행</p>																													
	<p>[참고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신설></p> <p>○ <신설></p>	<p>[참고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p>																													
	<p>[참고자료 별표2] 2013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의종류</th><th colspan="2">2013년도</th></tr> <tr> <th>지원구분</th><th>지원단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근로사업장</td><td>시설당 기본지원</td><td>45,570</td></tr> <tr> <td>인원 가중지원</td><td>611</td></tr> <tr> <td rowspan="2">보호작업장</td><td>시설당 기본지원</td><td>14,289</td></tr> <tr> <td>인원가중지원</td><td>163</td></tr> </tbody> </table> <p>※ 2004년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전년대비 3.6% 인상)에 매년 3.6%인상을 적용 ※ 지원기준을 준수하고, 지원기준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기본지원 또는 인원 가중지원이 삭감되어서는 안 됨</p>	시설의종류	2013년도		지원구분	지원단가	근로사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45,570	인원 가중지원	611	보호작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14,289	인원가중지원	163	<p>[참고자료 별표2] 2014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시설의 종류</th><th colspan="2">2014년도</th></tr> <tr> <th>지원구분</th><th>지원단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근로사업장</td><td>시설당 기본지원</td><td>47,210</td></tr> <tr> <td>인원 가중지원</td><td>633</td></tr> <tr> <td rowspan="2">보호작업장</td><td>시설당 기본지원</td><td>14,803</td></tr> <tr> <td>인원가중지원</td><td>169</td></tr> </tbody> </table> <p>※ 2004년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전년대비 3.6% 인상)에 매년 3.6%인상을 적용 ※ 지원기준을 준수하고, 지원기준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기본지원 또는 인원 가중지원이 삭감되어서는 안 됨</p>	시설의 종류	2014년도		지원구분	지원단가	근로사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47,210	인원 가중지원	633	보호작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14,803	인원가중지원
시설의종류	2013년도																														
	지원구분	지원단가																													
근로사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45,570																													
	인원 가중지원	611																													
보호작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14,289																													
	인원가중지원	163																													
시설의 종류	2014년도																														
	지원구분	지원단가																													
근로사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47,210																													
	인원 가중지원	633																													
보호작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14,803																													
	인원가중지원	169																													



사업명	2013년	2014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생략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 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생략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비용(설계비 포함)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 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부록	○ <신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 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이용등, 개정)
 -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
- 장애인복지시설 개념과 기능 재정립 ;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개정)
 - 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 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개념 및 기능 재정립,
 -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을 거주시설로 분류하고,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삭제, 의료재활시설은 별도로 분류
- 거주시설 정원을 30명 이하로 제한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설치, 개정)
 -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 인권침해 등 부작용 해소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소규모화
 - ※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제59조제3항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과규정(부칙 제2조제2항 신설)
-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59조의2, 신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시설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대상 성범죄의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제59조의3, 신설
 - 성범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제59조의4('12.10.22신설, '13.4.23시행)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나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응급조치 의무등 ; 제59조의5('12.10.22신설, '13.4.23시행)
 -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
- 보조인의 선임 등 ; 제59조의6('12.10.22신설, '13.4.23시행)
 - 학대 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 제60조, 개정
 -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설 운영중단 사유 해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을 재개토록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운영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벌칙규정(제87조제5호)
- 거주시설 이용 절차 ; 제60조의2, 신설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대한 시설 이용 신청,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 및 결정, 이용계약체결, 이용자의 시설 이용 중단에 따른 조치사항 등의 절차 규정
-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제60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는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

-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규정 ; 제60조의4, 신설
 -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회복조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의 보장 등 시설 운영자의 이행 규정
- 본인부담금 신설 ; 제79조(비용부담, 신설)
 -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 유료시설 비용 수납규정 삭제 : 제80조(비용수납, 개정)
 -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관련 비용 수납 신고 규정 삭제

CHAPTER 02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대상 및 절차
2.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3. 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4. 소방시설 등 안전설치 관련
5. 장애인 거주시설 통계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대상 및 절차

1. 목 적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57조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2. 기본추진 방향

- 시설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뢰 또는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의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이용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긴급한 시설서비스 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이용 장애인 인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시설의 종류와 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

○ 공통사항 : 등록장애인

가. 무료이용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입양기관 보호 아동
 -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이용 의뢰한 입양기관 보호 아동

나.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4. 이용절차

가. 공통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나. 일반 이용 대상자

-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② **적격성여부 심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등을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이용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이용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이용을 의뢰하여야 함

- ③ **이용계약체결**

- 시설 이용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 계약체결과정에서 시설운영자는 입소희망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 계약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7항)

☞ 계약서 포함 사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④ 본인부담금 산정

-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장애인복지법 제79조제2항)

☞ 본인부담금 고시안 시행 이전에는 실비 입소 이용료를 본인부담금으로 같음

⑤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이용보증금은 월 이용료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다. 긴급이용자

- 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인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 ② 긴급이용자가 이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시설이용 개시일,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③ 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서비스 신청, 이용적격성 심사)를 안내하여 긴급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절차를 이행토록 함

라. 실비이용 대상자

- 무료입소 대상자와 동일(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 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가 있어야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
- * 단,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비입소자 명단, 상담평가기록부, 비용수납대장을 별도 작성·관리



5. 퇴소절차

- 장애인의 사망·원가정 복귀·시설 전원·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시설의 전원 및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은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 개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시설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를 받기 전 복지실 시기관이 우선 조치할 수 있음

6.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장애등급)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1급, 2급 중증장애인
○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1개월 기준으로 보호자의 휴식 또는 일시적 피난 등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별도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나 와상상태의 중증장애인 또는 6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경우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로 이용(입소)권고

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1. 목 적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호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법인)에게 대행(위임)토록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인권보호)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사례 발견 시 주무관청의 신속한 행정조치 도모

2.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에 의거 해당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장은 연초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 특히, 인권침해 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보호, 서비스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 보호, 야간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
 - * 시설이용 장애인의 권익증진 등 시설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자 단체(한국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자체적으로 시설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경우 지자체는 적극 지원할 것



-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가능한 한 관내 인권활동가 등 인권조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되,
 - 특히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 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시설 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제도화 등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

3. 미신고시설 발생방지 철저

- 2009.12.31.기한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조건부시설)의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법정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관내 미신고시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
- 미신고시설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 순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견된 미신고시설은 즉시 시설폐쇄 조치
 - 미신고시설에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시설서비스 대상으로 적합한 장애인이 입소되어 있을 경우 장애인이 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원 등 행정지원 우선 실시
 - * 미신고시설 입소 장애인(또는 가족 등)에 대해 시설서비스 제도 및 이용 가능한 다른 재가 재활 서비스 제도와 미신고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안내
 - * 미신고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장애인 시설서비스 제도는 지자체의 정책 사업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비를 구비한 후 신고 절차를 거쳐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
(* 지역 내 시설서비스의 수요·공급관리는 시군구청장 책임 사항임)

- *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및 제86조(벌칙)제4호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시행

4. 인권침해 사례 즉시 조치

- 시설 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은 즉시 해당시설에 대한 관련사항의 진위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 혐의가 인정될 시 시안에 따라 인권침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또는 관련 **행정조치**(시설장 또는 가해 종사자 교체, 전원·분리조치 등)를 신속하게 시행
- * 특히, 시·군·구청장은 인권침해사례 인지 후 해당시설에 대한 조치 전·후를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시·도 및 보건복지부로 즉시 보고하고 공유할 것

5. 인권침해 발생시 조치 및 처리 절차

〈시설운영〉

- (피해자 격리조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 격리(전원)조치
 - 시설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서비스신청), 제33조의3(복지요구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3호(재활상담조치),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제60조의2(거주시설이용절차) ; 이용신청, 적격성심사, 이용결정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뢰서 송부
- (전문기관조사) 시군구 주무관청의 진상 조사 또는 인권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인권전문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
 - * 형사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 (시설폐쇄 등 처분)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조사로 객관적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
 - *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 －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장교체, 시설의 폐쇄 명령

〈법인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처분 가능
 - －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 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 가능
 - *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행정처분의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6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7.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8.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교체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가.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나.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다.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중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3

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1. 설치목적

-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함(의무사항).
- * 시설 이용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2. 설치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제외)

3. 구 성

가.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¹⁾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설 직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시설 이용자(단, 영유아시설의 경우 옹호자¹⁾가 대신할 수 있다)
 - 시설 직원(시설장 제외²⁾)

1)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대변, 옹호, 개입, 지지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부모 및 이용자 가족, 옹호자
- 기타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예: 활동가, 교수, 변호사, 인권전문 강사, 특수교사, 치료사, 성년후견인(후보자) 등)

나.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 단장의 선출은 호선으로 하며, 간사는 직원단원 중 1명을 단장이 지명한다.
- 회의의 종류 및 개최 횟수
 - 정기·사례회의 : 연4회(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임시회의 : 인권지킴이단 혹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실시
- 회의 내용
 - 정기·사례회의 :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 지원 방안,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조직 구조 및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각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개선사항,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과 점검 내용에 따른 평가, 인권교육의 시행 및 만족도 조사,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인권인식 개선사업 등)등에 관한 회의
(단, 정기·사례회의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이용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례회의가 포함되어야 함)
 - 임시회의 : 정기회의 및 사례회의 외에 이용자 인권옹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에 관한 회의
- 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인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 인권지킴이단은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설장이 참여할 경우 자율적인 논의가 제한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에는 시설장, 이사장 및 이사, 법인 직원의 가족·친인척이 포함될 수 없다.



○ 회의내용의 기록 및 보고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회의에 관한 기록을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전체 단원 및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 기록 및 보고내용에 이견이 있는 단원은 즉시 간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활동에 관한 기록은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이의제기를 접수한 간사는 인권지킴이단장에게 보고하고, 인권지킴이단장은 상황을 확인 후 이를 처리해야 한다.

- 각 시설의 현황을 반영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기능 및 사업, 구성, 단원의 자격, 단원의 종류, 단원의 임면 및 임기, 단원의 책무, 회의의 종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의 기록, 보고, 문서 보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부록에 첨부된 인권지킴이단운영규정(예시)참조)

4. 역 할

가. 인권옹호 활동

1) 인권옹호 활동의 정의와 범위

○ 인권옹호의 정의

- 시설 이용자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³⁾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

○ 인권옹호의 범위

- 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
- 시설 관계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가 시설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그들의 욕구와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일련의 원조 활동

3) 인권 및 장애인 관련 선언 및 권리협약,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이용자의 기본 권리는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문화권, 법 절차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따른 세부 기본 권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 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의한다.

2) 인권옹호 활동의 내용

- 인권교육, 인권인식 개선, 인권 점검 정례화

나. 사후활동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확인 및 인권침해 사실 진정·고발
- 인권침해에 따른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 권고

5. 운 영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에 따른 세부 운영은 다음과 같고, 관할 지자체는 해당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가. 인권교육

1) 공통사항

-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및 시설 관계자(직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한다.
- 인권교육은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 이용자 보호자 교육으로 운영한다.
-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용자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이용자의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2) 이용자 인권교육

-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과 다양한 형식과 방법(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여 연1회 이상 4시간 이상 실시한다.
- 교육의 계획과 실행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기록, 보관한다.



3) 직원 인권교육

- 직원 인권교육은 반드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한다.(소집단교육, 대면교육 형태로 진행하며 집체식 교육 금지)
- 직원 인권교육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인권의식에 대한 이해, 실천 속에서의 인권적용, 인권 감수성 키우기 등이다.

4) 자원봉사자 인권 교육

-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 자료를 비치한다.
- 일회적 자원봉사자 방문 시에도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전달한다.
-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활동 시작 전에 장애인 인권옹호 교육을 실시 하고 정기적으로 재교육 한다.
- 자원봉사자 인권 교육의 방법은 시설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한다.
- 자원봉사자 인권교육은 자원봉사 업무 관련자가 담당한다.

나.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과 기준

-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은 반드시 시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 양성 과정 수료자
-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예:거주시설 인권관련 현장 활동가, 인권전문 강사 등)
-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한 자료를 증빙하여 기록, 보관한다.

다. 인권인식 개선

- 시설 관계자 및 지역사회주민이 시설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 인권옹호활동 게재, 지역신문 투고, 보도 자료 배포, 인권문화제, 인권마라톤, 거리 캠페인 등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인권인식 개선사업은 시설들이 연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

라. 인권점검 정례화

-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매년 상반기에 1회 이상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권상황 점검의 계획 및 전반적 관리는 인권지킴이단이 담당하고 시설은 필요한 제반 협조를 한다.
- 이용자의 인권상황 점검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현황 점검 지표’를 활용한다.
(※부록에 있는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세부 가이드라인 및 점검 기준’을 활용)
-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의 점검된 인권상황과 이에 따른 인권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연 2회 평가를 실시한다.

마. 사후활동(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 내부고발제도⁴⁾ 운영 등).

- 인권침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인권교육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이용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 인권침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화해야 한다.
 - 정기적인 인권상황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화해야 한다.
 -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내부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실을 공식화해야 한다.
 - 인권침해 사실의 ‘공식화’란 사실에 대한 시설 관련자 공유, 사실 확인을 위한 팀구성, 보호자에게 침해사실 발견에 대한 통보 등을 의미한다.
 -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서식(*이용자 인권침해사실 통보서 서식)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통보를 위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후 기록을 남긴다.
- 선 보호조치 후 확인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 공적조직에 진정·고발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 분리·보호는 인근의 보호기관을 활용하는 등 인권침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자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01_sub/body02.jsp)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다.
 - 경찰서 고발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

4) 인권지킴이단 위원장 및 간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운영.

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 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 지원조치 : 시설은 인권 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 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한다.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절차, 별지1호 서식)

바.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 시설장과 지사체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설치 목적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사업 체계화, 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나.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다. 인권지킴이지원 센터 역할

1)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상담 및 지원

- 개별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의 인권 관련 개별 사례를 접수, 상담, 옹호 활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함.



- 개별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인권 상황 점검 및 시설의 자정 노력을 지원함.
-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센터에서는 인권관련 사례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된 상담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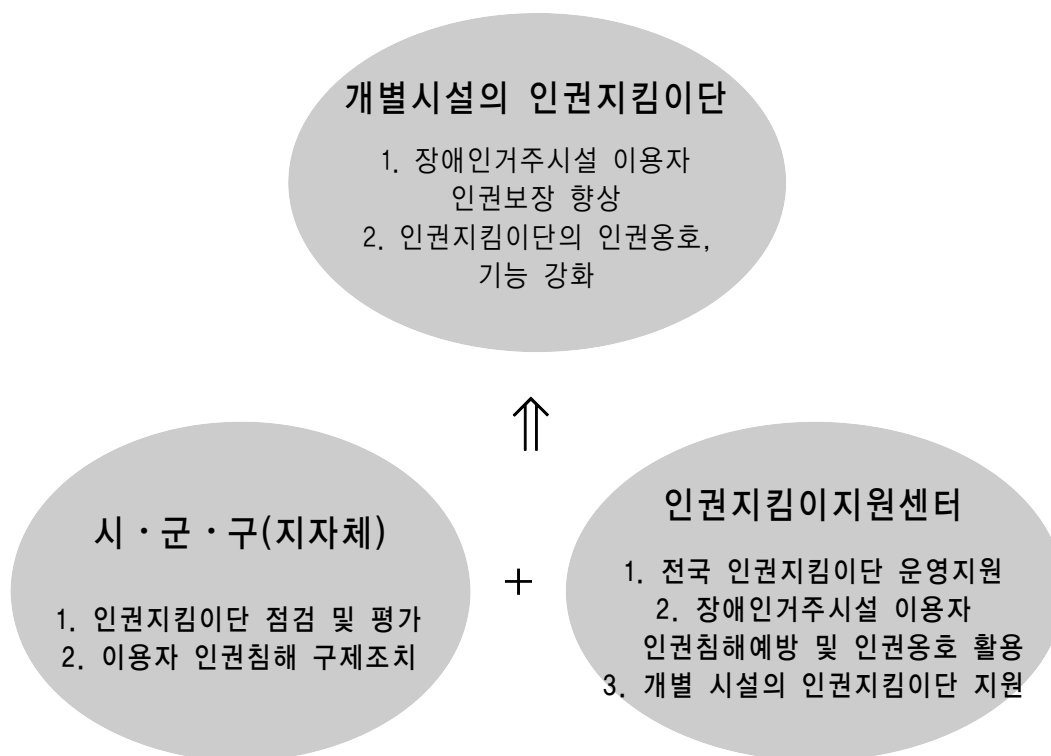
2)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개별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구성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함.
- 우수 인권지킴이단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인권지킴이단에 공유 및 보급함.
- 전국 인권지킴이단을 조직화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을 양성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함.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함.
- 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훈련, 직무 관련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진행함.

4) 시·군·구와의 역할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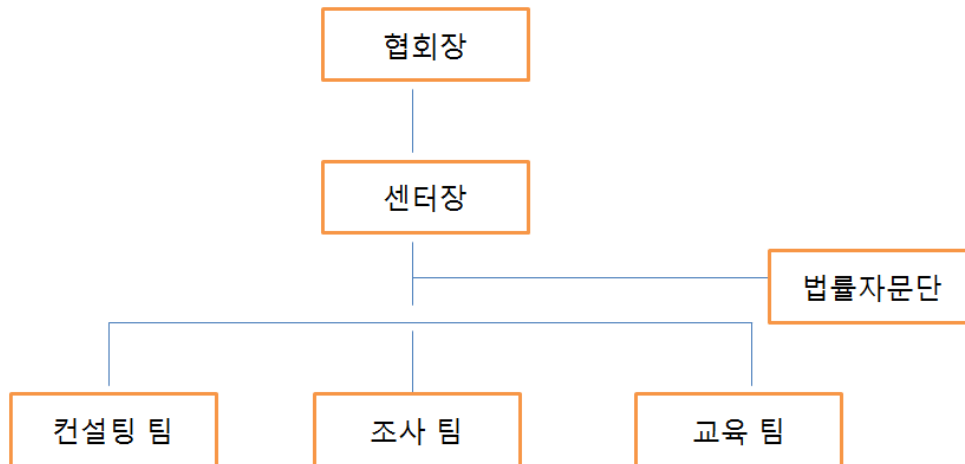


라.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구성 및 조직도

- 1) 구성 : 인권지킴이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중심으로 최소한 컨설팅 팀, 조사팀, 교육팀 이상 3개 팀제로 운영한다. 각 팀은 팀장 1인, 팀원 2인 총 3명으로 구성한다.
 - **컨설팅 팀** : 이용자 인권 침해 사례 유권 해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인권 지킴이단 운영 지원 및 조직화 등을 수행함.
 - **조사팀** :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상담 및 조사, 이후 구제 조치 지원, 시설 실태조사 및 조사원 파견 등을 수행함.
 - **교육팀**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관련 전문 강사 파견,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인권지킴이단 교육 등을 수행함.



2)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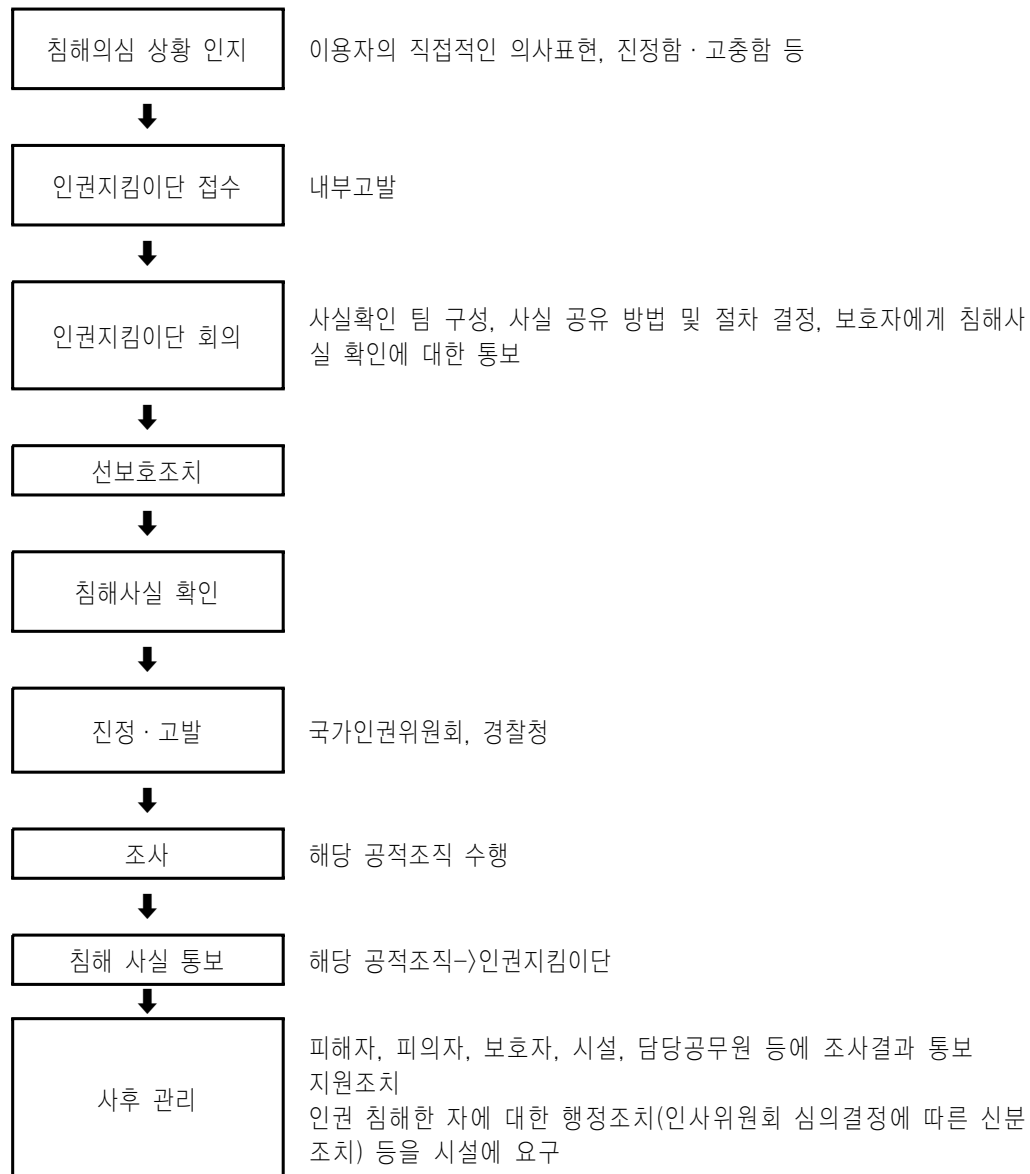


7. 기타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등은 직원과 이용자 등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시설장 재량의 휴가 등을 부여하여 담당 직원이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할 수도 있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인권지킴이단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별지 1호]

〈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절차 〉





[별지 2호]

진 술 서

진술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사고경위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자필서명 (인)</p>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자필로 작성할 것.

진술서 작성

- 사실조사 사안에 대한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동시 진술서 작성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내용을 가장 잘 파악한다고 추정되는(담당교사 등) 사람과 동석 후 진술에 따른 대리 기록
-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용 진술서 양식은 동일함.

[별지 3호]

침해사실 확인서

구 분	성 명		조사자	(인)
	일 시		장 소	
	내 용			
질의응답 내 용	1. 질의			
	1-1. 응답			
	2. 질의			
	2-1 응답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20 . . . 자필서명 (인) </div>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원칙에 의거한(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질의 및 응답 내용 기재



[별지 4호]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통보서

제 목						
수 신 자						
보 고 자	소속		직명		성명	(인)
보 고 일	20 . . . ()					
침해 사실 내 용						
비 고						

※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서술

[별지 5호]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보고서

조 사 명	「○○○씨 인권침해 사실조사」			
조사목적				
사건개요				
조사기간				
조사위원				
세부내용	구 분	날 짜	세부 내용	진행자
	최초 사건 제보			
	사건 파악 및 조사팀 구성			
	사실조사 계획보고 및 진행통보			
	피의자 진술서 확보			
	피해자 진술서확보			
	목격자 진술서 확보			
	조사자료 정리			
	인권침해사실 판단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기관장, 보호자)			
	인사위원회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회의 진행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접수			
위원회 측 심의결과				

[별지 6호]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	년	월	일	시	분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③ 모르고 있다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누구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4

소방시설 등 안전설치 관련



1. 배경 및 목적

-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수해, 폭설,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누출, 전기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를 도모하고
- － 긴급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시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기본사항

- 방화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 시설에서는 방화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내 비상연락망 유지 및 자위 소방대 조직 등 방화관리를 위한 **방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
 - － 아울러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 사단법인한국소방안전협회
(연락처 : 02-2671-9076, 홈페이지 : www.kfsa.or.kr)
- 방염시설 설비
 - － 시설 내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해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튼, 카페트, 종이류를 제외한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 할 것
-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소방시설 및 방염시설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은 우선 반영 예정

3. 적용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 ※ 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 내 단독,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에 따라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소방시설 및 안전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4. 유형별 점검사항

- 소방시설 점검
 - 시설은 소화시설(소화기, 자동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피난시설(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 등), 경보설비(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의 작동여부 및 비상구(복도, 계단, 경사로 등)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
-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 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 취사), 가연성 가스시설(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
- 시설 노후화 점검
 - 시설 노후화에 따른 벽체 균열, 파손 및 용벽, 지지대와 같은 시설안전과 직접 관련있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



5. 화재 발생시 조치사항

- 초동대응 철저
 -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하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 신속한 초동대응을 취할 것
- 대피요령
 - 화재발생 시 종사자들은 질서있게 이용장애인의 대피를 유도하고, 대피 유도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큰소리를 외치는 행동은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것
 -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들 방지하기 위해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되,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시,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고 이 경우 이용 장애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6.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만연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기록할 것
- 상시 연락체계유지
 - 상황발생시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의 보고조치, 시설 내 연락체제 등을 마련할 것

5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1. 배경 및 목적

- 매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통계자료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제고

2. 활용범위

- 기본 시설 현황을 통한 공식 통계자료 발간(매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 국정감사, 의원요구자료 등 각종 외부기관 요청자료
- 시설 현황의 추계 및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 국민 대상 시설현황 정보 안내 등

3. 통계자료 작성요령

- 일 정
 - 연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시·도로 시설 통계자료 요청('14.1.)
 - 시·도→시·군·구로 즉시 통계자료 요청 및 작성('14.1.)
 - 요청 통계자료 취합완료('14.2월말)
 - 취합 통계자료 정리 및 검토('14.3.)
 - 통계자료 공식통보('14.3.)
- 요청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각종현황자료(시설유형, 소재지, 연락처, 법인유무,



이용 장애인 정·현원, 장애유형, 연령, 성별, 입·퇴소 현황, 종사자 정·현원, 직위, 직급, 자격증 현황 등)

* 요청양식은 복지부에서 통보

4. 행정사항

- 연초 복지부 통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전년도 말 기준** 관내 시설현황을 신속히 조사·작성하고,
 - － 특히,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 후 복지부로 보고할 것
- * 매년도 통계자료 취합 시 일부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 자료를 단순 취합하여 요청양식상 각종 통계 합이 틀리거나 일부자료가 누락된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복지부로 보고하는 사례가 많음
- 시·군·구청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정보제공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와 설문조사 기능을 적극 참조
- 자료작성의 기본주체인 시·군·구는 관내 시설의 현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엄격히 조사·파악하여 당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 － 당해 자료는 복지부 취합 후 **국·내외 기관에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CHAPTER 0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사업

1.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 1-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미충족시설) 및 미신고시설 관리
2.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
6.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



1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1. 목적 및 기능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함

2. 관련법령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33조의2 부터 제33조의5, 제40조, 제42조,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19조), 201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 내, 지방교부세법(제3조, 분권교부세, 제4조제2항제3호) 및 동 지침을 참고하되, 필요할 경우 지자체별 자체 안내서를 정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의 종류(중증 및 영유아 포함)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
 -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 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유형별 거주시설
 - ①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④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
· 요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
사회생활 ·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 시설 이용자가 시설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4. 기본 방침

○ 시설 운영

- 시설장 및 전 직원은 이용 장애인의 보호, 재활 및 사회복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이용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의 부당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입소 또는 통원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인도주
의적 원칙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비 지원

- 시설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으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 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지역별 이용자의 서비스 수요, 시설의
운영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한다.
- 지방비는 지방비부담조서, 자부담은 시설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다.

*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특정수요)에서 지원되고 있음.

- 시설 개방 운영
 - 시설장은 이용 장애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재가 장애인에게 시설 내의 재활 및 요양에 필요한 공간 및 설비 등을 활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 이 때 필요한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와 시설이용에 따른 세부사항 및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정할 수 있다.
- 설치 기준
 -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 설치 시 지역사회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5. 운영 추진 방향

- 시설 서비스 수요·공급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시설서비스 수요(서비스 신청자)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서비스 공급(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 * 지역 내 입소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입소 보호조치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선택과 참여, 자기결정, 사생활보호 등을 지향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동 기준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 기준’에 따라 개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실종 장애인 신고의무 이행 및 무연고 장애인 신상카드 작성 제출
 - 2014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실종아동보호”를 참고할 것(부록참조)



5-1.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시·도내 거주시설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 시설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별표1]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시·도별로 추가 또는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촉탁의사는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제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 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 : 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원장 포함)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뜻함

* “야간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 중 22: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뜻함

* 산정식은 연장, 야간근로 동일하게 시간당(통상임금×1/209×1.5)로 함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마련〉

-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시설에서는 유급휴가의 잔여일시를 휴가소멸일 기준 6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멸일 기준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월차 휴가에 대해서 근로휴가소멸일 직후 미 사용일수 만큼의 통상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 참조

- 원장·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생활지도원의 경우 종사자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야간 및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시군구 허가를 받아 시간외 수당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이용 장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병·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과 퇴직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되,
 - － 시설에서 직접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과 법인 지원 인건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 사용자부담금 중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경우, 시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제 보험료율에 맞추어 지원한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 퇴직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미달할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5-2. 관리운영비 지원



-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2]에 따라 지원하되,
 - － 이를 성질별로 이용장애인 보호비, 시설관리비, 각종 재활사업비 및 직원 교육·훈련여비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통합 운영한다.
- 관리운영비는 성질별로 [별표 3]의 예시를 참고하여 집행하되,
 - － 각 항목별로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6.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 － 이용 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인연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 금전이라 함은 장애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 －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이용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예시)
 - － 수입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결연후원금	개별, 기업, 단체 등의 후원금
급 여	일반취업, 보호작업 등의 수입
위로금	특별위로금, 위문비 등
사회보장비	정부의 장애수당 등
기 타	수입이자, 원가정지원금 등

－ 지출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여가생활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생활	버스카드충전, 사회적응비 등
신앙생활	헌금, 시주 등
저 축	정기적금 펀드 등
의료생활	개인의 재활치료 및 질병으로 인한 지출
건강생활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지출
교육생활	교육적 목적에 지출되는 비용(컴퓨터교재 등)
피복구입	개인의 피복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류, 신발 등)
경 조 비	원가족 경조사비, 친구생일, 결혼식 등

○ 금전관리의 지원 원칙

- － 이용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별표4]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애인의 금전 관리 지원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별표5]를 작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함

* 개인의 금전관리이므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은 불필요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이용장애인의 금전관리 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년1회 보고하여야 함

※ 이용장애인 사망 시 재산 처분 절차

- 시설에서 사망한 이용장애인이 무연고인 경우 민법 ‘제5편 제1장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소유 금전을 처분할 수 있음
 -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에 의거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 함
 -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 공고를 실시한지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함. 공고 기간은 2월 이상임.

* 유증[遺贈]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에 따라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함. 공고 기간은 1년 이상임.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라 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자가 없을 경우 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함.
-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라 1057조의2에 의해 분여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 관련 민법 조문 참조 [별표6]

7.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 및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장애인대상성범죄의신고)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부칙 〈법률제11240호, 2012.1.26〉)

제3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8.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평가결과 우수 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 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원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50인 이상인 시설
간 호 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50인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30인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중증·아동장애인 30인이상 시설당 1명 (실비거주시설 포함)
※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	



【별표 2】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단위 : 개소/천원/년)

시설종류	2014년도		
	지원구분	지원단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시설
장애인거주 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이용장애인 수 × 2,029천원	42,002천원
	이용장애인수 가중지원	—	629천원

* 지원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3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

【별표 3】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TV,냉장고 등 가전용품, 생활실품품 등 포함)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페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페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송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들 등 지역 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실습재료비 등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 관리운영비 지원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별표 4】

위 임 장

<p>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p> <p>금전의 관리에 대해 그 권한을 위임함.</p>	
<p>위 임 인</p>	<p>수 임 인</p>
<p>○ 성 명 : (인)</p> <p>○ 입소자와의 관계 :</p> <p>○ 생 년 월 일 :</p> <p>○ 주 소 :</p> <p>○ 연락처 :</p>	<p>○ 성 명 : (인)</p> <p>○ 입소자와의 관계 :</p> <p>○ 생 년 월 일 :</p> <p>○ 주 소 :</p> <p>○ 연락처 :</p>
<p>2014년 월 일</p> <p>사회복지법인 ○○○○○시설 ○○○ 원장 귀중</p>	

【별표 5】

금 전 출 납 부

소 유 자 : ○ ○ ○

작 성 자 : ○ ○ ○

연월일		통장번호	명세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별표 6】

민법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개정 1990.1.13>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 있는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1-1

장애인 개인운영시설(미충족시설) 및 미신고시설 관리

1.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시설 전환

가. 대 상

- 개인운영신고시설(미충족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완화된 신고요건을 적용하여 시·군·구에 신고를 완료한 시설(한시적시설)
- *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충족하여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엄격히 구분
-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나. 법정시설 전환추진

-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완화기준 적용 유예기간 종료
 - '06년도까지 신고한 시설 및 '07년도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신고·수리한 시설(개인운영신고시
설)에 대한 시설규모 및 종사자 등 **완화된 기준적용 유예기간이
2009.12.31. 종료됨**
- 개인운영신고시설(미충족시설)은 조속히 법정신고 시설로 전환되어야 함
 - 관할 시·도 및 시·군·구는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 시설별 법
정시설전환계획을 수립할 것
 -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에 따른 종사자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방안 및 지원시기 확정

- 법정시설 전환 시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준수,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보호 방안(‘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을 포함한 시설별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계획 등 포함
- 시설별 법정시설 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법정시설 전환 지원 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및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실시
- * 시설폐쇄시 입소장애인은 타 시설로 전원, 귀가 등 적합한 보호조치 실시
-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장애인 추가 입소 중지
-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시 시설설치 신고서 접수·수리
 - 시설이용 장애인의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전환시설의 종류와 유형 구분
 - 시설별로 이용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실비거주시설로의 전환도 검토
- * 시군구청장은 개인운영신고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생활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을 심사
- 법정시설로 전환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시·군·구 주무관청이 지역 내 시설서비스 수요·공급 정책에 따라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임·대행(입소의뢰)할 경우 시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운영비(종사자인건비+관리운영비)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
- *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장애인은 이미 발생된 시설서비스 수요자이므로 시군구청장의 보호조치,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
- * 시·군·구 주무관청은 지역 내 시설서비스 수요가 있을 경우 그 서비스 공급(시설확충)계획 수립 시 시설운영(설치)자를 시·군·구립시설, 법인운영시설 또는 개인운영시설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새로 확충(설치)된 시설에 시설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입소의뢰서를 송부(보호조치 결정 및 서비스 위탁)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를 지원함



-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인권보호상담제도’ 실시
 - － 미전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분야 교수·장애인단체 전문가로 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인권보호상담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점검·관리
- 10인 이하 시설에 대한 직원 배치기준 적용
 - －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의 중증장애인 내에서 직접서비스 담당 직원이 시설장 등 타 직종을 겸하도록 할 수 있음
- * 이용장애인 10인 시설 예시(중증장애인보호기준) : $10인 \div 4.7명 \times 2인 = 4인$

2.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추진

- 사회복지(시설)서비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국가·지자체 책임주의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므로 시설 운영(설치)자의 임의적인 장애인보호 및 시설운영은 불법임
 - － 법률적 근거(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② 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시설보호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게 함)
- ③ 보호의 결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 미신고시설 설치 운영자가 시설이용(입소)희망 장애인을 모집(유인)하거나 자체적인 입소결정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시설폐쇄 및 근절 조치
-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시설장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 활동 등 관리 강화

-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개인금전)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
 - 시설조사는 가능한 한 장애인인권보호관련단체 등과 **민·관합동**으로 실시
 -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등 진술 확인시 전문상담을 위해 거주장애인을 타 시설 등에 분리 조치(긴급보호)
 - *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인력 지원 협조하에 실시
- 시설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
- 미신고시설 입구 등에 설치한 불법, 허위간판 완전제거(광고물관리부서)
 - * 지역사회에 신고시설 혼란 및 미신고 시설 후원, 봉사 등 예방 효과
-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등을 반사회보 등 지역 언론 매체에 보도요청, 기고 등 활동 강화
 - * 미신고시설의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용 차단
- 시설이용 장애인 전원조치
 - 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미 시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타 시설로 전원조치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을 경우 귀가 등 처리
 - 전원조치(긴급보호)에 필요한 시·군·구내의 시설 자릿수가 부족할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간 전원조치(대상 시군구 및 시도는 이에 적극 협조)
- 미신고시설 중 법정시설 전환 가능 시 최단 시일 내에 추진
- 지자체별로 미신고시설 파악, 폐쇄조치 등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 마련
 - 지역 내 읍·면·동의 수급자 담당 공무원 등 주기적 순찰 요원이 미신고 시설 발견 시 시·군·구에 보고토록 하고 즉시 조치하는 체계 구축



3. 기타 행정사항

- 관내 미신고 시설 발생 시 시설현황 등을 파악 후, 복지부로 통보하고
즉시 자체 전원 조치계획 등을 통해 해당시설의 폐쇄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 요망
- 관내 개인운영신고시설(조건부시설) 및 미신고시설의 현황은 분기별 관리
현황을 복지부로 통보할 것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시설 설치방해금지 의무)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설치 신고 수리와 신고된 시설에 시설이용 장애인의 입소의뢰는 각각 개별사안으로 판단 결정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2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 사업 목적

- 가정내 수발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

2. 사업의 종류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 － 지역 내의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수요(임소)대비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신축·증축)및 기존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개보수), 재활훈련·물리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보강 사업 등
- 단년도 사업(국고보조율 50%)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재활상담등의조치), 제57조(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2014년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 신청기한 : 2014. 3. 31.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2014년도 국고보조금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신청

나.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2013년도 사업비 정산

-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로 이행되는 건축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건축허가 등 선행 추진도 가능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 사업비와 정산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정산
 - 정산대상 : '13년 이전 이월사업 및 2013년 기능보강 사업
 - 제출기한 : 2013. 2. 28.까지 정산결과 보고
 - * 1월 중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 정산관련 안내 별도시행

다. 2015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 : 추후 별도 통보
- 국고보조율 : 50%
- 사업신청 경로 : 보조사업자(법인) → 시·군·구 → 시·도 → 복지부
 - * 다음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안내 별도시행



- 신축시설 사업비 신청 및 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시설 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확충)시설 수 산정
 - 거주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신축사업(1개소이상)을 2015년도 예산계상 신청에 필히 신청토록 함
 - *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이용권 보장과 전국적인 거주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시·군·구별로 거주시설(1개소이상) 필요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 거주시설 설치·운영 실적을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 ※ 감사원에서 '지역별 복지시설 수급·조정 미흡' 개선 처분 요구(복지사업현장 실태종합점검 감사결과 ; '12.5.17.~6.22.)
 - * 시설 확충시 시·군·구에서 시설 건립·운영 방법을 판단 결정
- ① 사회복지법인에 신축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 법인시설로 운영
- ② 시·군·구립 시설로 직접 설치하고, 법인에 위탁(대행) 운영
- ③ 법정기준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개인운영시설로 하여금 시설서비스 공급을 대행(시설 신축비 국고보조금 미지원)
- 신축유형
 - 사회복지법인에 신축비 국고보조금 지원 설치, 법인시설로 운영
 - 시·군·구립 시설로 설치하고, 법인에 위탁 운영
 - * 시·군·구청장은 자체 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신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음(예산계상 신청 후에 신축 보조사업자 결정 가능)

라. 20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복지부→지자체)
 - 10월 15일 까지 보조금 예산을 통보(예비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통보)

- 신축(개축)사업의 연도내 완공을 위해 10월 보조금예산 예비통지 시 사업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고, 동시에 지자체는 건축허가 등 공사 선행절차를 추진토록 함 (*조기착공으로 공사기간 연장 효과)
- 지자체는 확정통보 명세와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5.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도 단위의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수행할 것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시설확충(서비스공급)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할 것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일반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보조금은 상기 지원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관할 지자체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추진을 위하여 기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정원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것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예산계상신청 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6. 사업 지원 기준

- 신축 사업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1개소/30명/연면적900㎡/단가1,270천원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1개소/10인/연면적300㎡/단가 1,270천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1개소/4인/연면적120㎡/단가 1,270천원/㎡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 기존 시설의 동일지번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증·개축 사업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하되, 기존 시설의 정원 증가에 따른 증축비 지원은 불가 함
 - 단, 지역 내의 시설서비스 수·급 조절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신청 가능(*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계획 제출)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개소당 지원단가 : 신축사업 수준으로 지원
- 개보수 사업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장비보강 :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

7.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설계비포함)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의 부지는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할 것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별지제3호서식)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검토의견서(별지제6호서식)를 첨부 함.

* 국고보조금 교부는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복지부 제출은 생략할 것

-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임차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항은 불가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세부목록은 관할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복지부에 제출 불요)

(다)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지역사회 아파트 등의 건물 매입 지원



- 사업계획서에는 건물 활용방안, 건물규모, 이용인원,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 포함

- (라)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시설운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복지부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하고 복지부 제출 생략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가)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 (나)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

- 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영되도록 설계
-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2) 장비보강사업

- 신청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시행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 청구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금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사업비의 연도내 집행을 제고 방안

- 확정통보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 분기 내에 신속하게 확보
- 특히, 신축(개축)사업은 연도내 완공을 위해 10월 예비통지시 통보 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건축허가 등 공사 선행절차를 적극 지원 (연도내 집행을 제고)
- * 사업비의 집행을 제고를 위해서는 신축사업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장조기착공이 필수적임 (전년도 10월부터 착공)
- *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주시설 국고보조금의 연도내 집행율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 설계·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것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출장보고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사업량의 변경
 - 공기연장 (시·군·구 승인 사항)
 - 낙찰차액 활용사업
-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권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권한, 보조금의 반환 처분 권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교부결정의취소등), 제30조(법령위반등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 제31조(보조금의반환)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중앙관서의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38조(사무의위임)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바는 없음.
- * 지자체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처분 등을 할 경우 개별 사안별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 필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등)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보조사업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법인·시설운영자)에 대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지자체의 조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13년 상반기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을 7.15일 까지 제출하고 동 보조사업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8.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 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련 국·과장의 책임 하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 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예산계상신청 시 또는 예비통지 전까지 관할 지자체는 신청법인이 동일사업에 대해 복지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등을 통해 중복지원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 중복 신청건이 발견될 경우 즉시 당해사항을 복지부로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업의 계상신청을 제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의무화되므로 관할 지자체는 예산계상신청시 소방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
- 개별시설의 소규모화는 지역내의 시설서비스 수요·공급 범위, 복지서비스 욕구 변화를 감안하여 연차별·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함
 - 시설 소규모화를 자산대체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는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 함.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14.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결 등 ○직인 날인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신·증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공사비 내역서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유무 ○건물용도	유적정□ □ 무부적정□ □
			○유무 ○건물구조	유적정□ □ 무부적정□ □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 부적정□ □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재원조달방법	적정□ □ 부적정□ □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 부적정□ □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 부적정□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적정□ □ 무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장비보강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부지 확보방안	적정□ □ 부적정□ □
	기술직공무원, 감리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적정□ □ 무부적정□ □ 유적정□ □ 무부적정□ □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4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설명 : (☎ - -)
- 소재지 :
- 시설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13. . . ~ . . . (년 개월)
- 사업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방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부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시 설 장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설명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13.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	비고
계				
거실 기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목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업규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거실 기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증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13.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규모(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증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13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W 원)

기부목적 :

2014 . . .

기부자주소

생년월일

성명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복지시설 국조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설명 : (☎ - -)
- 소재지 :
- 시설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공무원)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 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일시보호(쉼터)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근거법령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령과 관련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규정

4. 설치 기준

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설치 기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5. 사업추진 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에 준한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사업수행 인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

- 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조리원 : 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
- 기타 종사자(시설장 포함) :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
 - * '연장근로' 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뜻함
 - * '야간근로' 라 함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간중 22: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뜻함
 - * 산정식은 연장 야간근로 동일하게 시간당통상임금×1/209×1.5)로함

(2) 관리운영비

- 지자체가 보조하는 관리운영비는 [별표1]에 따라 지원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단기거주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관리직	1명	* 관리직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4명	*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기준
조리직	1인	* 1인 배치

*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부설로 운영하는 단기거주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다.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라. 이용대상과 정원

-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 정원은 상시 이용자와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 24시간 운영
 - * 명절, 휴가 등 시설 휴무일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 이용기간 : 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6. 수행사업

- 개별서비스지원
 - 이용자 개인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지원을 계획하여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 시키도록 한다.
-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 정서안정·여가 지원
 -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 되도록 한다.
- 기타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한다.



【별표 1】

2014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 기준

(단위 : 개소/년/인)

시설종류	2014년도		비 고
	지원액(천원)	지원단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0,290	1인당 2,029천원	10인기준
	* 최소 10인 이상으로 운영하되, 30인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 지원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4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

【별표 2】

2014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TV,냉장고 등 가전용품, 생활실품품 등 포함)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페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페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들 등 지역 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실습재료비 등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 관리운영비 지원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 목 적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그룹홈은 이용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이용자 개개인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 그룹홈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음

3. 추진방향

가.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 내의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에 준한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겸임하는 경우 제외)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은 월64시간, 연768시간 기준으로 한다.
- * 휴일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 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의 승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인력지원기준

- 시설 당 사회재활 교사 1인을 배치한다.
- 관할 지자체는 상기 “인력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용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관리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자체가 보조하는 관리운영비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별표2]를 준용하되, 시설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라. 입주정원

- 입주정원은 4인으로 한다.

마. 각종 장부의 비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 등에 따른다.

4. 그룹홈 설치 기준

가. 그룹홈의 설치 기준

- 그룹홈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그룹홈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비(주택) 지원

-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자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관한 예산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그룹홈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및 임차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5. 입주대상자 선정

가. 입주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나. 입주신청 및 선정 등

-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 이용자 적합성 검토는 운영자가 하되, 가족의 구성·경제력·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초기 접수표를 작성한다.
- 이용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입주기간은 입주계약서를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 － 전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 － 계약사항에 따른 생활비를 일정기간 연체하였을 경우
 - － 기타 운영자가 이용자의 공동생활가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다. 이용자의 생활

- 이용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직장 교육기관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입주 초기 접수표

접 수 일	년	월	일	작성자			
1. 성명	(한글)		(한자)				
2.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3. 장애인등록	예 : 정신지체 () 급						
4. 연령	()세						
5. 취업 (해당자만)	직장명 : (업무내용 :)						
6. 생활비 납부	생활비 부담 방법 :		7.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8. 건강	1) 건강진단결과 : 2) 일반적 질병 :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 :)						
제 목	세 부 내 용		평 점				
			1	2	3	4	5
9. 개인 생활	1) 기본생활 자립정도 (식사, 용변, 몸치장, 옷차림, 정리정돈 등)						
	2) 대인관계 (친구, 어른, 단체)						
10. 공동 생활	1) 가정생활 (가족, 친척 관계)						
	2) 이웃 생활 (동네, 이웃관계, 공공시설(공원, 극장, 백화점 등) 적응						
	3) 공동생활(은행, 학교, 동사무소, 교통,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11. 경제 생활	1) 물건의 구입 (상점, 슈퍼, 문구점, 백화점, 정육점, 약국 등)						
	2) 소비와 절약 (절약, 저축, 화폐단위 등)						
12. 직업 생활	1) 직업생활의 기본적 이해 태도 (직업의 이해, 적성, 직업 생활태도, 근무자세, 직장예절 등)						
	2) 직업생활 경험 기술						
13. 행동 적응	1) 주의집중, 지시반응 (단순, 복합, 연속적 행동, 다양한 언어)						
	2) 부적응 행동(충동, 자학, 이상습관, 폭력, 반항, 도피, 좌절, 도벽, 반사회적 행동 등)						
	3) 의지력 (자신감, 역할에 대한 충실도, 만족감 등)						
14. 부모의 태도	1) 부모로서의 지시에 대한 인식 정도						
	2) 운영주체의 방침이나 지시에 대한 반응정도						
	3) 계약내용에 대한 부모의 자세						
총 점							

※ 평점 : 1. 아주 못하는 편, 2. 잘못하는 편, 3. 보통, 4. 잘하는 편, 5. 아주 잘하는 편으로 평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 계약서(예시)

입주자 성명 :
 생년월일 :
 장애유형 및 등급 :

위의 사람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에 입주하면서 ○○○시설의
 장을 ‘갑’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

다 음

1. ‘갑’은 생활하는 ‘을’의 사회적 자립과 개인의 존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함
2. ‘갑’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함
3. ‘을’은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함
4. ‘을’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음.
5. ‘을’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6. ‘을’은 다음과 같이 생활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1) ① 주·부식,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일부
 - ② 이·미용비, 피복비, 교통비, 의료비, 문화오락비 등 개인용돈
 - 2) 입주자 부담금 중 전항의 ①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월 10일까지 이용시설에 납부
 - 3) 입주자 부담금의 산정은 1년 단위(회계년도 기준)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
 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음.
 - 4) ○○년도 월 부담금은 ○○원으로 함.



7. 입주자의 수입금은 입주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되, 재정 관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재활교사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8. 입주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거가 가능함
 - 1) 본인이나 가족이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 2)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 3) 생활비를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 4) 기타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그룹홈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련 서류첨부)
9.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계속 유효
10. 계약기간중이라도 ‘갑’, ‘을’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단, 2개월 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년 월 일

(갑) 시설명 :

시설장 : (인)

시설주소 :

(을) 입주자 ① 성 명 : (인)

② 생년월일 :

③ 장애유형 및 등급 :

④ 주 소 :

보호자 ① 성 명 : (인)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④ 입주자와의 관계 :

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이용료 지원

1. 실비입소 제도

○ 개념

- 이용 장애인이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
- * 개인별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시설 입소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적합성이 판정된 경우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부담토록 하고 시설 서비스 이용 조치

○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 개별 시설의 정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실비입소 수요에 의거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입소절차

- 유형별 거주시설의 절차를 따르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



용 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 당사자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2. 실비 입소 비용

○ 개념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와 시설관리비, 직원여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비용

○ 수납한도액

가) 거주시설

- 실비로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335,000원(아래 산출근거 참조)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335,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수납할 수 있다.

○ 국가통계포털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른 ' 2013. 3/4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근거로 산출

- [식료품 및 비주류(374,600원)+의류 및 신발(135,308원)+주거 및 수도 광열비(229,309원)+음식숙박비(345,461원)]÷ 평균 가구원수(3.2명)

∴ 1,084,678원 ÷ 3.2 ≒ 334,777원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다.

나) 실비거주시설

- 관할 지자체는 무료시설 입소장애인 1인당 연간 비용의 80%이상을 지원하되 시설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보조하며, 실비 장애인시설의

-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구분하여 지원
- 월 비용 수납한도액 : 605,000원
- * 2013년 운영비 지원수준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1.3% 감안

3.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실시

- 지원대상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이용 장애인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20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단, 2014년 3월에 2013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까지 2013년 3/4분기 소득기준을 잠정 적용

〈잠정적용 소득기준 ; 2013년도 3/4분기〉

- 1인당 월평균소득액 1,410천원(4,737천원 / 3.36명, 통계청)
- *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및 평균 가구원수는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www.kosis.kr>)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2인 이상) 참고



○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7만원의 입소료를 지원

○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 ①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 발급)
 - ③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 : 시·군·구청장

○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구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상반기내 해당사업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한 매칭 완료 요망

* 1월~4월(매달 초 확정내시 금액의 1/4 평균액을 교부신청)

- 지급원칙 : 시·군·구는 지원대상시설에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시기 조정(예시 : 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당일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제출한 입소이용료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입소일 등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0,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80,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70,000원 인정하여 정산
- 사업정산보고
 - 2014년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거주시설 또는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토록 함*
 -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대상 장애인에게 적극 홍보할 것(홈페이지, 서신 등 활용)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관리
 - * 지원대상자, 지급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6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



1. 목 적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 －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 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시설 퇴소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제1항 제3호,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

3. 운영방향

-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반노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체험홈을 운영하여야 함
 - －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거주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4. 체험홈의 설치

1) 설치형태

- 체험홈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 및 임차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 시·도, 시·군·구가 아파트, 일반주택 등 일정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주거공간 등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할 수 있음

2) 설치기준

- 체험홈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 내에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장애인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체험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지로서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체험홈의 주거 면적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참고
(주택법에 따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4-173호 기준 참조)

- | | |
|---------------------------------|-------------------------------|
| • 1인 침실 : 5.76㎡ | • 주침실(2인생활, 옷장 등 구비) : 10.80㎡ |
| • 2인 침실 : 8.10㎡ | • 부엌(4인가구) : 3.0㎡ |
| • 기타 면적(화장실, 수납공간, 현관) : 11.92㎡ | |

- 체험홈은 집단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그 입지조건 및 입주자의



장애 및 정도에 따라,

-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등 부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설치지원

- 시·도 및 시·군·구는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체험홈 운영을 위한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구입비 또는 임차비, 시설 개·보수, 체험홈 운영을 위한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차비를 지원할 경우 전세권 설정에 있어 시·군·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에 조력하여야 하며, 물가인상 요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지원액 조정을 통하여 체험홈의 인해 임차비 인상 등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설치신청 절차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하는 체험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이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기능보강사업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체험홈 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거나 직접 수요를 조사·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체험홈 설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체험홈 설치계획서(예시) [별표1] 참조

- 보건복지부는 신청 시설 가운데,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시급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시·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시설을 결정한다.

5. 체험홈 운영

1) 체험홈 이용자 선발

-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이용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당사자에게 더욱 나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체험홈에서의 생활기회를 부여한다.
- － 체험홈 운영자는 체험홈 이용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가칭)체험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다.
- － 체험홈 운영자는 동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체험홈 이용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 － 동 위원회는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입·퇴소판정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 체험홈 이용대상자 기본정보 및 기초심사표(예시) [별표2]
- 체험홈 이용자로 선발되면 시설장은 각 개별 입주자와 입주 계약서를 작성한다.
- * 체험홈 이용계약서 (예시) [별표3]

2) 이용정원

- 체험홈에 입주할 수 있는 정원은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 완료한 체험홈 정원은 예외로 함

3) 체험홈 담당 직원

- 장애인거주 시설장은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신규 직원 인건비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담당 직원은 체험홈의 성격, 체험홈 이용자의 장애 종류, 특성 및 정도를 감안하여 상주지원, 방문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생활 지원

- 체험홈 거주자는 36개월(3년) 범위 내에서 체험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거주자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필요시 1년을 단위로 추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은 체험홈 담당직원의 소견을 들어 체험홈 거주자를 장애인 거주시설로 복귀시킬 수 있다.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 체험홈 거주자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체험홈 거주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위해가 되는 등 (가칭) 체험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체험홈 담당 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 아울러 담당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시 필요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체험홈 거주자는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개인 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활동 등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 하에 제정한 자체 규정(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운영비

- 운영인력 및 운영경비는 해당 거주시설의 자체 조정 계획에 의해 현재 지원하는 생계비와 운영비 및 후원금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 체험홈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 － 체험홈에서는 체험홈 입주 인원을 고려한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체험홈을 1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각 체험홈 별 세부예산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기본적인 운영 경비 외, 입주자 공동생활 및 사회활동·참여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할 경우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입주자간 각출)할 수 있다.



【별표 1】

지역사회 자립 체험홈 설치 계획서(예시)

1. 시설현황

- 시설명 : (대표자 :)
- 시설소재지 : (전 화 :)
- 입소자 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14 . . 현재)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 필요성

4. 경험적 근거

(사례관리 결과, 장애인의 자립욕구 등)

5. 주택 및 집기비품 등 구입 계획

- 설치 개소수
- 구입 예산
 - 구입 단가(1개소당)
 - 구입 총예산
 - 예산조달 계획(*예산 전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생략)
- 구입주택 형태
- 설치지역 및 지역 선정 시 고려 사항
 - 설치지역
 - 지역선정 시 고려사항

6. 운영비 및 지원인력 조정 운영계획

- 운영비 조정 운영 계획
- 지원인력 조정 운영 계획

7. 체험홈 이용자 선발계획

- 체험홈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 선발 기준 및 절차
 - － 선발 기준(* 관련 서식 포함)
 - － 선발 절차

8. 체험홈 운영 시 프로그램

9. 추진 일정

10. 기타 사항

【별표 2】

체험홈 이용 대상자 기본정보 및 기초심사표 (예시)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관계 :)

1. 성 명	(한글)	(성별 :)			
2.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3. 연구유무	*연구/무연구		
4. 장애명	지적장애 () 급 (중복장애 : / 급)				
5. 연 령	만()세 (생년월일 : 년 월 일)				
6. 현근무처	소속 : (업무내용 :)				
7. 금전현황	1) 월간수입(월평균) : 원 - 장 애 수 당 : 원 - 결 연 후 원 금 : 원(월평균) - 원가정 지원금 : 원(월평균) - 기타 : 원(월평균) 2) 금전보유현황 : 원 (2011. . . 기준)		8.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수급자/실비	
9. 건 강	1) 현 질환여부(질병명) : 2) 약복용여부(해당자만) : 3) 기타 건강 관련 특이사항 :				
제 목	세 부 내 용		2점	1점	0점
10. 개인 생활	1) 개인위생관리(세면, 면도, 샤워, 양치, 뒤처리 등)를 한다.				
	2) 날씨와 상황에 맞는 의복을 고르고 착용한다.				
11. 가정 생활	1) 자신에게 주어진 가사활동(청소, 식사, 빨래, 쓰레기 분출 등) 수행한다.				
	2) 규칙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다.				
12. 지역사회 이용	1)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2)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다.				
	3) 편의시설(마트, 경찰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3. 학습 능력	1) 학습(읽고 쓰기, 대중교통 이용방법, 전기제품 사용방법, 금전관리 등) 능력이 있다.				
14. 의사 소통	1)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다.				
	2) 가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한다.				
	3) 아픈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4) 기타 필요 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자신 알리기, 지원자의 이름·전화번호 알리기, 도움요청카드 사용 등)				
15. 직업 생활	1) 직장 생활의 중요성을 안다.				
	2) 주어진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다.				
16. 의 지	1) 생활 가운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2) 활동참여(직업생활, 여가활동 등)에 대한 의지가 있다.				
17. 대인 관계	1)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낸다.				
	2) 낯선 사람들과 적절하게 행동한다.				
	3)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종합	총 점 : 점 (만점 : 40점)				

※ 2점 :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 1점 : 도움이 있으면 할 수 있다 / 0점 : 할 수 없다.



단, ‘갑’, ‘을’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갑) 성 명 : 사회복지법인 ○○○ ○○○○○○원장 ○○○ 인
주 소 :

(을) 이용자 ① 성 명 : 인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보호자 ① 성 명 : 인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④ 이용자와의 관계 :

2014년 월 일

재계약일	확 인 자	재계약일	확 인 자

CHAPTER
04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운영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 장애인 복지관 운영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부터 제43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주간보호시설은 기능보강(임차료 지원) 지원 등을 통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법인 또는 타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회계는 별도 시설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한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시설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 사업수행 인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전 종사자(시설장 포함)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집행기준

-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은 【별표1】에 따라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성질별 관리운영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집행한다.

(2) 운영비 지원 시 고려사항

- 시군구의 관리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활사업비 및 재활보조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종사자 기준

- 공통사항
 - － 정부 인건비 지급 상한 : 시설장은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는 60세 이하이어야 함.
 - － 사업수행 인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2)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3명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인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복합 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인력배치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인력배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근로, 사회복지무요원 등 주간보호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의 교육 연수 출장 및 출산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 또는 대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및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행사업

-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을 배양
-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 등을 실시하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
-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활교육을 가르침.
- 기타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

5. 이용자 개발 및 선정

- 이용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
- 이용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 급자를 우선 배려
- 시설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 ※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정할 것
- 1개 보호시설 당 보호대상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6. 이용시간 및 기간

- 평 일 : 오전 9시0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00분부터 오전 12시까지
 - ※ 차량운행(송영) 시간은 별도로 함
 - ※ 보호자의 요청과 시설 운영규정 내에서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 (비용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별표 1】

201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 : 천원/년)

시설종류	2014년도		비 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14,000	인원가중지원은 이용 장애인 15인 이상인 시설에 적용
	인원 가중지원	116	

* 지원 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지원 기준임

* 2013년도 지원 단가에 3%수준 인상 적용



【별표 2】 201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 (TV,냉장고 등 가전용품, 생활실비품 등 포함)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페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페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 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9)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10)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수수료, 퇴직연금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들 등 지역 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작업치료 및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실습재료비 등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 관리운영비 지원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2

장애인 복지관 운영

1. 목 적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2. 기본방침

- 복지관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 하에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조치
- 복지관의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그 복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한으로 수행
-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 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등 장애인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 전·후 1주일을 ‘장애발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 주간’으로 정하여 지역주민, 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 복지관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지역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
- 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복지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 복지관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노력
- 복지관은 주말에 시설을 개방 또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취업장애인 등 주말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3. 운 영

- 정당한 사유없이 타 유형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 ※ 사안에 따라 종별(단종) 복지관에서는 특정 장애 유형의 서비스를 우선할 수 있음.
-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 극대화
- 재가복지사업 예산(중전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반드시 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1	상담 · 사례관리	사례발굴	- 사례대상자 발굴 및 상담 - 사례대상자 연계
		접수 및 사정	- 접수상담 - 각종진단 및 사정
		개입계획	- 개별지원계획 수립 및 의뢰, 연계 - 사례관리 계획수립(단순, 일반, 집중)
		개입	- 긴급대상자 위기사례관리 - 집중관리대상자 사례관리 - 직접서비스 제공 - 자원연계 및 서비스 중개 - 모니터링 및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
		지역회의	-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 지역사회 솔루션위원회
		기타	- 기타
2	기능강화 지원	운동 · 지각 향상	- 운동발달(물리치료) - 작업활동(작업치료) - 다감각촉진활동(심리안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 반응촉진치료 등) - 수중운동 - 감각통합활동
		의사소통 향상	- 언어활동(언어치료)
		학습능력 향상	- 특수교육
		사회적응력 향상	- 심리운동 - 특수체육 - 음악활동(음악치료) - 미술활동(미술치료) - 놀이활동(놀이치료)
		기타	- 기타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3	장애인 가족지원	상담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지원 전문상담 - 정보제공 - 가족교육
		가족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휴식지원 - 가족조력교실 -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 가족 역량강화지원(부모역할, 부부관계지원, 비장애 형제 지원, 부모모임 지원 등)
		양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돌봄지원 - 케어서비스(주간 및 단기보호) - 방과후 교실 - 방학 프로그램 -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운영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 결혼 주선 등
		기타	- 기타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상담 - 자조모임 육성 - 동아리활동 지원 - 주거서비스 - 이동지원서비스 -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권익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운동 - 권리침해 해소 - 인권옹호 - 법률적인 지원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출판·보급·대여, ARS운영, BBS운영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수화관련	- 수화교실 -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기타	- 기타
5	직업지원	직업상담 및 평가	- 직업상담 - 직업평가 - 구인 및 구직상담
		전환교육	전환교육 중등/고등 직업준비프로그램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 직업적응훈련 - 직업훈련 -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 현장훈련 - 취업 후 지도
		사업체 개발 및 관리	- 사업체 개발 - 사업체 관리
		기타	- 기타
6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지역유관기관 장애인복지서비스 자문 - 장애인서비스 개발 컨설팅
		지역의 사회통합환경 조성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 지역사회통합 환경 진단 및 계획수립
		주민조직 지원	- 주민조직체 형성 및 교육 - 지역행사 및 정보제공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 각종 지역위원회 활동 - 지역사회 장애인 중심기관 역할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활동, 관리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기타	- 기타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7	문화여가 지원	문화 및 스포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프로그램 - 문화여가 프로그램 - 문화예술인 및 스포츠선수 육성 -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 취미활동 지원
		정보접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교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8	사회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조 - 방문간호 - 방문목욕
		장애아동 재활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청능치료 - 미술·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재활서비스 - 장애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총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조직관리 - 각종위원회 운영 - 회계 및 문서관리 - 시설 및 차량관리 - 식당운영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조사연구사업 - 직원개발사업 - 실습지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제작 - 지역홍보 -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 견학안내

구분	대분류	중분류	주요사업 예시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 이용자 참여 - 고객만족사업 - 윤리경영
		기타	- 기타

○ 운영비

- 장애인복지관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 (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예산 집행 시에는 재가복지사업 운영비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함.

○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 장애인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산간벽지 등 농어촌 지역 등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해당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함.
- 종사인력은 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4. 관 리

○ 조직 및 직제

- 각 복지관은 지역의 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을 준용하여 편제
-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간부와 직원간 적정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획·운영지원 등 지원부서와



그 외 사업부서로 구분 운용

- 종전 장애인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속에 통합 운영(인사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와 분리하지 않음)
- 최소 3인의 인력을 확보하되 복지관의 총 정원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 【별표 1】 참조 〉

-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급),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 (2) 복지관은 관장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사무국장 밑에 종사자 정원 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6~8개 범위 내에서 각 팀을 운영하고, 복지관 부대프로그램 및 독립시설을 복지관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
- (3) 복지관의 팀은 지원부서로 기획·운영지원팀을 두고, 사업부서로 상담·사례지원팀, 기능향상지원팀, 가족지원팀, 권익옹호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문화지원팀, 사회서비스팀 등을 두며 팀장 1인 및 팀원 약간 명을 두되 필요시 정원규모 및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권익옹호지원팀과 사회서비스팀을 통합하여 ‘역량강화지원팀’으로, 가족지원팀과 문화지원팀을 통합하여 ‘가족·문화지원팀’으로 하는 등 당해 시설장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직제를 증감할 수 있음.(단,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 명칭 등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음)
- (4) 복지관의 인력은 지원 부서에는 최소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에 최대한 배치토록 노력
- (5) 복지관의 각 팀별 주요 업무

구분	팀명	주요업무
1	상담·사례지원팀	사례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기타
2	기능향상지원팀	운동·지각향상, 의사소통향상, 학습능력향상, 사회적응력향상, 기타
3	가족지원팀	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기타
4	권익옹호지원팀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 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화관련, 기타
5	직업지원팀	직업상담 및 평가, 전환교육,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사업체 개발 및 관리, 기타
6	지역연계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주민조직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기타
7	문화지원팀	문화 및 스포츠 지원, 평생교육, 정보접근 지원, 기타
8	사회서비스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기타
9	기획·운영지원팀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영, 기타

(6) 복지관의 팀장은 일반직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인 4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

- 복지관 직원은 종사자 정원(재가복지사업 인력 3인 포함)내에서 운용 하되 복지관의 특성이나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증감 가능. 단, 20명 미만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인 20명 이상을 준용하여 조직이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함.
- 직원 배치기준(지방비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직원 인사관리

- 복지관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복지관의 사무국장, 3급이상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 복지관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 인사위원회운영규정과 인사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 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 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 소요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 승진 소요 근무 년수

1급 승진	2급 승진	3급 승진	4급 승진
2급으로 5년이상	3급으로 4년이상	4급으로 3년이상	5급으로 5년이상 (다만, 전문학사의 경우 3년이상)

- 단, 기능직의 경우 승진소요 근무 년수는 다음과 같음.
 - 1종(일반직 4급상당) : 2종으로 3년이상
 - 2종(일반직 5급상당) : 3종으로 4년이상

※ 평점 기준

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100점	40점	40점	20점

- 근무실적평정요소 :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창의성, 노력도, 조직 · 사회 기여도(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능력평정요소 : 전문지식, 이해 ·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상기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8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직무수행태도평정요소 :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각 평정요소별로 최고 5점에서 최하 1점까지 평점부여)
- 승진제한 : 전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 기간, 휴직 기간(병역, 공상에 의한 휴직 및 강입전 재직기간 제외),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될 수 없음.
- 정직 1년 6월, 감봉 1년, 견책 6월

5. 재무회계

○ 회계관계 직원

- 회계관계 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관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함.
다만 재무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음.
- 재무원 : 계약, 기타 지출원인 행위 담당
- 수입원 : 수입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
-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 담당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고 물품의 유지보수 및 사용 담당



- 복지관에서 다음 각호의 보직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회계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규정을 두어 회계관계 직원을 다르게 지정 조치
 - 재무원 : 관장 또는 사무국장
 - 지출원 : 운영지원팀장 또는 기획·운영지원팀장
 - 수입원 : 운영지원팀장 또는 기획·운영지원팀장
 - 물품관리원, 물품운용원 : 사무국장 또는 운영지원팀장(기획·운영지원팀장)
- 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이상의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함.
 - 재무원 : 연간 재산세 5만원 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신원보증보험
 - 지출원 및 기타회계직 : 연간 재산세 5만원 이상 납세자의 재정보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신원보증보험

6. 시설공간의 배치 및 활용

- 가. 복지관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절하게 배치
- 나. 복지관의 시설 공간 중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관 내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의 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
 - 1) 복지관 운영법인 사무실(예 : 운영법인사무실, 대표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
 - 2)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종교사무실

- 3)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 4) 외부 시설 대여에 따른 임대공간 시설(외부 사무실)
- 5) 복지관 직원 사무실 중 관장실을 제외한 관장 부속실(또는 비서실), 사무국장 및 팀장급 부서장의 별도 집무실
- 6) 기타 복지관의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한 시설 공간

다. 복지관의 사무실은 통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실의 경우에만 회의공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24제곱미터(약 7평)범위내에서 별도의 집무실을 둘 수 있음

7. 행정지원사항

- 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리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정산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이전에 각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에 다음 년도 보조금 및 인건비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사례관리, 기능향상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문화여가지원, 사회서비스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관의 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개발·보급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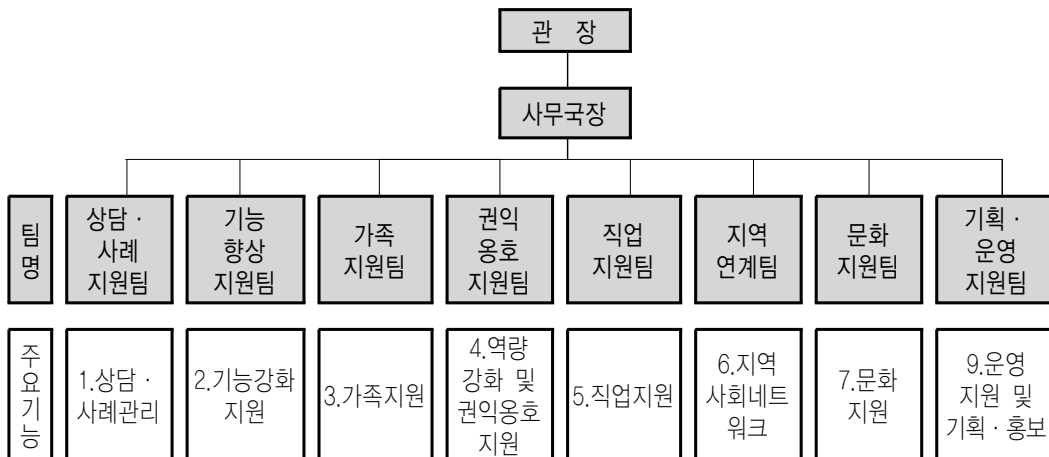
[별표 1]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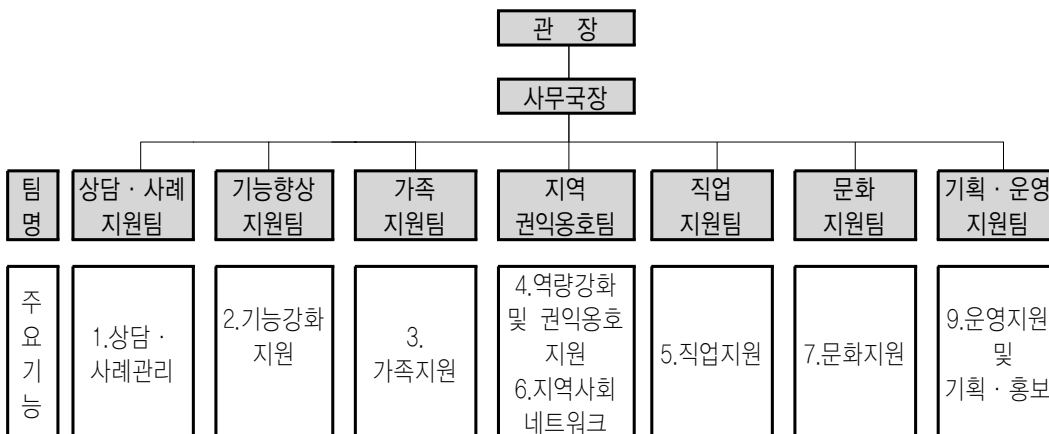
1. 장애인복지관 기본조직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자치단체는 복지관으로부터 기본조직을 포함하여 지역별,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복합시설, 지역특성화 등에 따른 기본조직의 변화 필요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 유연한 조직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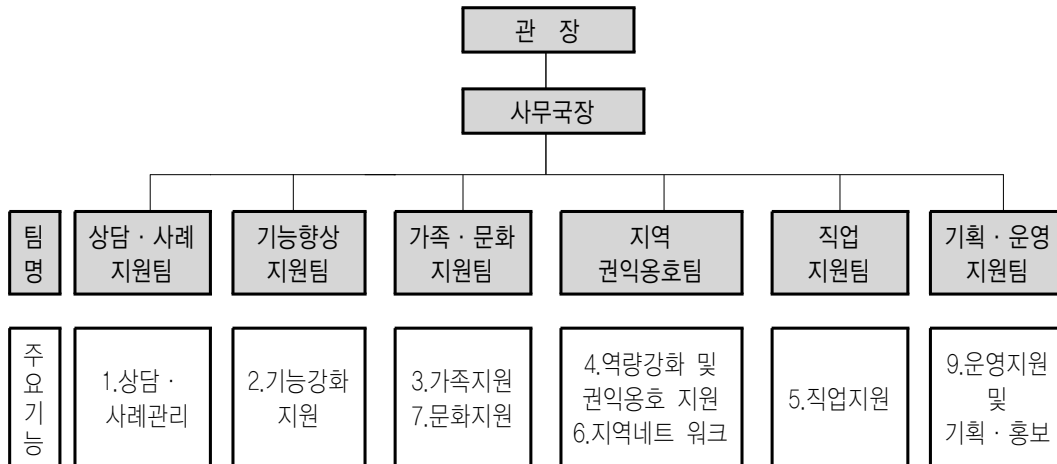
가. 정원 40명 이상 복지관(1국 8팀)



나. 정원 30~39명 복지관(1국 7팀)



다. 정원 20~29명 복지관(1국 6팀)



- *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 중 사회서비스 지원은 각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사회서비스팀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거나 기존팀에 팀에 병합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지역권익옹호팀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는 기능향상지원팀에서 운영할 수 있음
- * 장애인복지관 기본조직 모형에서 기획과 총무를 통합하여 기획·운영지원팀으로 제시하였으나 복지관의 규모,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경우 기본조직에 부설로 별도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라. 정원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권고사항

- 1) 정원 40명 이상 복지관(1국 8팀, 2,000㎡ 이상)
- 2) 정원 30~39명 복지관(1국 7팀, 1,500㎡ 이상)
- 3) 정원 20~29명 복지관(1국 6팀, 1,000㎡ 이상)

마. 공통사항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사회서비스센터 등 부대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의 경우 사무국장 소속 하에 기존 팀에 통합 또는 별도의 팀으로 편제

2. 직 제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3종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 ~ 3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 기능직(운전원, 열관리기사 등), 고용직(조리원, 미화원 등)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이하 “재활병·의원”⁵⁾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재활병·의원장은 당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관계 법령과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3. 주요사업

- 입원 및 통원, 낮 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5) 의원은 의료법 개정 이전('09.1.30) 개설· 신고된 시설에 한함

4. 진 료

○ 진료대상

-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 대한 진료를 행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로 진료
 -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 진료기간

- 재활병·의원 입원진료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하되, 치료의 경과상 연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라 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용신청

- 재활병·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병·의원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건강보험증 제시만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제시)
 -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5.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

○ 진료비 징수

- 유료진료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적용

-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재가환자에 한하여 의료급여수가를 기준 하여 징수하고, 그 징수는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절차에 의하여 징수.



- 진료비의 사용
 - 재활병·의원 진료비 수입금은 반드시 수입과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재활병·의원의 운영비로만 사용
- 운영비
 - 운영비는 해당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비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으로 충당함

6. 인사위원회

-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재활병·의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재활병·의원의 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 위원회 심의 사항
 - 소속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소속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기타 재활병·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 재활병·의원은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한 자체인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관리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

7. 직원 임면 등

- 원내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난이성, 해당직위가 필요로 하는 자격, 해당 직위의 책임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재활병·의원의 운영규정에 의한 직위와 직종을 분류할 수 있음.

- 재활병·의원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소속 직원은 재활병·의원장이 임면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분야에 특수한 전문적 지식·능력 또는 자격이 필요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 되도록 적극 노력
- 의료기술직, 기능직, 고용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정원직원배치기준(지방비 지원기준)의 총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을 경유, 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인건비를 지방비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보수지급기준

- 봉 급
 -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해당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기준(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 중 복지관 보수지급체계 준용)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지급
 - 전문의료인력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시설 또는 지자체가 보수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호봉획정 및 승급
 -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관



- 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직원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를 확인
- 근무경력(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경력(제외),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법령에 의한 의료인·의료기사·약사·영양사·간호조무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무원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법인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경력(호봉합산)을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를 따르는 경우, 초임호봉은 1호봉을 원칙으로 하되, 치료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기사·영양사·약사·의무기록사 및 의지·보조기기사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4급 2호봉, 전문대학 졸업자는 4급 1호봉을 적용하고,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획정
- 기타 사항은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 지침에 따름

9. 기타 참고사항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해당년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추진 (단, 신축 지원은 불가하며, 국고 보조비율 : 30%)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관련 사업 추진시 장애인복지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개정 '11.3.30, 시행' 12.3.31) 이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운영 지침을 준용

CHAPTER 0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1. 목 적

이 지침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 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있다.

2. 근거법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내지 제60조
-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마. 기타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가.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가. 시설의 설치·운영(변경 포함) 신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

-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
- (3)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시설로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 설치된 직업재활시설은 기능보강(임차료 지원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독립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1) 정관 1부(법인에 한한다)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한다.)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평면도를 통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 (7)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1부(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① 시설의 장
- ② 시설 이용자 대표
- ③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④ 시설 종사자의 대표
- 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①~⑤는 반드시 포함하고, ⑥~⑧은 선택하여 위촉)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설장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시행
 - ※ 단, 법인이 운영하지 않는 개인 시설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업계획)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예산)하여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2.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마.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1)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자부담(후원금 및 자체수입 포함)으로 한다.
- (2)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신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국·공립),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3)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4) 각 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종사자가 마케팅, 컨설팅 등 직업재활시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종사자 기준

○ 교육

-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인건비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

—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가능)

—

종사자 60세

* 최종 임금 지급상한 기준일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12월31일

○ 시설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장애인의 교육 또는 훈련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
 -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단, 단체장의 자격이 직업재활시설의 원장인 경우 겸직 가능.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 불가)

○ 사무국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임직업훈련교사(선임직업재활교사)

- 직업훈련교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최소 소요연한 만5년(6년차) 이상인 자
- ‘최소연한’은 해당 직종(직업훈련교사)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함
(단, 해당시설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 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교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직업재활교사(직위) 명칭 사용을 통한 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시행 규칙 개정(예정)

○ 간호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사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사무원

－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014년도 신규 채용부터 적용함.

○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 운영 직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 직종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리기사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 전문업체에 관리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기사의 인건비를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용역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위생원

※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업재활시설별 직원 배치기준

○ 직업재활시설별 직원 수 배치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산정 시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특수학교 학생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시설종별 참여최소인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규정된 최소인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설종별 최소인원〉

구 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프로그램
최소인원수	3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해당 시설로서 신고사항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별표 1】

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명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인	
사무국장	1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당 1인
직업훈련 교사	1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12인 이상시 1인 추가,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 합산)	* 장애인보호작업장 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 현재 인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 추가 * 위 기준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사무원	1인	근로인원 30인이상인 시설 배치(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산한다)
생산 및 판매관리 기사	1인	장애인근로사업장 15명당 1인
		장애인보호작업장 20인 이상인 경우 시설당 1인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제외한다)
시설관리 기사	1인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직원과 원장은 포함한다)
조리원	1인	장애인 30인 이상인 경우 배치
위생원	1인	

※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 최소인원 10인에 1인 의무 배치

(3) 인력배치 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본 인력배치기준에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교사 2인 이상 배치되는 경우 배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호작업장
 - 직업훈련교사가 2인 이상 배치되는 시설의 경우, 그 중 1인은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 예시① 직업훈련교사 3인인 경우, 1인만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갖추어도 됨 (나머지 2인은 경영학 전공자 및 생상품 관련 전문가 등 고용 가능)
- 공공근로, 사회복지무요원 등 직업재활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의 사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위 사항은 각 근로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위 수익금은 매출수익금을 말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및 장부비치

가. 재무회계관리

- 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 재산제로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23조).
 -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 준용

나.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42조 [별표 5]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부 비치 목록〉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해당 시설에 한함)
	재무·회계 관련 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원자료구매 계정에 대한 보조부 포함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 4호부터 13호까지의 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애인 임금대장 - 자재(원료) 구매대장, 제품매출대장 - 수입장부, 지출장부 - 자재(원료)수불부, 제품수불부

6. 지도·감독(장애인복지법 제61조)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



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7. 프로그램 운영

가. 작업활동 프로그램(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단,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재신고 후 적용)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이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① 직원 배치

○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인원과 합산하여 최소 10인일 때 1인을 배치하며, 추가 배치인원은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함
- 작업활동프로그램에는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 운영직종 관련자가 배치되어서는 안 됨

② 대상자

-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애인보호작업장 대상 장애인들보다 더욱 생산능력이 떨어져 당장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프로그램 현원의 80%이상이 되도록 유지
-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3년 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음
- 시설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③ 프로그램 운영

-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
-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0시간 이상 아래의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직업평가 : 적절한 평가도구를 통한 직업평가를 실시
 - 통근훈련 : 지역사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 이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활동프로그램 내의 장애인에게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프로그램운영 실태조사

-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실태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매년 재활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서(예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일반현황
-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작성요령

- (1) 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 (2) 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 (3) 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 (4) 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 · 실인원 · 건(회)수로 기재
- (5) 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6) 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3. ○○○○년도 세입·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입							세출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0000년도 예산(A)	0000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비치 장부

〈근로장애인 임금대장〉

구분 월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고용 연월일	근로 일수	기본급	제수당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 제수당 :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원료구매대장〉

월 일	제 품 명 (원료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품매출대장〉

월 일	제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공 급 처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수입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지출장부〉

월 일	적 요	금 액	누 계	비 고

〈비품관리대장〉

품 명	규 격	수 량	구입단가	금 액	비 고 (구입일자 및 재원)

※ 비고(구입일자 및 재원)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지방비 또는 자체구입 등으로 기록



【참고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인 법인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로서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부담금, 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및 퇴직금적립금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 4대보험 관련 관계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과오납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시설에서는 각 부담금 관리기관에서 보내온 납부고지서 명세가 상기 관련 법률에 규정된 부과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납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용자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근거규정
	2014년도	2014년도	
건강보험료 부담금	보수총액×5.8%×1/2	보수총액×5.99%×1/2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건강보험료×6.55%×1/2	(동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 부담금	보수총액×9%×1/2 (18~60세 미만)	(동일)	국민연금법
퇴직금적립금 부담금	임금총액×1/12	(동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료 부담금	업종에 따라 차등 비율	업종에 따라 차등 비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담금	시설별 생산품에 따른 산업재해 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요율 적용	(동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추후 2014년도 관련법 요율 변동 시 변경요율 적용

※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관련기관 확인필요

【참고자료-별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관련 참고자료

○ 기본급 인상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하되,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아래 기준 이상으로 지급요망

※ 시간외근로수당 예산편성기준

- 전 종사자(시설장 포함) : 월 40시간, 연 480시간

○ 기타 행정사항

- 시·도내 직업재활시설별 인건비는 동일하도록 편성할 것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설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 교사(직위) 3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해야함

- 시설장, 사무국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본급 가이드라인은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별도 시달 예정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times 1/209 \times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14년도 예산안에 인상안 반영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제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및 선임직업훈련 교사 도입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기타 행정사항

-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참고자료 별표 2】

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시설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시설의 종류	2014년도		2014년도		비 고
	지원구분	지원단가	지원구분	지원단가	
근로사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45,570	시설당 기본지원	47,210	
	인원 가중지원	611	인원 가중지원	633	
보호작업장	시설당 기본지원	14,289	시설당 기본지원	14,803	
	인원가중지원	163	인원가중지원	169	

※ 2004년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전년대비 3.6% 인상)에 매년 3.6% 인상을 적용

※ 지원기준을 준수 하고, 지원기준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기본지원 또는 인원 가중지원이 삭감되어서는 안 됨.

【참고자료 별표 3】

201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비 고
가. 근로장애인 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02-21-213)
2)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01-13-136)
3)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01-13-135)
4)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01-13-133)
5) 오페수정화시설 운영비	○ 오페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	(02-21-213)
6)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대상시설	(01-13-134)
7) 화재보험료	○ 모든 시설	반드시 가입
8) 상해보험료	○ 모든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시설의 근로장애인은 기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예산범위내에서 가입
다. 직업적응훈련비	※ 일상생활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03-31-317)
1) 일상생활훈련비	○ 직업생활 이외의 일상생활훈련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2) 직업적응훈련비	○ 대인관계기술, 직장예절 등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직업훈련비 등	※ 근로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비용	
1) 직업훈련비	○ 직종별, 개인별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2) 취업알선비	○ 근로장애인의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마. 생산활동지원비	※ 제품생산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비	
1) 제품개발비	○ 생산품목 확대·전환을 위한 투자비	
2) 홍보·광고비·물류비	○ 시설 및 제품을 홍보·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 직업재활시설 품목별 협의체 활동비(직업재활시설협회비 포함)	
바. 직원 교육훈련 여비	※ 보건복지부 소속 교육기관(국립보건원, 국립재활원 등)과 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비, 여비 등	(01-13-131)

※ 관리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통합 집행함.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세입과목은 모두[04-41-411], 세출과목은 각각 ‘()’ 안에 표기

※ 본 별표를 참고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집행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1. 목 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안내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 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장애인이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설계비 포함),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쾌적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시설 설치 시 설치면적기준에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작업종류에 따른 특정 공간을 포함하여 기준 면적을 산정한다.
- 기 운영 시설이 추가적인 공간을 건축할 시에는 증축으로 본다.

(나) 장비보강 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직업재활 관련 장비, 기타 장비로 구분하여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이전 장소의 평면도, 건물용도,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 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단, 기 설치된 시설의 임차료 상승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 가능
 -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 월세가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가능(단, 월세는 자체부담 원칙)
- 국고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임차료 지원의 경우 근저당 혹은 전세권이 설정되어야하며,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 국고보조를 통한 임차시설의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서를 갱신할 경우에도 해당

- (라)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의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마)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 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 : 당해 연도 6월 30일

－ 추가사업으로 선정 시 : 선정 후 2개월 내

* 2개월 내에 교부신청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로 그 사유를 보고할 것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의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통풍 및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 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직업재활 관련 장비는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사업수행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료하도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 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 변경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변경 ·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이 당초 총사업비의 10% 이하이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당초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공기 연장에 한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승인된 사업을 취소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사업계획 전면 변경 등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 수행 실적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류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사업안내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임대차계약기간,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신축 예정 시설의 제반 사정(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 . .

구분	수행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공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등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법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신·증축	법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공사비 내역서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건물용도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건물구조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소요비용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세부 산출근거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법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관계자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장비보강	법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재활, 기타장비)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지 확보방안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관계자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임차료 지원	법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장애인 접근성 및 시설의 독립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또는 전세권설정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2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설명 : ()
- 소재지 :
- 시설장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임차료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 . . . ~ . . . (년 개월)
- 사업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방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부담 : 천원

-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시 설 장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임차료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거 실						
물리치료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및 장비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7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W 원)

기부목적 :

20 . . .

기 부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차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9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결과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개요

- 가. 시 설 명 :
- 나. 설 치 장 소 (주소) :
- 다. 설 치 자 :
- 라. 작업종목 및 판매방법 :
- 마. 설 치 규 모 :

2. 점검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가. 설치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 설치의 필요성(지역적 특수성) 및 운영 전망 ○ 지역 내 장애 종류별 장애인 현황과 지역적 특수성 ○ 종사대상 장애인의 종류, 인원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	
나. 직종 선택의 적정성 ○ 종사대상 장애인과 직종의 부합 여부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망(연간 예정 매출액 등)	
다. 연계 기업 ○ 연계기업명 및 대표자 ○ 종사자, 생산시설 등 기업규모 및 생산 품목 ○ 전년도 매출액 등 운영실태 ○ 연계내용(협약 등 여부) ○ 기타 직업재활시설과 상호 보완성 등	
라.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 ○ 기업 납품 등 고정 판로 확보 실태 및 시장성 ○ 향후 수요 등 판매 전망	
마. 작업 현황 ○ 건물구조 등 작업환경 ○ 편의시설 및 기숙시설 등 필요 여부 ○ 지역 재가장애인 출·퇴근 여건 ○ 작업장 위험성 내재 여부 및 그 대책	
바. 기타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20 . . .

점검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설명 : (☎ - -)

○ 소재지 :

○ 시설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별지 제11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임차료지원)

(단위 : 천원)

[illegible]

* 사업량에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향상에 관한 내용 추가 기록

* 비고란에는 미집행사유 및 준공예정일 등 기재(임차료지원의 경우 입주예정일 기재)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임차료 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설정이 된 등기부등본)

[별지 제12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 실적 보고

○ 시 설 명 :

○ 사 업 명 :

○ 예산집행 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향상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획	실 적	기 타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향상			

○ 구입 장비 세부목록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사용용도
계					

* 장비 설치 사진 1매 첨부



3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1. 목 적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역할인 『근로의 기회 제공』, 『최저임금의 지급』을 강화하여 이를 충실히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 근로시간과 휴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서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운영 기준

가. 시설 기준

-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작업실 규모를 충족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은 직종 및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구성 기준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30명으로 한다.
 - 근로장애인 비율
 - * 종사자를 제외한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6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 동일 임금 및 매출액인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 시 가산점 부여(시설운영평가에 반영)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가장애인이 50%이상인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전체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근로장애인 적격성 여부 평가



- *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환경 접근성이나 적응문제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나. 운영 기준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사업성 강화

- 근로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 장애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을 포괄한다.

○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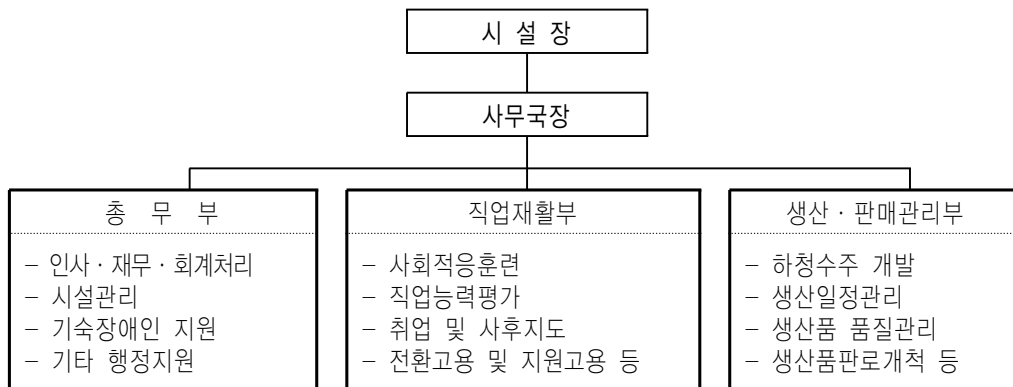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①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③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 지역사회 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 지도

- 근로장애인의 독립적인 사회경제활동 및 직업적인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시설종사자는 시설 내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장애의 특성과 정도, 장애인의 욕구, 적성·직업능력·직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반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은 일정기간 후 정부 및 유관단체의 협조 하에 장애인이 일반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 개별고용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기기 활용·지원
 - *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 *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 개별고용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생계보호비 신청
 -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가장애인으로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
- 인력배치 및 조직
 - 장애인근로사업장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개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여 인력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의 적정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①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이 최적의 상태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직업훈련교사는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 ② 지자체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전기사, 상품 디자이너 등의 소요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근로사업장 조직체계 구성(안) 〉



○ 급여체계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따라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활동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애인근로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근로장애인(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 근로장애인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과 퇴직금 및 제반수당지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기타 임금지급방법과 관리 등의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호작업장으로의 전환

- 당해 연도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평균임금을 확인한 결과, 시설 설치·운영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근로장애인의 급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다음년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의 계좌에 입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최소인원(3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작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보호작업장 또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보고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사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 총 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계										

※ 최저임금('14.1.1~'14.12.31)은 시간급 5,210원(8시간 기준 일급 41,680원)을 적용하여 산출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 · 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등급별총합()																													
재가장애인()																													
생활시설기숙 장 애 인 ()																													
수 급 자 ()																													
최저임금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 기준항의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가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 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

지역사회 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 인원)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직무기능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실/연 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 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시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훈련수당 지급실적

구분	수당 총액	1인당 평균수당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 15만원 미만	15만원 ~ 20만원 미만	20만원 ~ 30만원	30만원 이상
계									

2. 훈련대상자 장애종별 · 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	계	1	2	3	기	계	1	2	3	기	계	1	2	3	기	계	1	2	3	기	계	1	2	3	기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수급자()																														
최저임금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3. 작업활동 프로그램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전환고용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 / 연인원)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작업훈련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 / 연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시달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1. 목 적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이루도록 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한다.

3. 시설 및 운영 기준

가. 시설 기준

-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부대시설은 운영업종 및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구성기준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 * 다만,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 타법에 의하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 작업프로그램 인원을 10인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다음의 장애인이 우선하여야 한다.
 - ①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 * 근로장애인 중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내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② 장애인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입소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
- 근로장애인 비율
 - *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종사자를 제외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이 70%이상이어야 하며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중·경증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근로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 특수학교 학생 등 시설의 목적사업에 집중하여 종사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재가장애인이 50%이상 되도록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내 입소장애인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통합적 차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영 기준

-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성 강화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직종선정
 - ※ 지역특성 등 주변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및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 장애인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포괄

○ 보호고용

- 근로장애인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인 작업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에 대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함
-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개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산품목 또는 서비스는 장애유형별, 지역특성, 판로개척 용이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과 고용창출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개별고용계획 수립

- 근로장애인들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초기 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기기 활용·지원
 - *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 *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 개별고용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개인별 자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 전 훈련, 직업적응훈련, 고용상담 및 직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이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활프로그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근로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 ②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③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⑤ 지역사회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 적응훈련
- 작업환경 개선 노력
 - 시설장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신규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 및 생산활동, 직업알선 등을 통해 일반사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 및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시설 및 사업설계 시 동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급여지급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지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임금은 반드시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
 -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최저 임금의 30%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근로장애인(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 * 다만,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 타법에 의하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 보호작업장 운영 지도·관리]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수 등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독립시설로서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1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중단, 시설신고수리취소, 시설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동 조사를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관계서류 등 관련 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보고)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반기말 익월 30일까지, 당해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생산품명	생 산 량		판 매 량		재 고 량		판 매 액		이 익 금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반기	누계
									주1)	

주 1) 이익금은 총판매액에서 원자재값과 생산판매 과정의 제 경비(정부보조금 및 인건비를 제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임금지급실적

구분	이익금 총 액	임금 총 액	1인당 평균임금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미만	50만원~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 이상
계										

※ 최저임금('14.1.1~'14.12.31)은 시간급 5,210원(8시간 기준 일급 41,680원)을 적용하여 산출

3. 근로장애인 장애종별 · 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1	2	3	기	타	

※ 기준항의 ()안에는 해당 열의 합계를 기재, 장애명 및 등급은 복지카드에 의하여 기재

※ 재가장애인은 출퇴근 장애인을 의미하며, 기숙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의미

4. 직업재활 실적보고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일반고용 전이

지역사회 노동시장분석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사후지도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 계 (실/연 인원)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실/연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직무기능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실/연 인원	회/건	실/연인원	회/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연 인원)	상 담		교 육			회 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시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작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훈련수당 지급실적

구분	수당 총액	1인당 평균수당 (천원/월)	월평균임금 분포(명)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미만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 15만원 미만	15만원 ~ 20만원 미만	20만원 ~ 30만원	30만원 이상
계									

2. 훈련대상자 장애종별·등급별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기 타				
기	준	1	2	3	기 타	계	1	2	3	기 타	계	1	2	3	기 타	계	1	2	3	기 타	계	1	2	3	계	1	2	3	기 타
등급별총합 ()																													
재가장애인 ()																													
생활시설기숙 장애인()																													
수급자()																													
최저임금 수령장애인()																													
남 자																													
여 자																													

3. 작업활동 프로그램

1) 직업상담 및 평가(실/연인원)

직업상담	직업평가

2) 직무개발 및 전환고용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	전환고용

3) 재활프로그램 등 세부 내용

총계 (실 / 연인원)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사회적응훈련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작업훈련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실 / 연인원	회 / 건

4) 부모상담 및 교육(해당경우만 작성)

계 (실 / 연인원)	상담		교육			회의
	실인원	연인원	회	실인원	연인원	회

※ 운영실적 보고서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시달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6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1.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2.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3.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목 적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및 운영법인,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행사업

가.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나.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다.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

라.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마. 조달사업 : 생산품 조정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납품 대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한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물량조정 및 배분, 기술지원, 홍보, 품질인증 등 판매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4.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관련 사항

가. 지원기준

- 관리운영비는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소요된다.
- 직원인건비 지급기준
 - － 시설장과 사무국장, 선임사무원, 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별도 통보)의 기준 적용

- 기타 직원(사무원, 영업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은 본 사업지침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별도 통보)을 참고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직원은 재정보험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단독시설로서 신고 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한해 매월별로 지원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당해 연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다음연도 관리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나. 기본인력 채용기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기본인력(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채용기준을 따른다.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판매·영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 65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판매·영업·회계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의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무국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 사무국장은 60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선임사무원
 - 사무원 중 해당시설 근속연수가 만5년(6년차) 이상인 자
(근속연수 : 해당 판매시설에서 근무한 기간)
 - 사무국장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자체의 승인 필요)
- 사무원 등(영업직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는 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 근무요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가. 설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5])

- 생산품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나. 운영관리

- 시·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운영법인으로 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법인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판매시설의 분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시설장은 판매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생산 시설장, 제품공급자 및 지역주민, 관계공무원(공공기관 구매 담당 포함),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비가 지원되는 판매시설의 지정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 및 지정현 판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부착한다.(단,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법인에 위임할 수 있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제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4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자동판매기, 담배소매, 우표판매 등과 종량제 봉투 판매를 병행할 수 있다.

다. 생산품선정 및 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거나 재가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
-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매제품 선정 시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구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비장애인생산품은 구매자의 편의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판매실적 등은 장애인생산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승인요청 시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 생산품 판로개척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입금 처리 및 범위

- 사업수입금은 장애인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 기술 습득 및 마케팅과 적절한 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추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은 운영법인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판매수수료는 제품가격 및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되 품목 별로 10%이내에서 정한다.(단, 판매수수료가 10%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는 제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재무회계규칙 준수 및 각종 장부의 비치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 준용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부비치 목록 〉

구 분		내 용
기본 비치서류	관리관련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사업관련 장부	- 상담관계서류(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 - 판촉사업 관리대장 - 홍보사업 관리대장 - 개발 및 조달 관리대장 - 제품매입대장, 제품매출대장
	재무·회계 관련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매출채권, 매입채무, 제품매출, 수입장부, 지출장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결산서, 비품수불대장,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6. 지도·감독 및 평가

-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 및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장애인생산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운영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행하고 이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



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운영법인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전 또는 폐쇄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폐쇄하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법인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국비지원시설 16개소 및 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포함)의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시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의뢰받은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판매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평가수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법인은 지도·관리 결과 운영이 부실하거나 운영법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7. 운영실적 등 보고

가. 운영실적 보고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운영실적을 시·군·구청장에게 매반기말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보고실적을 종합하여 매반기말 익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 실적은 8월 10일까지, 당해 연도 실적은 상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매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및 결산서는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나. 판매실적 보고 및 통보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판매실적을 시·도지사 및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매 반기 말 익월 20일까지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 반기별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매 반기 말 익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반기(또는 연도)

1. 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목구분	생산시설구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공공 판매 품목	직업재활 시설	계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재가 · 단체	화훼 및 농산물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비공공	직업재활시설	일반생산품									
판매품목	재가·단체	일반생산품									

2. 사업실적

1) 구매상담

구 분	구매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2) 영업상담

구 분	영업상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3) 판촉·홍보사업

구 분	전시·판매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 (/)	

4) 기관 연계 및 관리

구 분	직업재활시설 연계	판매시설 연계	재가장애인 연계	비 고
반기별(건)/누계	/	/	/	

3.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구분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지방자치 단 체										
공공단체										

※ 비교에는 제품명 등 기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반기 판매실적 보고서

시 설 명 :

관리책임자 :

1. 판매실적

구 분	매입액		매출액		재고액		이익금		비고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계									
공공판매품목									
비공공판매품목									

2. 외상 매입·매출 현황

(단위 : 천원)

외상 매입			외상 매출			비고
총 계			총 계			
매입처	품 명	금 액	매 출 처	품 명	금 액	

3. 세부판매실적

구 분		생산품명	매 입 액		매 출 액			재 고 액		이 익 금	
품구	목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합 계											
공공 판매 품목	계										
	직업 재활 시설	소계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장갑 및 피복부속물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공공 판매 품목	재가 / 단체	소계									
		사무용양식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칫솔									
		포대									
		피복류									
		가구류									
		전자·정보장비									
		가정용설비물									
		사무용소모품									
		서적 그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종이컵									
		상자									
		신발류									
		식료품									
		화훼 및 농산물									
비공공 판매품목	계										
	직업재활 시설	일반생산품									
	재가·단체	일반생산품									



4.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납품 실적

구분 판매처	품목	납품실적		시 도 별		납 품 처		납품월	생산처	비고
		수량	금액(천원)	시도	시군구	기관명	부서명			
국 가										
	소 계									
지방자치 단 체										
	소 계									
공공단체										
	소 계									
기타										
	소 계									
합 계										

※ 비고에는 제품명 등 기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

5. 구매·영업실적

1) 구매상담

	구 매 상 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건)/누계			

2) 영업상담

	영 업 상 담	거래처방문	비 고
반기(건)/누계			

6. 사업수입금 사용 내역

구분	인 건 비		사 업 비		관리운영비		기 타		합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반 기	누 계
금액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정서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시설의장 성명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지정함.

Good Product

장애인생산품 20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관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보건복지부지정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및 임차료지원

1. 목 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구매고객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2.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업안내에 의한다.
-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성실함과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합한 내용의 시설로서 일반고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임차료지원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설계비 포함)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자부담분),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은 환경조건이 고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의 특성상 특정기간(예 : 학교 방학기간, 농번기 등)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별 추진일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조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서식]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건축허가기관이 다르거나 건축공사 실시설계(본 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설계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설계도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

- 시설 신축 및 시설확충사업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이전 장소의 평면도, 건물용도,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단, 기 설치된 시설의 임차료 상승에 의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 국고보조비율 :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임차료 지원의 경우 근저당 혹은 전세권이 설정되어야하며,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 국고보조를 통한 임차시설의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서를 갱신할 경우에도 해당

- (라)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및 지방비에 의하되, 법인 또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비용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마) 자본보조 내시자료는 국고지원액 통지를 위한 것이며 같은 자료 중



지방비는 법정 최소부담액이고 자부담은 권장사항임. 따라서 같은 자료의 지방비는 국고지원이 부족한 경우 시·도지사는 내시액 이상을 부담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부신청 시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의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부신청 기한 : 당해 연도 6월 30일

– 추가사업으로 선정 시 : 선정 후 2개월 내

* 2개월 내에 교부신청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로 그 사유를 보고할 것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2개 년도에 걸쳐 계속공사를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시설 신축 경우 주위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 또는 이전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시설 신축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의 입·출고 등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부담으로 설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 하에 동 보조금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장비보강사업

- 장비의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하되, 가급적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 하에 단가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나) 예산 집행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 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사업수행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등을 회계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고이월 승인 및 보고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료토록 조치하되, 부득이 연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고보조사업계획의 변경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이 당초 총사업비의 10% 이하이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당초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공기 연장에 한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승인된 사업을 취소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사업계획 전면 변경 불가)

라.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별첨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동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국·과장의 실무 지도감독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수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물 설치사항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등 증빙서류와 시설물에 대한 법인 및 사업수행자의 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소유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동 사실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토지의 사용권이 영구 또는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 본 사업안내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임대차계약,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의 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0 .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결의 등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신·증축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공사비 내역서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건물용도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건물구조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소요비용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세부 산출근거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재원조달방법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편의시설 설치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유무 ○관계자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장비유형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지 확보방안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임차료지원	법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고객접근성 및 제품입출고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법인 (대표이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유무 ○근저당설정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2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①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설명 : (☎ - -)
- 소재지 :
- 시설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 . . . ~ (년 개월)
- 사업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방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부담 : 천원

- 붙임 1.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시 설 장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
- ※ 임대차계약일 경우 비교란에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 시설보강 또는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건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건 :

20 . . .

작성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 업 규 모 :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별지 제7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 원정(W 원)

기부목적 :

20 . . .

기부자 주소

생 년 월 일

성 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임 차 비
계				

※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토록 작성하고 임차비 명시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임차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9호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통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
생산물판매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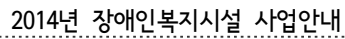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임차료지원)

[illegible]

* 공사 전, 중, 후 사진, 준공 및 기성고 확인 필증, 시설물의 법인 소유 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임차료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설정이 된 등기부등본)



3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 총 칙

가. 목 적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함

2. 호봉의 확정

가.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 이외 경력인정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을 준용

(2) 경과조치

- 이 기준에 의해 근무경력의 8할(80%)을 인정받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미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의 10할(100%)을 인정받고 있던 자(예 :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종전의 인정받은 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이 경우에도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종사자의 경력은 이 기준을 적용함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시〉

〈사례 1〉



⇒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 83. 2. 5부터 '83. 3. 4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한다.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예 : 1.31~2.28)

〈사례 2〉



⇒ 경력기간 : 5월 29일

※ 실제일수는 5월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 시〉

〈신규채용시 경력의 환산〉

임용('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퇴직('86.1.1)
	2 년	1 월	17 일

⇒ 경력기간 : 1년 8월 13일

☞ 계산방법 (경력환산율 8할)

- 2 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 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숫점이하 절사)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1)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6월의 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2)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
- 군 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에는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1.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 다만 6월 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자와 시설장 또는 경력증명기관장(시·군·구청장 포함)은 최대한 상호협조 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면직기록 등)를 수집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을 인정
 - ※ 이 경우 인우증명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3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 · 준사관 · 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 · 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유사경력 등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를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나. 초임호봉의 확정

- (1) 대 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 (2) 시 기 : 신규채용일
- (3)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 ‘가. 경력의 인정’의 규정에 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함
- 초임호봉의 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 호봉의 재획정

(1) 대 상 :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 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3) 방 법

- 호봉을 재획정 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승 급

(1) 대 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4회 시행함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4) 방 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3.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 보수는 (표1)의 봉급과 (표2)의 수당을 지급함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봉 급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는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별도 시달 예정[표 1]

다. 수 당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표 2]와 같음



[표 2] 2014년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금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자)	보급액의 120%	보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 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 장이 정한 날)
(2)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times 1/209 \times 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3) 가족수당	전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참조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 각 시·도는 2014년도 예산안에 인상안 반영
- 각 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연봉체제로 개편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기타 4대연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지도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안은 최소지급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등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1) 상여금(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 월 중 인사 발령 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2)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가. 공무상 질병휴직

- 제수당 등을 지급



나.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4.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가. 퇴직금의 지급

(1)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2) 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3)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 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함

5.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1/2
- 보험료율 : 보험료율(2014년 기준 5.99%)은 추후 관련기관 고시에 따름
 - ※ 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 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 급여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월 10만원 이하), 교통비
 -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나. 국민연금[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88조제2항 내지 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1/2 (18세~60세미만)
 - ※ 관련법 요율변동 시 변경요율 적용

다.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보험료 산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8%(보험료율)
 - 관련법 요율변동 시 변경요율 적용
 - 사용자 부담금 구분
 - 실업급여(0.5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150인 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적용하여 산정

(2)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년·월차, 유급휴가수당,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 × 1/12

6.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대체 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CHAPTER 07

부 록

1.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기준
3.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안) 예시
4.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및 점검기준
5.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7.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1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1. 추진배경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시행함

2. 개요 및 영역

<p>1. 서비스 안내 및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 기준 2: 이용 상담 ■ 기준 3: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 기준 4: 예비방문 ■ 기준 5: 서비스 결정,서비스 제공 조건 및 취소 <p>2. 개인의 욕구와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6: 욕구사정 ■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 <p>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8: 의사결정 ■ 기준 9: 참여 ■ 기준 10: 위험관리 ■ 기준 11: 비밀보장 ■ 기준 12: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 기준 13: 이의제기 	<p>6. 개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1: 개별지원 ■ 기준 22: 건강관리 ■ 기준 23: 약물관리 ■ 기준 24: 노화와 사망 <p>7.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25: 시설과 설비 ■ 기준 26: 개인침실; 공간요구 ■ 기준 27: 개인침실; 가구와 시설물 ■ 기준 28: 화장실과 욕실 ■ 기준 29: 공용 공간 ■ 기준 30: 보조기구와 설비 ■ 기준 31: 위생과 감염예방 <p>8. 직원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32: 역할 ■ 기준 33: 자격과 자질 ■ 기준 34: 직원구성
--	---



<p>4. 능력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4: 개인적인 발전 ■ 기준 15: 교육과 직업 ■ 기준 16: 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p>5. 일상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7: 여가 ■ 기준 18: 관계 ■ 기준 19: 사생활 ■ 기준 20: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35: 훈련과 개발 ■ 기준 36: 지도감독과지지 <p>9. 시설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37: 질 관리 ■ 기준 38: 정책과 절차 ■ 기준 39: 기록유지 ■ 기준 40: 안전의 실천
--	--

* 핵심영역 : 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환경

* 기본영역 : 능력개발, 일상생활, 개별지원

* 일반영역 : 서비스안내 및 상담, 직원관리, 시설운영

〈영역 1 : 서비스 안내 및 상담〉

기준 1. 서비스 이용자 안내

원칙 : (예비) 이용자는 시설의 선택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받는다.

1.1 시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시설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의 목적
- 지원내용과 시설 설명
- **주거 공간**과 공용 공간
- 입소 정원
- 서비스 제공 대상
- **시설장(시설책임자)**과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 입소, 거주기간, 서비스 제공 조건
- 입·퇴소 절차
- 이용자 권리에 관한 설명
- 개인부담 요금 및 서비스 범위와 추가서비스 비용
- 이용자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견해
- 이의제기 절차 및 불만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관할 관청의 연락처와 연락방법

1.2 시설은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제공 조건 등에 대한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시설운영목적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준 2. 이용 상담

원칙 : 시설은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2.1 시설은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비 이용자 및 가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인적 사항
- 의사소통방법
-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내용과 숙소의 형태
- 필요한 교육, 훈련과 거주기간
-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 위험요소
- 소득
- 장애관련 필요장비
- 신체적, 정신적 보건 케어
- 필요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등

기준 3.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원칙 : 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예비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3.1 시설은 **이용자의** 사정된 욕구(특별한 욕구 포함)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가능 여부(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종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3.2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때는 문서를 통하여 합당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 설명에는 당해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예비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 3.3 시설은 예비 이용자의 입소를 검토할 때 다른 이용자와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3.4 시설은 개인의 특별한 취향, 사회적·문화적·종교적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기준 4. 예비 방문

원칙 : 예비 이용자는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인의 욕구 충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방문의 기회를 갖는다.

4.1 시설은 만나절(또는 하룻밤) 동안 예비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 이용자에게 다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현 이용자와의 만남
- 직원과의 만남
- 식사해 보기
- 이용자가 살게 될 방, 공용장소, 마당 등 둘러보기
- 시설이 개인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 이용자에 대한 여러 종류의 보관 기록 살펴보기



기준 5.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이용 중단

원칙 : 시설은 서비스 제공 조건을 문서화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1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적서비스를 포함한 개별지원, 공급되는 시설과 서비스, 개인의 자
을을 제한하게 될 정책과 규칙들
-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청구비용,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
또는 서비스 비용
-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 시설 외부에서 제공될 서비스

5.2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5.3 서비스 이용 중단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 이용 중단을 앞둔 이용자와의 이용중단 상담 실시
- 이용 중단 준비 지원

〈영역 2 : 개인의 욕구와 선택〉

기준 6. 욕구사정

원칙 : 이용자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가 사정되고,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
해야 한다.

6.1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 관련 병력
- 관련 심리적 정보
- 관련 사회적 정보
- 이전에 제공받은 직접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 필요시 관련전문가에게 이용자에 관한 평가 요청

6.2 욕구사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12개월 이내)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 서비스 목표의 변화
- 관련 전문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6.3 욕구의 사정과 점검은 시설장(시설책임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원칙 : 이용자의 사정된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7.1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에는 시설에서 제공하게 될 치료와 재활, 서비스와 설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정결과로부터 도출된 계획
- 필요한 경우 선택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설명
-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 및 절차 확립



- 지역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 등

7.2 가족, 친구, 권익옹호자, 관련 시설,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든다.

-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만들

7.3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12개월 이내)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 서비스 목표의 변화
- 관련 전문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7.4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과 점검은 시설장(시설책임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영역 3 :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기준 8. 의사결정

원칙 :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한다.

8.1 시설과 직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는 이용자가 참여한 사정에 근거한 개별 서비스 계획에 기록된 것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 지원 제공

-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며, 직원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관찰·기록해야 함
- 스스로 결정하고 재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적절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8.2 시설은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서비스의 목표
- 확인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구조화 방법
- 서비스 전달방법
- 예상되는 서비스의 지속기간
-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 미래에 대한 계획

기준 9. 참여

원칙 : 이용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한다.

9.1 이용자는 시설생활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
- 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또는 집단 토론에 참여
- 서비스 이용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목표설정부터 종결까지의 서비스 전 과정에 참여



기준 10. 위험관리

원칙 : 이용자는 자립생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훈련을 받고,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1 시설은 인지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0.2 시설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접근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

- 칼, 가스레인지 등 각종 생활장비 사용
- 휠체어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
- 화기 등의 사용
- 이성과의 접촉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위험

10.3 예상되는 위험은 이용상담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위험관리 방안 및 제한은 이용자의 참여하에 개별계획에 기록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기준 11. 비밀보장

원칙 :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11.1 이용자 정보는 문서화된 시설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11.2 다른 시설과 이용자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문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기준 12.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원칙 : 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 12.1 시설은 의도적 혹은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재정적, 물질적, 심리적, 성적 학대나 방임, 자해, 비인간적이고 비하하는 대우 등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 12.2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은, 이용자의 권리와 관심사를 보호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준 13. 이의제기

원칙 : 이용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불만이나 이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답을 받는다.

- 13.1 시설은 단계별 절차와 일정 등이 포함된 명백하고 효과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어떻게, 누구에게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13.2 시설은 이용자가 제기한 모든 불만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 13.3 이용자에 의해 제기된 모든 이슈들, 조사, 취해진 조치는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 13.4 시설은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영역 4 : 능력개발〉

기준 14. 개인적인 발전

원칙 : 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

14.1 시설은 이용자가 사회·정서적 의사소통기술을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2 시설은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자립생활기술을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시설 내에 예비 공동생활가정(pre-group home)이나 자립지원가정 모형과 같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지역사회 내에 전환형 가정 또는 자립 체험홈 등의 운영
- 적금 등 금융관련 자산관리 지도

14.3 지역사회 내의 관련 서비스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기준 15. 교육과 직업

원칙 : 이용자는 **생애주기와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1 시설은 이용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원격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문자훈련, 숫자계산훈련 등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2 시설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진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이용자의 직업적 흥미와 진로에 대한 상담 및 평가
-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
- 진로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시설과 연계한 진로지원

기준 16. 지역사회연계와 네트워크

원칙 : 이용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16.1 시설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삶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 이용,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식 제공
- 이용 가능한 지역 활동, 전문가 조직에서 제공되는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와 조언
- 투표활동에 대한 지원
- 지역의 대중교통, 장애인용 콜택시, 특별 장애인교통수단 등의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
- 이용자가 선택한 삶의 양식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 지역사회와의 친근한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영역 5 : 일상생활〉

기준 17. 여가

원칙 :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여가활동을 한다.

- 17.1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내·외부에서 적절한 여가활동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7.2 시설은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과 취미를 추구하도록 지원, 장려하여야 한다.
- 17.3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 외부에서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 18. 관계

원칙 : 이용자는 적절한 가족 및 사적 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 18.1 시설은 이용자가 가족 관계, 시설 내·외부에서의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18.2 이용자는 전화 및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8.3 이용자는 방문자와 이용자의 방 또는 사적 공간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 18.4 시설과 직원은 이용자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형성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기준 19. 사생활

원칙 :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는 권리를 존중받고, 책임을 다한다.

- 19.1 일상생활과 시설의 규칙은 이용자의 자립, 개인적 선택과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사생활의 제한은 개별 계획과 계약에서 동의한 내용에 한한다.
- 19.2 이용자는 침실 또는 욕실의 내부와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열쇠(또는 잠금장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19.3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 신문·잡지의 구독이나 텔레비전의 자유로운 사용
 - 기호품(술, 담배 등)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영향 등에 유의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인정
- 19.4 이용자의 가사일 임무(요리, 방과 공동장소 청소, 세탁, 정원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안내와 개별 서비스 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기준 20. 식사

원칙 : 이용자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 20.1 시설은 쾌적한 세팅과 융통성 있는 시간에 영양가 있고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 20.2 이용자는 식단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다이어트와 문화적 욕구, 개인적 선호를 존중받는다.



20.3 시설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사정하고, 정기적인 저체중, 비만, 섭식장애 등의 위험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영역 6 : 개별지원〉

기준 21. 개별지원

원칙 :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는다.

- 21.1 기상, 취침, 목욕, 식사, 기타 활동 시간은 유연해야 하며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 개별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21.2 이용자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옷, 머리모양, 화장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21.3 이용자는 시설의 내·외부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추가적인) 전문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21.4 시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의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준 22. 건강관리

원칙 : 이용자는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22.1 이용자는 자신의 보건 케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다.

- 일반적인 건강 관련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 자신의 의료적 상태(당뇨병 등) 관리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 보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22.2 이용자는 매년 건강 검진을 받는다.

기준 23. 약물관리

원칙 : 이용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보유·관리하며, 약물을 다루는 시설의 정책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다.

23.1 시설은 약물의 영수증, 약물복용 기록, 약물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시설 정책과 절차에 의해 이용자가 자신의 약물을 스스로 보유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3.2 약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위한 훈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약물복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약물사용에 따른 문제 인식 방법과 대처 방법
- 약물을 어떻게 다루고 기록하는지와 관련된 사항

23.3 직원에 의해 관리되는 약물은 시설의 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3.4 위험 약물은 직원에 의해 관리된다.



기준 24. 노화와 사망

원칙 : 이용자의 노화, 질병, 사망 등은 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루어진다.

- 24.1 이용자의 노화와 질병, 사망 등은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 24.2 임종케어와 죽음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욕구는 종교적·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논의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 24.3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설은 훈련된 전문시설을 통해 통증완화, 실질적인 원조와 조언, 임종상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영역 7 : 환경〉

기준 25. 시설과 설비

원칙 : 이용자는 가정과 유사한 설비를 통해서 개별 욕구를 충족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 25.1 시설과 설비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밝고, 상쾌하고, 통풍이 잘 되고,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밝기와 난방 및 냉방, 통풍이 유지되어야 한다.
- 25.2 시설과 설비는 모든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기준 26. 개인침실 ; 공간요구

원칙 :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적절한 면적의 침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1 침실 바닥 면적은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침실에 부속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이를 침실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26.2 시설은 이용자의 침실이 4인실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 27. 개인침실 ; 가구와 시설물

원칙 : 이용자는 개별 욕구와 생활양식을 충족할 수 있는 가구와 부속품이 있는 침실을 제공받는다.

27.1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침실을 꾸밀 수 있고 잠글 수 있다. 단, 필요시 서비스 이용 계획에 제한 상황을 명시할 수 있다.

27.2 침실에는 옷장, 사물함,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물품 보관공간이 있어야 한다.

27.3 침실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침구와 베개가 있어야 한다.

27.4 침실에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 적절한 조명, 적절한 환기, 조절할 수 있는 난방시설이 있어야 한다.

기준 28. 화장실과 욕실

원칙 : 이용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화장실과 욕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8.1 시설은 5명 이상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8.2 화장실과 욕실은 잠글 수 있어야 하며, 직원은 오직 이용자의 위험 관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기준 29. 공용 공간

원칙 :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29.1 가정형 구조의 경우 부엌과 세탁실은 일반 가정집과 같이 설비되어야 한다.

29.2 공용 공간(식사, 사회적 활동 등을 하는 공간)은 이용자 일인당 최저 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9.3 방문객, 상담, 치료를 위해 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기준 30. 보조기구와 설비

원칙 :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받는다.

30.1 신체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승강기 및 경사로
- 비상호출 장치
- 낮은 전구스위치, 편리한 창문개폐장치

-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휠체어나 이동기구 보관소 및 기구충전 설비

30.2 감각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눈부시지 않는 조명
- 개인용 컴퓨터
- 유도시설 등
- 비디오 레코더 또는 여타의 편의장치가 있는 TV

30.3 안전시스템과 설비는 이동장애/감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불이 켜지는 화재정보장치 등).

기준 31. 위생과 감염 예방

원칙 : 이용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활한다.

31.1 시설은 청결함을 유지하고, 불쾌한 악취가 나지 않으며,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예방조치 포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2 세탁물은 음식 보관 저장소, 요리하는 곳, 음식 먹는 곳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영역 8 : 직원관리〉

기준 32. 역할

원칙 :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며, 직원의 업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정된다.



- 32.1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알고 지지하며, 시설의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행하며, 시설의 주요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직원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 32.2 직원 업무분장 기준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계획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기준 33. 자격과 자질

원칙 :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다.

33.1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태도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사귀기 쉽고, 편안하다.
- 잘 경청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으면서 정직하다.
-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33.2 직원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용자의 장애와 특수한 상태에 대한 지식
-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예견되는 행동을 다룰 수 있는 기술
- 이용자의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 자해를 의사소통 욕구, 선호, 욕구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

33.3 실습생은 자격을 갖춘 직원의 지도·입회하에서만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준 34. 직원구성

원칙 : 직원의 구성 및 회의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기획된다.

34.1 시설은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개최하고(최저 1년 6회), 기록해야 한다.

34.2 직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 35. 훈련과 개발

원칙 : 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35.1 직원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5.2 모든 직원은 공평한 훈련기회를 가지며, 훈련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된다.

기준 36. 지도감독과 지지

원칙 : 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받으며, 이용자의 신체적 공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36.1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슈퍼비전을 받는다.



〈영역 9 : 시설운영〉

기준 37. 질 관리

원칙 : 시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시킨다.

- 37.1 시설의 목적과 목표는 서비스 질을 강조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되며 그 내용은 직원과 이용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 37.2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연간 1회 이상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자기점검이 이루어진다.
- 37.3 서비스 관련 조사결과는 이용자와 그 대표자, 기타 관련 집단이 열람할 수 있다.
- 37.4 시설장(시설책임자)과 직원은 각각의 이용자를 위한 개별 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변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37.5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기록과 생활계획 뿐 아니라 익명으로 이루어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별 또는 그룹 토의 등 이용자로부터 제공된 모든 정보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38. 정책과 절차

원칙 : 이용자는 시설의 문서화된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 38.1 직원은 모든 정책 및 절차와 실천 규약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 38.2 이용자는 적절한 형태의 관련 정책, 절차, 실천 규약에 접근할 수 있고, 직원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 38.3 정책, 절차, 실천 규약과 기록은 시설장(시설책임자)이 서명해야 하고, 날짜가 기록되고, 검토 수정된다.

기준 39. 기록유지

원칙 : 이용자는 시설의 기록유지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 39.1 이용자에 대한 기록은 최근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 39.2 이용자는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기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기준 40. 안전의 실천

원칙 : 이용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 40.1 시설은 화재 예방 설비와 대피방법,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40.2 직원은 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설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40.3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사정에 기반하여 창문의 잠금장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 40.4 시설은 안전과 소방에 관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기준

1. 총칙

1-1. 목적

- 이 기준은 장애인거주시설⁶⁾(이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자”)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지자체와 시설운영자, 직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2. 제정 배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체결 등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서비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체계가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문화권, 법절차적 권리 등을 기본 권리로 제시하였음.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한 장애인 인권이념이 시설 이용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6)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것임.

1-3. 기본 권리의 범위

- 이 기준의 기본 이념은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지적장애인권리선언, 농아인권리선언,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문서, 국내의 「대한민국헌법」⁷⁾과 장애인 인권현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법」⁸⁾, 「장애인복지법」⁹⁾,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¹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장애인권리 이념에 바탕을 둬.

-
- 7)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7조 사생활보호, 제18 통신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4조 선거권, 제26조 청원권 등의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 8) 「사회복지사업법」은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정함으로써 적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의 책임주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9) 「장애인복지법」은 제4조 제1항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 장애인에게 역시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시설 이용자의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음.

- ① **평등권** :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 비장애인이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대우받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
- ② **생존권** :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권리. 의식주 보장, 의료 및 건강보장의 권리, 물리적 안전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보장의 권리 등이 포함
- ③ **자유권** :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 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권리, 입·퇴소의 자유,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이 포함
- ④ **사회권** : 완전한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권리. 가족을 이룰 권리,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 ⑤ **정치권** :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 및 그 과정에서의 적절한 정보제공과 접근성 보장, 공직참여와 공무수행 참여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 ⑥ **문화권** :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는 등 일상적인 문화 활동에서의 권리. 문화적 매체 이용 및 문화시설과 서비스 이용에의 접근성 보장 등이 포함
- ⑦ **법절차적 권리** : 권리구제나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절차와 재판 등에서 충분한 법률상의 정보제공 및 물리적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동등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으며,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계획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

2. 시설 이용자의 권리

- 시설 이용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모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시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지 않아야 함.
-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 정기적 건강검진과 필요한 의료처치를 즉각적으로 받을 권리
- 화재나 재해·재정적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와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족 등 외부방문자와 자유롭게 만날 권리
- 자신의 입·퇴소에 대해 결정과 결정결과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
-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 임신·출산·양육·가사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강요·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
-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 노동에 따른 수입과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권리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 자신의 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시설생활 및 운영, 제공되는 서비스 과정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아동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훈련서비스,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권리
- 정신장애인의 특정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3. 시설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동 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동료 이용자, 가족, 지역사회 등은 이용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모든 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이 기준에서 명문화한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함. 또한, 이 기준은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므로 동 기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1)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이용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 거주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그의 욕구와 처한 상황에 대해 진단이나 사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용자의 연령, 성, 장애정도, 장애에 의한 행동, 장애유형, 종교, 출신지역, 가족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생활과 의식주를 보장한다.

(의의 생활)

- 이용자가 각자의 신체특성, 연령, 성, 취향 및 욕구 등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의복을 구입·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단합과 통일성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한다.
- 이용자는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모양, 화장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미용용품, 화장품 등을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머리모양은 금지한다.
- 단, 중증장애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복 등을 선택·구입, 소유·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최대한 얻도록 한다.

(식食 생활)

-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식사시간, 식사방법, 식사장소를 제공한다.
- 식단을 결정할 때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식이요법, 영양식, 개별식, 치료식 등을 제공한다.
- 주식 이외의 간식은 이용자의 기호식품 및 취향에 따라 현금사용을 권장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간식의 종류와 시간을 가능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생활)

- 일반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과 구조를 제공한다.
- 거실(방)은 1실에 최소한의 인원이 거주하도록 해야 하며, 방에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장롱 등의 가구와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고, 일반 가정과 같이 안락해야 한다.
- 숙소배치와 실내 환경 변화에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의사소통이 힘들고 중증인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평상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타 이용자와의 상호관계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숙소를 배치한다.
-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에는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한다.

3) 이용자의 의료 및 건강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건강상의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급용품은 항상 준비한다.
- 개별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건강보장은 질병예방이 우선되도록 개인별 체질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운동,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보조식품 복용, 지속적인 치아관리 등을 지원한다.

4)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각종 재해에 대한 대비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 및 보완해야 한다.
- 화재 및 재해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각 건물별 상황에 맞는 대피훈련 : 자체 및 소방서).
-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기적 소독(식기, 피복, 이불, 물탱크, 지하수)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 및 언어폭행,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침해 및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침해 및 학대행위 발생 시 즉시 구제하여 침해된 인권이 회복되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 안전을 이유로 과도한 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한다.

5)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도록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가 소유한 물건과 금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실행, 서비스 평가에 이용자가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를 제약해서는 안 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각종 보조용품과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용자의 종교생활 자유를 보장한다.

-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선택한 종교생활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종교생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생활이나 서비스에 불이익이 주어서는 안 된다.

7)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이용자의 신분증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자, 후견인 등의)사전 동의를 얻어 시설이나 담당직원이 관리할 수 있다.
- 화장실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화장실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 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비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목욕은 스스로 하되, 이용자가 목욕하는 모습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일상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자율화 한다. 다만,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담당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개인 물품은 자신의 숙소에 개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물품 구입을 제약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취향 및 욕구에 따라 스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 담당직원의 지원을 받아 이용자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다.
-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생활공간이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사용토록 한다.

8) 이용자의 소통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다.

- 이용자의 가족을 비롯한 외부방문자를 시설 내·외에서 자유로이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지역사회생활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용자나 스스로 시설로 돌아오기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보조기구와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시설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또는 공용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시설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설치·개방하고, 전자우편(이메일)을 사용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비스 제공자(지자체, 시설)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에게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와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9) 이용자의 자유로운 입·퇴소를 보장한다.

- 이용자의 입소와 퇴소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상담지원을 통하여 이용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때는 시설이용 욕구를 파악하여 시설운영 방침이나 원칙,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생활양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과정을 통해 이용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원가정이 있는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할 때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 원가정은 없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하면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적 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장애정도를 감안한 전원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 진행과정 및 예상되는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건전한 성(性)생활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성(性)은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다.
- 이용자는 자신의 성적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성(性)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한다.
- 특별히 성생활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한 이유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11) 이용자의 가족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는 그들만의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퇴소, 자립, 결혼, 일반 취업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이용자가 지역사회로 독립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결혼한 부부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시 각종 사회서비스를 연계하고,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12) 이용자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급여, 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대상일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 이용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는 「교육법」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에 의해 어떠한 교육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고, 동일 연령대의 또래집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지원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한 이용자(청년 및 성인)가 평생 학습을 통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4) 이용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 직업능력평가 및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직업교육을 위한 계획수립에 이용자가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 취업업체와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이용자 스스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족, 후견인, 담당직원 등이 대변자로서 지원한다.

15) 이용자의 경제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인식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가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과 개인의 재산에 대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6)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에게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자의 투표 참여를 지원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한다.
- 정보접근, 투표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와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17) 이용자의 문화권을 보장한다.

- 이용자가 자유로운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화권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조기구와 보조인력을 제공한다.

18) 이용자가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이용자의 인격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법률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9) 이용자가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시설생활 및 운영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위원회에 이용자를 참여하게 한다.
-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4.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 안내

4-1. 사전예방

- 이 기준의 기본정신은 시설 이용자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음. 이러한 기본정신은 이미 훼손된 인권의 회복은 물론 이거니와 특히 아직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이 기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인권침해예방 조직구성, 둘째 인권사업 체계화, 셋째 인권침해예방활동 등을 명문화 하였음.

4-1-1. 이용자 인권옹호를 위한 조직 구성

- 시설은 이용자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직원과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의 인권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계획·실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인권옹호활동을 펼친다.

4-1-2. 지속적 인권사업의 체계화

(가) 인권교육

-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한다.
-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인권교육과 이용자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시설이용자 및 직원 인권교육은 반드시 시설 외부 전문 인권강사에 의하여 연 8시간 이상 실시하고, 증빙하여 기록, 보관한다.
- 인권교육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수료자, 장애인 인권관련 전문가(예: 거주시설 인권관련 현장 활동가, 인권전문강사 등)에 의뢰하여 연 8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한 자료를 증빙하여 기록, 보관한다.

(나) 홍보를 통한 이용자 인식개선

- 이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예: 인권문화제 참여, 인권마라톤 참여 등).
- 지자체 및 시설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인권에 관한 글을 상시로 비치한다.
- 시설의 입구, 왕래가 잦은 길목에 이용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문구를 상시 게재한다. (그 밖의 예: 차량용 부착지, 현수막 등)

4-1-3. 인권옹호 활동

(가) 민주적 의사소통

- 각 시설에서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기본이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시설의 상황과 조건 및 개별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시설 운영자와 직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체계화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1 대 1 면접, 제공자 대표와 이용자 대표의 공식적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인권보장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에서는 연 4회 이상 정기·사례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지원 방안
-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조직 구조,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개선사항
-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과 점검 내용에 따른 평가
- 인권교육의 시행 및 만족도 조사
-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인권인식 개선사업 등)
- 정기·사례회의 외에 인권지킴이단 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인권상황 점검 정례화

-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상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 인권옹호를 위해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정기·사례 회의를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이상 진행하고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비치한다.
-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의 주체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조직하여 상시 운영하고, 시설 운영위원회, 부모회, 자원봉사단, 지자체, 전문가, 사회단체가 포함된 ‘인권점검반’(가칭)을 통해 점검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4-2. 사후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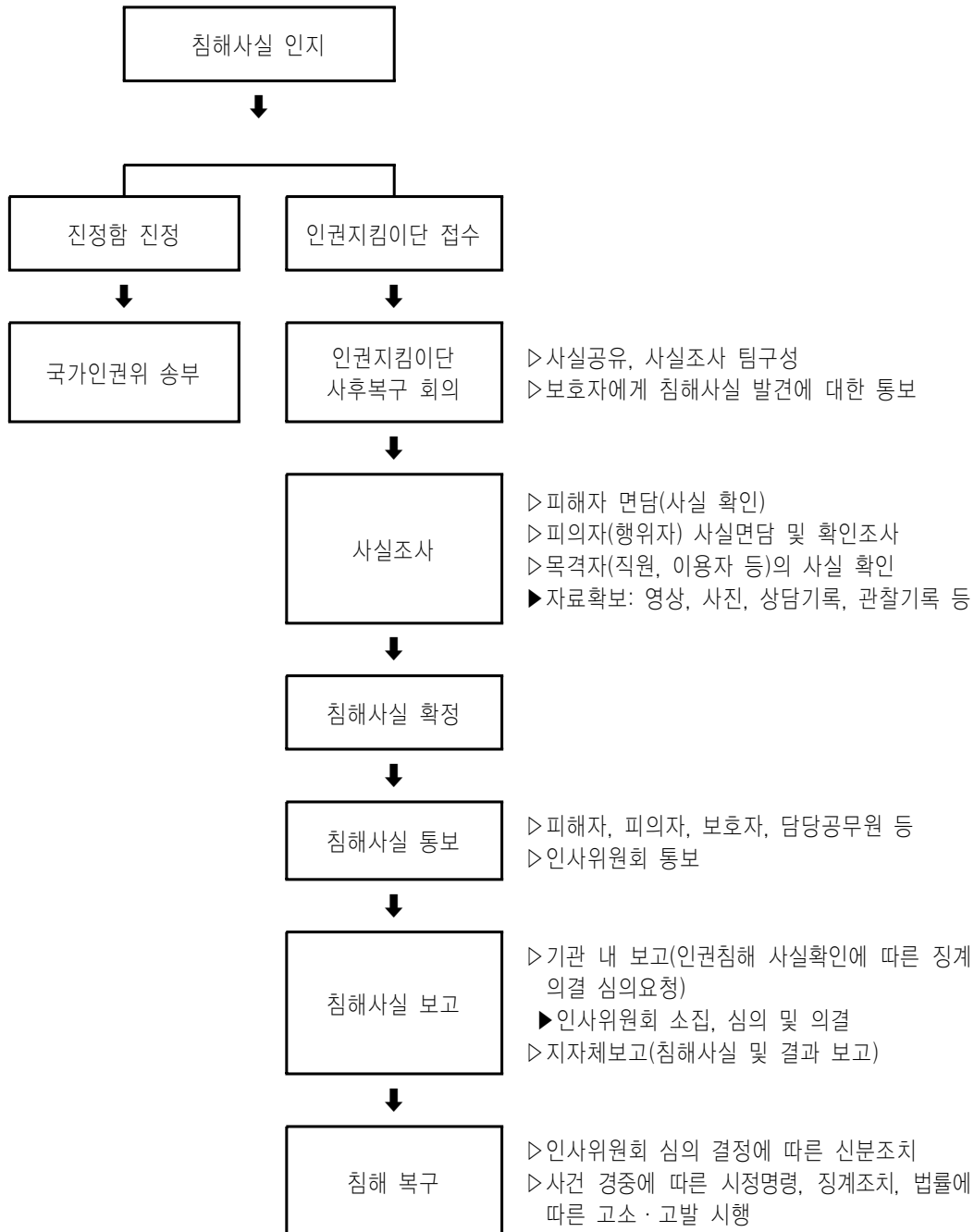
- 한 번 훼손된 인권은 복구하기가 쉽지 않음. 그러나 훼손된 인권에 대한 복구는 어렵더라도 재발되는 상황은 없어야 함. 사후복구 안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혹은 무지하여 혹은 운영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인권침해를 발생케 한 경우 등, 이용자의 손상된 인권에 대한 복구의 과정

을 추진함으로써 손상된 인권에 대해 손해 배상 등 즉각적으로 침해된 인권을 복구시키고, 재발을 방지하여 이용자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이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고소·고발 등 침해된 인권의 복구를 위한 행동을 함에 자유로워야 하며, 이용자의 인권 회복을 위한 자체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이 독립적이어야 함.
- 시설은 이 기준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인지에서부터 사실조사, ‘인권지킴이단’의 결정 및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취해 훼손된 인권을 복구시켜야 함.



<< 사후복구체계 절차 >>



4-2-1. 사실의 인지

- 시설은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충처리함 설치 등).
- 진정함은 이용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접근 가능해야 하고, 쉽게 기록할 수 있는 그림 등의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진정할 수 있도록 한다(화장실 내·외, 작업장 등).
- ‘인권지킴이단’ 또는 ‘운영위원회’는 정기적 인권상황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화하여야 한다.

4-2-2.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의무화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법정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용자 인권 침해사실 통보서”를 가족 등 보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원활한 송부를 위하여 평소 보호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통보는 정해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통보를 위하여 우선 전화 등의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4-2-3. 기관 내의 보고조치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이 사실을 상급자, 인권지킴이단,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용자 인권 침해사실 보고서”를 상급자 또는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는 정해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보고를 위하여 우선 전화 등의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보고사항은 인권지킴이단에서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법인 및 시설에서는 인권지킴이단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의사결정 하여야 한다.

4-2-4. 관할 관청에의 보고

- 관할 관청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의무를 가지며, 시설은 이용자 인권침해사실을 시·군·구 등의 관할 관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관할 관청은 피해장애인을 즉시 구제하는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임시보호나 전원 등의 긴급조치를 취한다.
- 관할 관청은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4-2-5. 사실조사

-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선 보호조치 후 조사하여야 한다.
- 사실조사는 법인 및 시설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인권지킴이단과 외부의 인권전문단체 등이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있다.
- 사실조사는 사실조사의뢰서(별지 제1호서식), 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 사실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 결과를 법인 및 관할관청에 통지·보고하여야 한다.

4-2-6. 지원조치

- 시설은 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 시설은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설은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시설장과 지자체는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실조사 의뢰서

대상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의뢰일자	2011년 월 일 (요일)				
의 뢰 발신자	직책		의 뢰 수신자	직책	
	성명	(인)		성명	(인)
의 뢰 내 용					
비 고					

※ 침해사례접수시 피해당사자, 목격자 등이 사실조사의뢰서 직접 작성 서면제출
 - 구두접수시 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진술 내용에 따른 의뢰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진 술 서

진술인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주 소			
사고경위				
<p>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합니다.</p> <p>2011. . . .</p> <p>자필서명 (인)</p>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자필로 작성할 것.

진술서 작성

- 사실조사 사안에 대한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동시 진술서 작성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내용을 가장 잘 파악한다고 추정 되는(담당교사 등) 사람과 동석 후 진술에 따른 대리 기록
-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용 진술서 양식은 동일함.



【별지 제3호 서식】

조 사 서

구 분	성 명		조사자	(인)			
	일 시		장 소				
	내 용						
질의응답 내 용	1. 질의 1-1. 응답						
	2. 질의 2-1 응답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1. . . . 자필서명 (인)</p>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원칙에 의거한(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질의 및 응답 내용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통보서

제 목						
수 신 자						
보 고 자	소속		직명		성명	(인)
보 고 일	2011. . . ()					
침해 사실 내 용						
비 고						

※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서술



【별지 제5호 서식】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보고서

조 사 명	「 ○○○씨 인권침해 사실조사」			
조 사 목 적				
사 건 개 요				
조 사 기 간				
조 사 위 원				
세 부 내 용	구 분	날 짜	세부 내용	진행자
	최초 사건 제보			
	사건 파악 및 조사팀 구성			
	사실조사 계획보고 및 진행통보			
	피의자 진술서 확보			
	피해자 진술서 확보			
	목격자 진술서 확보			
	조사자료 정리			
	인권침해사실 판단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기관장, 보호자)			
	인사위원회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회의 진행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접수			
위 원 회 측 심 의 결 과				

제정 2012. 00. 00

시행 2012. 00. 00

제 1 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0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000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

제3조(설치) 인권지킴이단은 역할의 중요성과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시설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한다.

제4조(기능 및 사업) 인권지킴이단의 기능 및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련자의 인권인식 개선 사항
3. 시설의 정례적인 인권점검 실시 주도
4. 인권침해발생시 사후활동에 관한 사항
5. 시설 내외의 인권 등에 관한 실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6. 시설 인권지킴이단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시설 내 인권침해에 관한 유권해석,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인권지킴이단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단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간사는 시설 직원단원 중 1인이 담당하며 단장이 선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동의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선임한다.

② 시설 직원 외의 단원의 경우 자격과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7조(단원의 종류) 단원의 종류는 이용자 단원, 부모 및 가족(옹호자)단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 단원, 시설 직원 단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단장 및 단원의 임면 및 임기) ① 단장은 단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단원은 인권지킴이단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단장이 선임한다.

③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설 직원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신임 단장을 재선출하고,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9조(단장 및 단원의 책무) ① 모든 단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도덕과 품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인권지킴이단의 모든 업무와 그 구성원을 통할한다.

③ 이용자 및 가족 단원은 회의참여, 이용자 인권 교육 일부 담당, 인권침해 예방활동(인권 홍보활동 등), 인권옹호활동 등을 담당한다.

④ 전문가 단원은 회의참여, 인권침해 사실 확인 자문, 인권 및 인권지킴이단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한다.

⑤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지킴이단 실무 책임을 담당하며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한 사항의 점검·관리하고 단장과 인권지킴이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단장 또는 단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인권지킴이단의 심의에 따라 그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단원의 책무 준수 및 피해 배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권지킴이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단원 변경 및 탈퇴 절차) ① 단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장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단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단장에게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항의 허락 여부를 일주일 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단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단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종류와 안건) ① 회의의 종류는 그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정기·사례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사례회의는 연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대면회의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상황 점검 계획 수립
2. 인권점검 상황에 대한 평가 계획 수립
3. 인권침해 발생시 사실 확인 팀 구성 및 계획 수립

④ 정기·사례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지원 방안
2.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조직 구조,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3.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개선사항
4.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과 점검 내용에 따른 평가
5. 인권교육의 시행 및 만족도 조사
6.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인권인식 개선사업 등)

제12조(의사정족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회의의 고지) 간사는 회의시마다 안건을 회의개최 전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내용의 기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의 보고)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을 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전체 단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물의 문서보관)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은 별도의 문서로 출력하여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협조)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 내 각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이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계획) 단장과 간사는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권지킴이단 회의에 보고·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단원의 수당 등)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직원단원에 대한 보상) ①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중요성과 직원단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설에서는 직원단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② 보상은 특별휴가, 교육 및 연수 기회의 우선권 부여, 기존 업무의 축소, 인사고과 반영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제2장 인권옹호 활동

제22조(인권옹호의 정의) 시설 이용자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

제23조(인권옹호의 내용)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예방활동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교육
2. 인권인식 개선
3. 인권 점검 정례화
4. 기타 인권지킴이단에서 예방활동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4조(인권교육)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단, 자원봉사자 교육은 자원봉사자 담당 직원이 할 수 있다.)

제25조(인권인식 개선)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관계자 혹은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26조(인권 점검 및 평가) ①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상반기 내) 이용자와 직원 전원, 조사가능한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② 인권상황 점검에 대해 인권지킴이단은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관을 하며, 점검의 실행은 시설종사자의 참여로 진행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점검된 인권상황과 이에 따른 인권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연 2회 평가를 실시한다.

제3장 인권침해 사후활동

제27조(인권침해 상황 인지 및 공식화) ①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견되면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 공식화란 사실에 대한 시설 관련자 공유, 사실 확인을 위한 팀구성, 보호자에게 침해사실 발견에 대한 통보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 ②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는 정해진 서식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통보를 위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긴다.

제28조(선 보호조치 후 확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

제29조(인권침해시 조치) ① 확인결과 침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에는 인사 또는 징계 등에 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② 침해가 고의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형사처벌 수준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적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 공적 기관에 진정·고발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제30조(지원조치 및 사후 관리) ① 인권지킴이단은 인권 침해한 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설에 요구한다.

- ② 시설은 인권 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며, 피해보상의 범위는 법적·도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③ 시설장과 지자체는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4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보장 점검기준

-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자”) 인권보장 점검기준은 시설선택 및 입소단계, 시설거주 단계, 시설퇴소 단계로 구분된다. 각각의 단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 이 지침에서는 3단계별로 각각의 인권보장 내용에 대한 ①가이드라인 ②기관, 직원, 이용자의 역할 ③ 점검기준 순으로 제시한다.

<표 1-1> 이용자 인권보장 세부내용 및 분류

단계(지표 수)	인권보장 내용
시설 선택 및 입소단계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수급권 - 예비방문권 - 계약체결권(*)¹¹⁾
시설 거주단계 (2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선택권 - 이미용권 - 화장실접근권 - 목욕권 - 식생활권(*) - 간식선택권 - 주거환경권(*) - 건강보장권(*) - 개인위생 보장권 - 학대 안전보장권(*) - 호칭권 - 금품처분 및 신분증 소지권 - 서비스 보장권(*) - 종교생활 보장권 - 지역사회 접근권(*) - 성생활 보장권 - 가족생활 보장권 - 자립생활지원권 - 사회보장수급권(*) - 교육보장권 - 직업선택권 - 적정보수권 - 정치권 - 문화권 - 절차적 권리(*)
시설퇴소 단계(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결정권(*) - 시설변경권

11) (*) - 핵심지표를 의미한다.



1. 시설선택 및 입소단계

1) 정보수급권

정보수급권 : 시설 예비 이용자는 시설 선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설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설 선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에는 기본적인 시설의 정보뿐만 아니라 시설 예비 이용자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도 포함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정보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내에 시설안내서를 제작 및 비치하여야 한다. 시설 안내서란 운영하는 시설이 어떤 곳인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비 이용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수록한 홍보물을 의미한다. 시설 안내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 운영의 목적/- 지원내용과 시설 설명
 - 개별 숙박시설과 공용 공간/- 입소정원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구집단(주된 장애유형 등)/- 관리자와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 입소, 거주기간, 서비스 제공조건/- 입·퇴소 절차
 - 이용자 권리에 관한 설명/- 개인부담 요금 및 서비스 범위와 추가서비스 비용
 - 이용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견해
 - 이의제기 절차 및 불만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관할 관청의 연락처와 연락방법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사정한 예비이용자와 가족의 욕구(특별한 욕구 포함)를 본 시설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예비이용자와 가족에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즉,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종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예비이용자와 가족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직원은 예비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욕구와 서비스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예비이용자 및 가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의사소통 방법
 -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내용과 숙소의 형태/- 필요한 교육, 훈련과 거주기간
 -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위험요소
 - 소득/- 장애관련 필요장비
 - 신체적, 정신적 보건 케어/- 필요한 치료와 프로그램 등

(3) 이용자 및 가족의 역할

- 시설 예비 이용자 및 가족은 시설 및 직원에게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 및 세부적인 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설 및 직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상황이라 함은 개인의 병력, 가족력, 심리사회적 측면, 가구소득 등 시설 예비 이용자를 총체적으로 사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욕구라 함은 시설 입소를 확정하는 경우에 시설예비 이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반드시 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양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의미한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시설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시설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았는가?	
점검 내용	① 기본적인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②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③ 시설 내에서 이용자로서의 나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 ①에서 기본적인 시설현황에는 시설 운영목적, 입소정원, 직원현황, 서비스 종류 및 추가 비용, 입·퇴소절차 등이 포함된다. - ③에서 이용자의 권리란 시설 선택 및 입소부터 퇴소하기까지 시설에서 생활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제반 권리를 의미한다.	

2) 예비방문권

<p>예비방문권 : 시설 예비 이용자는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인의 욕구충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을 예비 방문할 권리를 가진다.</p>

- 시설 예비 이용자는 본인이 거주를 희망하는 시설을 사전에 방문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욕구와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최저 반나절(가능한 한 하루 정도) 동안 시설 예비 이용자에게 예비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비 이용자에게 다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현 이용자 및 직원과의 만남/- 식사해 보기
 - 예비 이용자가 살게 될 방, 공용장소, 마당 등 둘러보기/- 기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체험해보기

– 시설이 개인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시설 예비이용자가 시설을 예비 방문하는 경우,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예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본 시설의 연중, 월별, 주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또한 예비이용자가 시설에 대한 거부감 또는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이용자 및 가족의 역할

- 시설 예비 이용자는 반나절 또는 하루 동안의 시설체험을 통해서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 잠자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기관 및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즉, 식사나 잠자리 등이 본인에게 맞는 지 여부, 맞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관에서 바꾸어주기를 희망하는 지 등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시설 입소하기 전, 원하는 경우 반나절 이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 입소하기 전, 반나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② 시설 입소하기 전, 음식과 주거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③ 시설 입소하기 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④ 시설 입소하기 전, 다른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방문권의 4가지 점검내용은 시설 입소하기 전, 내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나절 이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반나절 이상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시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위의 예비방문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 - ①에서 반나절이란 오전 시간대 또는 오후 시간대로 4시간정도를 의미한다. - ②에서 주거공간을 체험한다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게 될 공간을 방문하거나 또는 직접 몇 시간동안 잠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란 직업훈련, 여가문화프로그램 등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형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단, 방문 당시 진행 중인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나만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프로그램실 견학 또는 문서, 동영상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소개받은 것도 위의 3번째 점검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체결권

계약체결권 : 시설 예비 이용자는 입소를 결정하게 되면 시설과 서비스제공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 시설입소를 결정한 예비 이용자는 본인이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시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치료, 거주 공간 등에 대한 권리와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준수해야 할 책임이 담긴 문서화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서비스 제공조건을 예비이용자에게 문서화하여 제공해야 하며,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가 사용할 방
- 전문적 서비스/치료를 포함한 개별지원, 공급되는 시설과 서비스, 개인의 자원을 제한하게 될 정책과 규칙들
-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청구비용,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 또는 서비스 비용
-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내외적 실행 방안
- 시설 외부에서 제공될 서비스

(2) 직원의 역할

- 예비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직원은 최대한 이용자가 시설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하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3) 이용자 및 가족의 역할

- 예비 이용자 및 가족은 계약을 체결하는 동안 계약서에 명문화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위해 기관 또는 직원에게 계약의 명확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에 담긴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준수해야 할 책임까지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지표

점검 지표	시설 입소 시, 서비스 제공조건 등에 대해 문서화된 계약서를 체결했는가?	
점검 내용	① 계약서에는 시설에서 제공될 서비스 종류가 기록되어 있었다.	
	② 계약서에는 이용자인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와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종류가 기록되어 있었다.	
	③ 계약서에는 이용자인 나와 시설의 권리·책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④ 계약서에는 이용자인 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내·외적 실행방안이 기록되어 있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에서 서비스란 시설 내의 자체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설 밖의 지역사회 서비스연계까지 포함한다. - ②에서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의 유형, 비용금액, 비용부담의 이유 등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④에서 실행방안(ex. 인권지킴이단, 진정함 등)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2. 시설 거주단계

1) 의복 선택권

의복 선택권 : 시설 이용자는 자신의 신체특성, 연령, 성, 취향 및 욕구 등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의복을 구입 및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이용자의 의복선택권은 시설이라는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용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의복을 지역사회 의류매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유롭게 지역사회로 나가 의복을 선택 및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기관은 정부가 지원하는 피복비를 반드시 장애인의 피복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자신의 옷을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옷장)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은 일시적으로 단합과 통일성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의복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 스스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옷을 선택 및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 자율적인 의복 선택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직원은 의복 선택 및 구입을 도와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직원 임의대로 의복을 선택 및 구입할 수는 없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율적으로 의복을 선택 및 구입하되, 다른 이용자의 의복을 빌려 입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내가 원하는 옷을 선택 및 구입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시설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옷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설에서 모든 이용자들의 옷을 통일시켜 입히지 않는다.	
	③ 내 옷을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이 있다.	
	④ 내가 원하는 취향의 옷을 구입할 수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에서 인터넷을 통해 옷을 구입하는 것도 포함되며, ‘자유롭게’란 시설 직원 또는 시설장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②에서 일시적으로 단합과 통일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에서 내 소유의 전용 옷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옷장인 경우에도 내 공간이 확보되어 개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 내가 개별 잠금장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잠금장치 없이 내 개별 공간만 확보되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이·미용권

이미용권 : 시설 이용자는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모양 및 화장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이용자의 이미용권은 시설이라는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용자가 지역사회 미용실 등과 같은 장소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머리모양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화장품을 사서 본인의 취향대로 화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지역사회로 나가 자유롭게 머리손질을 하거나 화장품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시설 내외적으로 이용자에게 획일적인 머리모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 스스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머리모양을 하거나 화장품을 선택 및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 자율적인 선택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직원은 머리모양을 결정하거나 또는 화장품을 선택 및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직원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피부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피부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고 화장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내가 원하는 머리모양, 화장품 등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자유롭게 시설 밖으로 나가 원하는 대로 머리 손질을 하거나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설에서 모든 이용자들의 머리모양을 통일시키지 않는다.	
	③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화장할 수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에서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도 포함되며, ‘자유롭게’란 시설직원 또는 시설장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③에서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화장을 하여 피부 부작용이 심해지는 경우에 한해, 시설 및 직원이 기존 방식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화장실 접근권

화장실 접근권 : 시설 이용자는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화장실 접근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가 사생활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최대한 5명 이상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이 동시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실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 방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 기관은 화장실이 사적인 공간이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관은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화장실에 설치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직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화장실 이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점검 기준

점검 지표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점검 내용	①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할 때 안전하다.	
	②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지 않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③ 화장실에는 내게 필요한 보조기구가 있어 이용할 때 편리하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잠금장치는 숙소에 있는 화장실 또는 시설 단체화장실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에서 보조기구란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타일, 화장실 문경사로, 배변을 도와주는 보조기구, 손잡이 등을 포괄한다.	

4) 목욕권

목욕권 :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 및 취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자유 목욕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가 이용자마다 개별화된 목욕시간과 횟수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목욕용품으로 목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성별, 연령, 일상생활 활동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마다 개별화된 목욕시간과 횟수를 보장해야 한다.
- 기관은 욕실이 사적인 공간이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관은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욕실에 설치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직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목욕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점검 기준

점검 지표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욕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②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다.	
	③ 단체로 목욕하지 않는다.	
	④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냉온수로 목욕할 수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욕실과 화장실이 겸용인 경우,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의미한다.</p> <p>②에서 아토피 등 건강상의 문제로 시설이나 직원이 목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p> <p>③에서 ‘단체’란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이용자들에게 한꺼번에 목욕을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p> <p>④는 여름,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냉온수로 목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p>
-------	--

5) 식생활권

<p>건강한 식생활권 : 시설 이용자는 일반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식사시간, 식사방법 및 식사 장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p>
--

- 건강한 식생활권이라 함은 일반가정에서 비장애인들이 식사하는 것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융통성 있는 시간에 영양가 있고 다양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정부에서 보조되는 주식비는 반드시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 기관은 식단을 결정할 때 이용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식이요법, 영양식, 개별식, 치료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사정하고 정기적인 저체중, 비만, 섭식장애 등의 위험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 기관은 최대한 가정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정식을 보장하는 경우 조리활동에 필요한 주방 가전제품, 조리도구, 식재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 반면, 단체식을 보장하는 경우, 이용자 일인당 최저 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평상 시 이용자의 식생활 습관을 관찰하여 개인별 선호음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음식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다만, 편식, 폭식, 식욕부진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간호사 또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이용자의 식습관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임의로 이용자의 식습관을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신의 식단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편식, 폭식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내게 필요한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식사는 균형있는 식단으로 제공받고 있다.	
	② 식단을 결정할 때 나의 개별적인 특성과 선호음식이 반영된다.	
	③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식사할 수 있다.	
	④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균형있는 식단이란 건강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의미한다.</p> <p>②에서 내 병력(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을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식단대신 치료식을 주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③에서 밤 12시, 새벽 4시 등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식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식사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식사 시간대 내에서 식사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p>	



6) 간식 선택권

간식 선택권 : 시설 이용자는 자신의 기호식품 또는 취향에 따라 원하는 간식을 현금으로 직접 구입할 권리를 가진다.

- 간식 선택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간식을 현금으로 자유롭게 구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정부에서 보조되는 간식비는 반드시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 기관은 집단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이용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의 간식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다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병력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간식 선택 및 섭취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임의로 이용자의 간식 종류를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기관의 간식비 또는 개인용돈을 사용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간식을 자유롭게 구입하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병력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최대한 건강에 해가 되는 간식섭취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내가 원하는 간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간식을 내가 직접 사먹을 수 있다.	
	② 내가 원하는 종류의 간식을 먹을 수 있다.	
	③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간식을 먹을 수 있다.	
	④ 간식을 먹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을 시설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사먹는 것을 의미한다. 단, 시설 근처에 마트 또는 슈퍼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용 시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p> <p>②에서 내 병력(고지혈증, 당뇨 등)을 고려하여 내가 원하는 간식을 먹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③에서 밤 12시, 새벽 4시 등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간식을 사먹을 수 있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시간대 내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p>	

7) 주거환경권

쾌적한 주거환경권 : 시설 이용자는 일반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과 구조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쾌적한 주거환경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가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주거환경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반가정과 같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시설 내·외적으로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건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관은 모든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 또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2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침실에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옷장 등의 가구와 생활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의 주거공간을 불특정인에게 개방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개방 시 반드시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신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생활용품 등을 기관에 정확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현재 살고 있는 방의 크기가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 수에 적절하다.	
	② 현재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는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③ 주거 공간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사물함이 있다.	
	④ 내가 원하는 경우 거주할 숙소를 바꿀 수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③에서 나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개별사물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내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개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 내가 개별 잠금장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잠금장치 없이 내 개별 공간만 확보되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④에서 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숙소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옮길 상대 이용자와 함께 새롭게 거주하게 될 기존 이용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 옮길 상대 이용자와 다수의 기존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숙소를 옮기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p>	

8) 건강검진권

건강검진권 : 이용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진다.

- 건강검진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가 매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후원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단기 의료재활 계획을 수립 및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지역사회 보건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후원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지역사회 보건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기관은 약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위한 훈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약물복용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약물사용에 따른 문제 인식 방법과 대처방법
 - 약물을 어떻게 다루고 기록하는지와 관련된 사항
- 기관은 응급 상황 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필요한 구급용품을 상시 준비해야 한다. 또한 기관은 약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상대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 및 구급용품 사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 기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응급약품이 복용되지 않도록 약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가 일반적인 건강관련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일일점검 및 관찰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직원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원은 이용자의 진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용자

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가 자신의 약물을 스스로 보유하고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직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법과 구급용품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지원을 요청하며, 평상 시 건강에 해가 되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진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복용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진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약물을 복용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내 건강을 위해 적절한 치료와 검진을 받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② 나는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다.	
	③ 나는 갑작스럽게 부상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④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건강검진이란 시설밖에 위치한 병원, 의원 등에서 제공받는 검진을 의미한다. ④에서 필요한 교육이란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약물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9) 학대 안전보장권

침해 및 학대 안전보장권 : 이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 및 언어폭행,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침해 및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즉시 침해된 인권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 침해 및 학대 안전보장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가 시설장, 직원 또는 동료 이용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 및 언어폭행,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침해 및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만약 이용자가 침해 및 학대를 받게 된 경우 즉시 침해된 인권이 회복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 이용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조직 및 운영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직원교육은 반드시 전문 인권강사에 의해 연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시설장 및 직원)와 이용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기관은 인권침해 발생 시, 사실 조사, 인권지킴이단 결정 및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기타 법률에 따른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취해 훼손된 인권을 최대한 복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연1회 이상 전문적인 인권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인한 학대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 시 이용자와의 민주적

인 의사소통 방식을 수립해야 한다.

- 신체적 공격에 대한 개입(제지)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오직 훈련된 직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1회 인권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도 다른 이용자에게 신체 및 언어폭행,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다른 이용자, 시설장 또는 직원 등에 의한 학대에 평상 시 안전한가?	
점검 내용	① 나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이용자, 시설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없다.	
	②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어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권침해에 대해 상의할 수 있다.	
	③ 나는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는다.	
	④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즉각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시설 내에 준비되어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②에서 ‘인권지킴이단’이란 직원, 이용자, 이용자 가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보장 관련 기구를 의미한다. ③에서 인권교육에는 시설직원에 의한 교육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④에서 ‘구제절차’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시설장 또는 직원 등과 면담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10) 호칭권

호칭권 : 이용자는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호칭으로 직원에게 불릴 권리를 가진다.

- 호칭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호칭으로 직원에게 불릴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태도 및 자질에 대한 자체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함부로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호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태도 및 자질에 대한 자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3)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직원에게 불리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 직원은 내게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다.	
	② 시설 직원은 내게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 지 확인한다.	
	③ 시설직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부른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시설직원은 나의 나이에 상관없이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②에서 시설 입소 초기 시설직원이 시설 내에서 이용자에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호칭을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금품 처분 및 신분증 소지권

금품 처분권 및 신분증 소지권 : 이용자는 자신의 물품과 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금품처분 및 신분증 소지권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가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돈을 시설장 또는 직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금품에는 이용자가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포함된다. 또한 본인의 신분증을 시설장 또는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소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 또는 개인 후원금을 시설 통장이 아닌 이용자 개인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자가 쉽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근로소득액은 전액 이용자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액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신분증을 원칙적으로 본인이 소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은 이용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중립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
- 직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자신의 물품과 돈을 처분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소유의 금품과 신분증을 소지 및 관리하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국가보조금을 내 개인통장으로 관리한다.	
	② 나는 내 금품을 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나는 내 신분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	
	④ 나는 일했을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내 개인통장으로 관리한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국가보조금은 기초수급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p> <p>②에서 금품이란 돈, 물건 등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금전과 물품을 의미한다.</p> <p>③의 경우 대리인에게 신분증을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p> <p>④에서 근로소득이 별도로 없는 경우, 인권보장상태는 위 14번을 준용한다. 즉, 금품처분 및 신분증 소지권은 점검내용이 원래 점검내용이 4개이기 때문에, 인권보장상태가 4개를 모두 충족해야 3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④에서 근로소득이 별도로 없는 경우 점검내용이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권보장상태도 위의 14번처럼 3개를 충족하면 3점, 2개는 2점, 1개는 1점을 부여하면 된다. 아래의 27번지표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p>	

12) 서비스 보장권

서비스 보장권 : 이용자는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 실행 및 서비스 평가 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 및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서비스 보장권이라 함은 시설 이용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실행 및 서비스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또한 시설 이용자의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한된 시설 내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개별적 재활·자립 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최대한 부담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계획수립, 실행 및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회의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가급적 통합적 지역사회 속에서 프로그램을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
 -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설의 유형
 - 지역의 대중교통, 장애인용 콜택시, 특별 장애인교통수단 등의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
 - 이용 가능한 지역 활동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서비스 선택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 및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단,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원은 최대한의 관찰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찾아 적합한 서비스를 기획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서비스 이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은 이용자가 지역사회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



통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용 시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또는 집단 토론, 서비스 이용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목표설정부터 종결까지의 서비스 전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	
	② 나는 시설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나는 서비스 참여에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와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시설 직원은 서비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②에서 시설 밖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교실, 체육활동, 여가·문화 활동 등을 포괄한다. ③에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이란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자원봉사자, 시설 직원 등을 포괄한다.	

13) 종교 생활 보장권

종교생활 보장권 :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선택한 종교생활에 제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종교 생활 보장권이라 함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종교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둔 기관일지라도 이용자에게 이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입소생활이나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또한 기관의 종교이념에 맞지 않는 타 종교를 선택할 지라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가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직원은 이용자가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선택하며, 종교생활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직원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은 내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② 종교를 선택할 때 시설 직원은 내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③ 종교의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강요에는 내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강요하거나 또는 시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는 것들을 포함한다.</p> <p>③에서 별도의 불이익에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참여 제한 등을 의미한다.</p>
-------	--

14) 지역사회 접근권

<p>지역사회 접근권 : 이용자는 가족을 비롯한 외부방문자와 자유롭게 시설 내에서 만날 수 있고, 또한 이용자 스스로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용자는 외부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 지역사회 접근권이라 함은 이용자의 가족을 비롯한 외부사람들이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자와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이용자가 지역사회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용자가 공중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개방화를 촉진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가족을 비롯한 외부사람들이 시설을 방문한 경우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기관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용자 또는 스스로 시설로 돌아오기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보조기구와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또는 공용전화기 1대 이상을 시설장 또는 직원 숙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설치 및 개방해야 한다. 특히 감각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맞는 개인용 컴퓨터를 구비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가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 형성기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대인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형성기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자유롭게 시설 밖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다.	
	② 가족 또는 친구 등이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지원받고 있다.	
	③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휴대폰을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다.	
	④ 나는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밤 12시, 새벽3시 등 단체생활에서 통상적인 시간대가 아닌 시간은 제외한다. ②에서 ‘자유롭게’란 시설장, 직원 및 다른 이용자에게 간섭 또는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③에서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에서 숙소 내에 공용컴퓨터 또는 단체 컴퓨터실이 있어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5) 성생활 보장권

성생활 보장권 : 이용자의 성적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이용자는 연 1회 이상 시설로부터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성생활 보장권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성적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이용자가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성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성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이용자의 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기관은 연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기관은 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성교육용 기자재 및 교육용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의 성적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성인식과 성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며 성교육 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 직원은 다음과 같이 특별히 성생활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제한 이유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이용자의 성적 욕구나 표현이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 낙태 또는 불임시술과 같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직원은 이용자에게 대한 성교육 내용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용자에게 대한 성적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의 성적 권리는 보장받는가?	
점검 내용	① 직원은 나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한다.	
	② 시설 또는 직원은 나의 성적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③ 나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 시설이나 직원은 그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나의 동의를 구한다.	
	④ 시설은 내게 년 1회 이상 성교육을 제공해 준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나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성과 반대되는 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내 성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남성처럼 대하거나 또는 내가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한다.</p> <p>③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나의 성생활이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 등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를 의미한다.</p> <p>④에서 성교육은 시설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p>	



16) 가족생활 보장권

가족생활 보장권 : 이용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혼할 수 있으며, 부부는 그들만의 별도의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결혼한 이용자가 자녀를 임신, 출산 및 양육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녀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연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가족생활 보장권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가 되면 시설 내에서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처럼 결혼한 장애인인 이용자도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는 자녀를 자신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가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끼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그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임신, 출산 및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해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개발 및 연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부부생활에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에게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부인 경우에 한해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점검 기준

점검 지표	가족을 꾸리고 싶은 권리가 보장받는가?	
점검 내용	① 내가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	
	② 내가 다른 이용자와 결혼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별도의 우리 부부만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준다.	
	③ 시설 또는 직원은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시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해준다.	
	④ 시설 또는 직원은 자녀 출산 시,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를 내게 부여해 준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또는 자녀양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에서 별도의 공간이란 다른 이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둘 또는 부부와 자녀들끼리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④에서 양육권에는 부모가 아무리 중증장애인일지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자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17) 자립생활 지원권

<p>자립생활 지원권 : 퇴소, 자립, 결혼, 일반 취업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이용자가 지역사회로 독립한 경우 이용자는 시설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

- 자립생활 지원권은 이용자가 퇴소, 자립, 결혼, 일반 취업 등의 사유로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살아가는 경우, 시설로부터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가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자립생활 체험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 체험홈을 최대한 준비해야 하며, 일정정도의 가퇴소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시설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것보다 시설 인근의 자립생활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인근 자립생활센터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내가 지역사회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은 내가 지역사회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역사회 삶의 장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려준다.	
	② 시설은 내가 지역사회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도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준다.	
	③ 시설은 시설 내 또는 지역사회에 별도의 체험 홈을 운영하여 나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려고 노력한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퇴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②에서 서비스와 도움에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과 같은 민간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 ③에서 체험 홈이란 지역사회의 가정집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그곳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

18)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 :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생계급여, 장애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대상자일 경우 이에 합당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회보장 수급권은 이용자가 자신의 장애유형, 정도, 연령, 성별, 소득 등에 따라 적합한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또한 이용자의 수급권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책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 급여를 투명하게 관리 및 집행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책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 또는 직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준다.	
점검 내용	② 시설 또는 직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내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③ 내게 직접 제공되는 급여는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②, ③에서 복지시책, 사회보장제도, 급여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각종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직접급여로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제도와 급여를 포함한다. - ③의 경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한 금전관리 위임이 있을 경우 개인이 관리한다고 인정한다. 	

19) 교육 보장권

교육 보장권 : 이용자는 동일연령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용자는 평생학습을 통한 특별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 보장권은 이용자가 동일연령대의 비장애인처럼 정규교육 및 학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이용자는 기관에게 다양한 교육방식과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요청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용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자가 평생학습을 통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학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교육수준 및 교육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지원하고 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기구 및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특별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기구 및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에게 대한 교육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직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신의 능력과 장애정도 그리고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욕구, 능력,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특별교육 내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내가 희망하는 형태의 정규교육 또는 평생교육 등을 제공받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 또는 직원은 나의 학력, 교육수준 및 교육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② 시설 또는 직원은 내가 희망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해 준다.	
	③ 시설 또는 직원은 내가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형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준다.	
	④ 시설 또는 직원은 내가 교육에 대한 욕구를 드러낼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며, 내게 적합한 교육방식을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설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도 포함된다. ②에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에는 학교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된다. ③에서 교육 형태에는 정규교육 또는 평생교육 등의 형태를 의미한다.	

20) 직업선택권

직업선택권 : 이용자는 직업능력 평가 및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직업선택권은 성인기에 도달한 이용자가 비장애인처럼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교육 및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기관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전문적인 직업능력 평가 및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직업에 대한 욕구와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 기관에 필요한 각종 다양한 기능훈련을 취업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직업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직업훈련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취업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자신의 장애유형 및 정도, 개별 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내가 희망하는 형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 또는 직원은 직업능력 평가 및 상담을 통해 나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② 시설 또는 직원은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③ 시설 또는 직원은 나의 직업교육 및 직업선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 위의 ①, ②, ③에서 직업선택은 시설 내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의 근로도 포함된다.	



21) 적정 보수권

적정 보수권 : 이용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가로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적정 보수권은 이용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가로 보수를 인식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가 본인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취업업체와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대변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보수가 자신의 노동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내 노동에 대해 적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취업체와의 관계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내 스스로 충분한 의사표현 및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원이 내 대변자 역할을 수행해 준다.	
	② 내 보수는 내 개인통장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다.	
	③ 나는 내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 위의 노동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위의 ①, ②, ③에서 보수는 시설 내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의 근로도 포함된다.	

22) 정치권

정치권 : 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용자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정치권은 이용자가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선거 또는 투표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용자가 올바른 선거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지원함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며, 이용자가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선거 또는 투표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선거관련 정보접근에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의 장애정도 및 능력에 맞는 적합한 선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직원은 시설 내 투표의 경우,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가 선거관련 정보접근에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선거 또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는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가 보장받아야 할 문화권이라 함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는 등 일상적인 문화 활동에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매체 이용 및 문화시설과 서비스 이용에의 접근성 보장이 포함된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시설 내외에서 정치적 의사 또는 소신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받는다.	
	② 나는 선거 또는 투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설 또는 직원은 나의 선거권 또는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④ 시설 또는 직원은 선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 ③에서 참정권, 피선거권, 선거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원에는 교통수단 제공, 동행 등이 포함된다. - ④에서 필요한 정보란 투표소의 장소,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24) 문화권

문화권 : 이용자는 자유로운 문화, 예술, 체육 등 여가활동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 문화권은 이용자에게 비장애인처럼 본인이 원하는 문화활동, 예술 및 체육 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가 시설의 내·외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여가를 향유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조기구 및 보조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가 시설 외부에서 일 년에 최소한 4일 이상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의 자신의 관심과 취미를 고려하여 여가활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자유롭게 일상생활에서 문화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자유롭게 영화관람, 쇼핑,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다.	
	② 내가 시설 밖에 나가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을 때, 시설 또는 직원은 내가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해 준다.	
	③ 나는 시설 내에서 TV, 인터넷, 라디오, 독서 등을 통해 내가 원하는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④ 나는 일 년에 최소한 4회 이상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 ②에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에는 교통수단 제공, 휠체어 제공, 자원 봉사자 또는 직원 동행 등이 포함된다. - ④에서 나들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인권보장상태는 위 26번을 준용한다.	



25) 시설운영 참여권

시설운영 참여권 : 이용자는 시설생활 및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시설운영 참여권은 이용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이용자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시설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설운영위원회에 최소한 2인 이상의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시설운영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기관은 이의제기 단계별 절차와 일정 등이 포함된 명백하고 효과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어떻게 누구에게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기관은 이용자가 제기한 모든 불만에 대해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시설생활에서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시설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언제든지 시설생활 및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나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시설생활 및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나는 시설 내에서 시설장 또는 직원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4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자유롭게'란 시설장 또는 직원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②에서 운영위원회란 시설장, 직원, 이용자대표, 가족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설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의미한다. ③에서 수평적인 관계라 함은 시설장 또는 직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시설 퇴소단계

1) 퇴소 결정권

<p>퇴소 결정권 :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

- 퇴소 결정권은 이용자가 시설에서 퇴소함에 있어서 시설장 또는 직원의 의견보다 이용자 본인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퇴소절차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퇴소를 앞둔 이용자와의 퇴소상담 실시
- 퇴소 적격성 여부에 대한 퇴소 심사 실시
- 퇴소 준비 지원
- 이용자 퇴소 후 기본적인 사후관리
-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퇴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기관은 원가정이 있는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할 때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 기관은 원가정이 없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용자가 퇴소를 희망하면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적 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퇴소 후 직면하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과 과업들에 대해 이용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인근의 자립생활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퇴소 결정에 있어서,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 지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한 후 퇴소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가 만약 퇴소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합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 이용자는 퇴소를 연기하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설 인근 자립생활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향후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자유롭게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 또는 직원은 퇴소에 대한 나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 준다.	
	② 시설 또는 직원은 내가 퇴소할 때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해준다.	
	③ 퇴소를 결정할 때, 시설장, 직원 또는 가족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이 가장 많이 고려되어 진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②에서 정보에는 주택시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③에서 가족 또는 친척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는 가족의 의견은 해당되지 않는다.	

2) 시설 변경권

시설 변경권 : 이용자는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로 옮길 권리가 있다.

- 시설 변경권은 이용자가 현재의 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본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1) 기관의 역할

- 기관은 시설을 옮기려는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정보, 진행과정 및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 기관은 시설을 결정할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2) 직원의 역할

- 직원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정보, 진행 과정 및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역할

- 이용자는 자신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향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시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4) 점검 기준

점검 지표	나는 자유롭게 시설을 옮길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현재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② 시설 또는 직원은 내게 시설을 옮길 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준다.	
	③ 시설 또는 직원은 내가 시설을 옮기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자유롭게'란 내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다른 시설을 옮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은 이용자의 생애주기의 변화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로 인해 거주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사자용 인권보장 점검지표〉

I. 시설선택 및 입소단계

1. 정보수급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시설 선택 시, 예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점검 내용	① 기본적인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② 시설이 예비 이용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③ 시설 내에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기본적인 시설현황에는 시설 운영목적, 입소정원, 직원현황, 서비스 종류 및 추가 비용, 입·퇴소절차 등이 포함된다.</p> <p>③에서 이용자의 권리란 시설 선택 및 입소부터 퇴소하기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제반 권리를 의미한다.</p>	



2. 예비 방문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시설 입소하기 전, 예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반나절 이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점검 내용	① 시설 입소하기 전, 반나절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② 시설 입소하기 전, 음식과 주거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③ 시설 입소하기 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④ 시설 입소하기 전, 다른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였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방문권의 4가지 점검내용은 시설 입소하기 전,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나절 이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반나절 이상의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시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위의 예비방문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 - ①에서반나절이란 오전 시간대 또는 오후 시간대로 4시간 정도를 의미한다. - ②에서 주거공간을 체험한다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게 될 공간을 방문하거나 또는 직접 몇 시간동안 잠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란 직업훈련, 여가문화프로그램 등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형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단, 방문 당시 진행 중인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예비 이용자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프로그램실 견학 또는 문서, 동영상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도 위의 3번째 점검내용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3. 계약체결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시설 입소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조건 등에 대해 문서화된 계약서를 체결하였는가?	
점검 내용	① 계약서에 시설에서 제공될 서비스 종류를 기록하였다.	
	② 계약서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와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종류를 기록하였다.	
	③ 계약서에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책임을 명시하였다.	
	④ 계약서에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내·외적 실행방안을 기록하였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서비스란 시설 내의 자체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설 밖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까지 포함한다.</p> <p>②에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의 유형, 비용금액, 비용부담의 이유 등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p> <p>④에서 실행방안(ex. 인권지킴이단, 진정함 등)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p>	



II. 시설거주 단계

4. 의복선택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원하는 옷을 선택 및 구입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시설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옷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② 모든 이용자의 옷을 통일시켜 입히지 않는다.	
	③ 이용자들이 자신의 옷을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을 제공하였다.	
	④ 이용자가 원하는 취향의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인터넷을 통해 옷을 구입하는 것도 포함되며, ‘자유롭게’란 시설 직원 또는 시설장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p> <p>②에서 일시적으로 단합과 통일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에서 개별 이용자 소유의 전용 옷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옷장인 경우에도 내 공간이 확보되어 개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 이용자가 개별 잠금장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잠금장치 없이 이용자 개별 공간만 확보되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p>	

5. 이·미용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원하는 머리모양, 화장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자유롭게 시설 밖으로 나가 원하는 대로 머리 손질을 하거나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모든 이용자들의 머리모양을 통일시키지 않는다.	
	③ 이용자가 원하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도 포함되며, ‘자유롭게’란 시설직원 또는 시설장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③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화장을 하여 피부 부작용이 심해지는 경우에 한해, 시설 및 직원이 기존 방식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6. 화장실 접근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점검 내용	① 화장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때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②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③ 화장실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비하여 이용자가 이용할 때 편리하도록 해주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잠금장치는 숙소에 있는 화장실 또는 시설 단체화장실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에서 보조기구란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타일, 화장실 문경사로, 배변을 도와주는 보조기구, 손잡이 등을 포괄한다.	



7. 목욕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욕실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목욕할 때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②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목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용자를 단체로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④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냉온수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욕실과 화장실이 겸용인 경우,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의미한다. ②에서 아토피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목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에서 ‘단체’란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이용자들에게 한꺼번에 목욕을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는 여름,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원할 때 냉온수로 목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8. 식생활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에게 필요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에게 식사는 균형있는 식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② 식단을 결정할 때 이용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선호음식을 반영한다.	
	③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이용자에게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균형있는 식단이란 건강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의미한다. ②에서 이용자의 병력(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식단 대신 치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에서 밤 12시, 새벽 4시 등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식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식사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식사 시간대 내에서 식사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9. 간식 선택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원하는 간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간식을 이용자가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용자가 원하는 종류의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이용자에게 간식을 먹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이용자가 먹고 싶은 간식을 시설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사먹는 것을 의미한다. 단, 시설 근처에 마트 또는 슈퍼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용 시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으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p> <p>②에서 이용자의 병력(고지혈증, 당뇨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간식을 먹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③에서 밤 12시, 새벽 4시 등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간식을 사먹을 수 있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시간대 내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p>	

10. 주거환경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현재 거주하는 방의 크기가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 수에 적절하도록 하였다.	
	② 현재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잘 구비해 놓았다.	
	③ 주거 공간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사물함을 지원하고 있다.	
	④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주할 숙소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③에서 이용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개별사물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개별 이용자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개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단, 이용자가 개별 잠금장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잠금장치 없이 개별 공간만 확보되어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④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숙소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숙소를 옮길 상대 이용자와 함께 새롭게 거주하게 될 기존 이용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 옮길 상대 이용자와 다수의 기존 이용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숙소를 옮기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p>	



11. 건강보장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치료와 검진을 제공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에게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② 이용자가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③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부상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④ 이용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건강검진이란 시설밖에 위치한 병원, 의원 등에서 제공받는 검진을 의미한다. ④에서 필요한 교육이란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약물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12. 개인위생 보장권

점검 지표	이용자가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사용하는 전용 칫솔과 양치컵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청결히 관리되고 있다.	
	② 이용자가 사용하는 침구와 베개는 정기적인 세탁과 일광소독을 통해 청결히 관리되고 있다.	
	③ 이용자가 사용하는 의복은 정기적인 세탁을 통해 청결히 관리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는 이용자 1인 1개의 칫솔과 양치컵을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놓은 상태를 말하며, 세척 및 건조 상태가 청결히 관리되고 있음을 말한다. ②의 정기적인 세탁과 일광소독은 시설에서 비치되어 있는 침구관리에 대해 규정화 된 부분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청결히 관리되고 있음을 말한다. ③의 경우, 개별옷장에 정리되어진 의복이 관리가 청결히 되고 있음을 말한다.	

13. 학대 안전보장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 시설장 또는 직원 등에 의한 학대로부터 평상 시 안전한가?	
점검 내용	① 우리 시설은 지난 1년 동안 다른 이용자, 시설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당한 이용자가 없다.	
	② 우리 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이 설치되어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권침해에 대해 상의할 수 있다.	
	③ 우리 시설은 이용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④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즉각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시설 내에 준비되어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②에서 '인권지킴이단'이란 직원, 이용자, 이용자 가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보장 관련 기구를 의미한다.</p> <p>③에서 인권교육에는 시설직원에게 의한 교육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p> <p>④에서 '구제절차'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시설장 또는 직원 등과 면담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p>	

14. 호칭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직원에게 불리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이용자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는다.	
	② 나는 이용자에게 관심을 갖고 이용자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 지 확인하고 있다.	
	③ 나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부른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시설직원이 이용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p> <p>②에서 시설 입소 초기 시설직원이 시설 내에서 이용자에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호칭을 설명하고 이용자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p>	



15. 금품 처분 및 신분증 소지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소유의 금품과 신분증을 소지 및 관리하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국가보조금을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이용자가 자신의 금품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이용자가 일했을 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이용자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국가보조금은 기초수급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p> <p>②에서 금품이란 돈, 물건 등 이용자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금전과 물품을 의미한다.</p> <p>③의 경우 대리인에게 신분증을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p> <p>④에서 근로소득이 별도로 없는 경우, 인권보장상태는 위 14번을 준용한다. 즉, 금품처분 및 신분증 소지권은 점검내용이 원래 점검내용이 4개이기 때문에, 인권보장상태가 4개를 모두 충족해야 3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④에서 근로소득이 별도로 없는 경우 점검내용이 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권보장상태도 위의 14번처럼 3개를 충족하면 3점, 2개는 2점, 1개는 1점을 부여하면 된다. 아래의 27번지표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p>	

16. 서비스 보장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이용자가 시설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이용자에게 서비스 참여에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와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④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②에서 시설 밖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교실, 체육활동, 여가·문화 활동 등을 포괄한다. ③에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이란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자원봉사자, 시설 직원 등을 포괄한다.	

17. 종교생활 보장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가 종교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③ 이용자가 종교의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강요에는 이용자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강요하거나 또는 시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③에서 별도의 불이익에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참여 제한 등을 의미한다.	



18. 지역사회 접근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자유롭게 시설 밖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외출을 허락하고 있다.	
	② 이용자 가족 또는 친구 등이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③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휴대폰을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4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밤 12시, 새벽3시 등 단체생활에서 통상적인 시간대가 아닌 시간은 제외한다. ②에서 ‘자유롭게’란 시설장, 직원 및 다른 이용자에게 간섭 또는 방해 받지 않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③에서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에서 숙소 내에 공용컴퓨터 또는 단체 컴퓨터실이 있어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 성생활 보장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나는 이용자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한다.	
	② 이용자의 성적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도한다.	
	③ 이용자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용자의 동의를 구한다.	
	④ 이용자에게 년 1회 이상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이용자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의 성과 반대되는 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용자의 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처럼 대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한다. ③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이용자의 성생활이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 등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를 의미한다. ④에서 성교육은 시설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20. 가족생활 보장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의 가족을 꾸리고 싶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지해준다.	
	②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결혼하는 경우, 별도의 부부 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③ 이용자에게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시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해 주고 있다.	
	④ 이용자가 자녀 출산 시,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 위의 경우, 결혼 또는 자녀양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p> <p>②에서 별도의 공간이란 다른 이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 둘 또는 부부와 자녀들끼리만 함께 살아가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p> <p>④에서 양육권에는 부모가 아무리 중증장애인일지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자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p>	

21. 자립생활 지원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지역사회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지역사회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역사회 삶의 장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② 이용자가 지역사회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도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③ 시설 내 또는 지역사회에 별도의 체험 홈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②에서 서비스와 도움에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과 같은 민간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p> <p>③에서 체험 홈이란 지역의 가정집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그곳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p>	



22. 사회보장수급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받아야 할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주고 있다.	
	②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③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급여는 이용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4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 ②, ③에서 복지시책, 사회보장제도, 급여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각종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직접급여로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제도와 급여를 포함한다. ③의 경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한 금전관리 위임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관리한다고 인정한다.	

23. 교육보장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희망하는 형태의 정규교육 또는 평생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의 학력, 교육수준 및 교육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②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다.	
	③ 이용자가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형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④ 이용자가 교육에 대한 욕구를 드러낼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며, 해당 이용자에게 적합한 교육방식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설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도 포함된다. ②에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에는 학교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된다. ③에서 교육 형태에는 정규교육 또는 평생교육 등의 형태를 의미한다.	

24. 직업선택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희망하는 형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직업능력 평가 및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직업교육 및 직업선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 위의 ①, ②, ③에서 직업선택은 시설 내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의 근로도 포함된다.	

25. 적정보수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본인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취업체와의 관계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용자 스스로 충분한 의사표현 및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의 대변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이용자의 보수는 이용자 개별 개인통장으로 스스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 위의 노동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p> <p>- 위의 ①, ②, ③에서 보수는 시설 내 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의 근로도 포함된다.</p>	



26. 정치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는 시설 내외에서 정치적 의사 또는 소신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받고 있다.	
	② 이용자가 선거 또는 투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이용자의 선거권 또는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④ 이용자에게 선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③에서 참정권, 피선거권, 선거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원에는 교통수단 제공, 동행 등이 포함된다. ④에서 필요한 정보란 투표소의 장소,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27. 문화권(기본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자유롭게 일상생활에서 문화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자유롭게 영화관람, 쇼핑, 운동 등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이용자가 시설 밖에 나가 문화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을 때, 시설 또는 직원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해 준다.	
	③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TV, 인터넷, 라디오, 독서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다.	
	④ 이용자에게 일 년에 최소한 4회 이상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총족(3점)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 ②에서 보조기구 또는 보조 인력에는 교통수단 제공, 휠체어 제공, 자원 봉사자 또는 직원 동행 등이 포함된다. - ④에서 나들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인권보장상태는 위 26번을 준용한다.	

28. 절차적 권리(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가 시설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가 언제든지 시설생활 및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이용자가 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시설생활 및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장 또는 직원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p>①에서 ‘자유롭게’란 시설장 또는 직원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용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p> <p>②에서 운영위원회란 시설장, 직원, 이용자대표, 가족대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설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의미한다.</p> <p>③에서 수평적인 관계라 함은 시설장 또는 직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p>	



Ⅲ. 시설퇴소 단계

29. 퇴소결정권(핵심지표)

점검 지표	이용자는 자유롭게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의 퇴소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 준다.	
	② 이용자가 퇴소할 때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이용자가 퇴소를 결정할 때, 시설장, 직원 또는 가족의 의견보다 이용자의 의견이 가장 많이 고려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4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②에서 정보에는 주택시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③에서 가족 또는 친척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는 가족의 의견은 해당되지 않는다.	

30. 시설변경권(기본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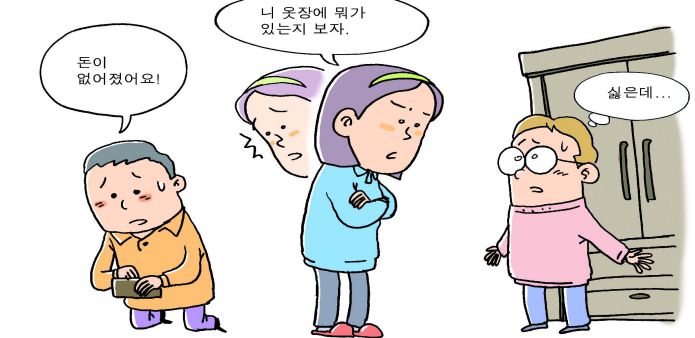
점검 지표	이용자는 자유롭게 시설을 옮길 수 있는가?	
점검 내용	① 이용자는 현재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시설을 옮길 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③ 이용자가 시설을 옮기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인권보장 상태	충족(3점)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2점)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불량(1점)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지표 설명	①에서 '자유롭게'란 이용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다른 시설을 옮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은 이용자의 생애주기의 변화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로 인해 거주시설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이용 인권보장 점검지표〉

1. 시설에서 다른 이용자 혹은 직원에게 맞은 적이 있었나요?

	○	×

2. 시설직원이 내 옷장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열어보거나 만진 적이 있었나요?

	○	×

3. 시설직원이 함부로 반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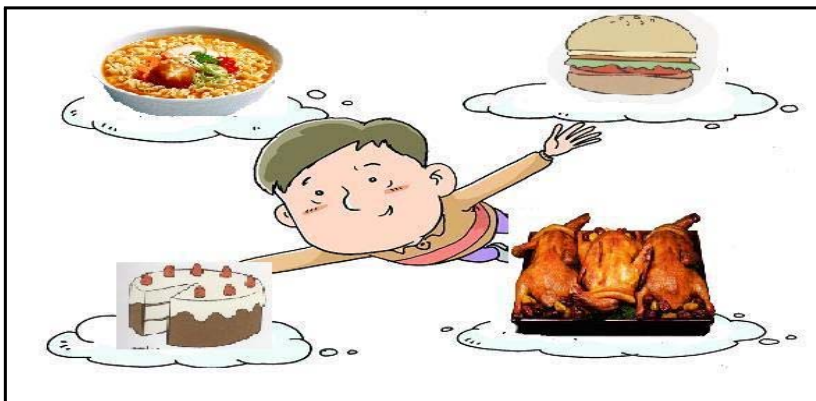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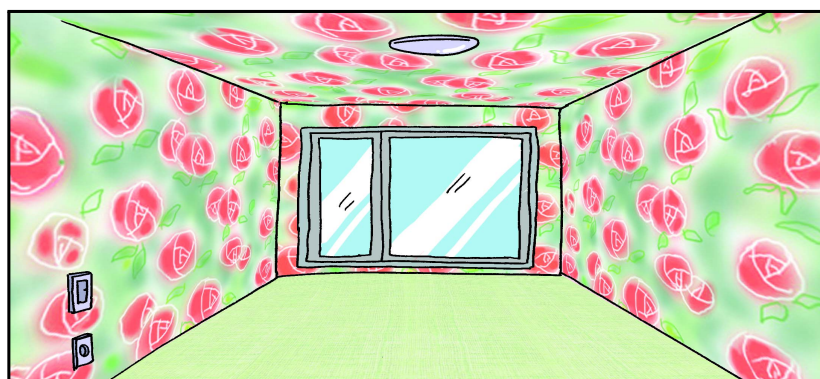
4.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나요?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5. 내가 원하는 음식이나 간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나요?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6.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편안한가요?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7. 시설직원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필요한 도움을 주었나요?

	○	×

8. 시설직원은 내가 요구할 때 내 통장이나 돈을 확인시켜주었나요?

 <p>은행 이용하기</p>	○	×
		



9. 매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	--	--	--

10. 시설직원이 진정함에 대해 설명해 주었나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	--

5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1. 사례관리

■ 기준 1 사례관리 체계

○ 세부기준 1.1.1 : 사례관리 운영체계

세부기준	세부내용
1.1.1 사례관리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에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별맞춤지원 체계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복지관 내 사례관리 체계에 관한 문서화된 지침 마련 - 정기적인 복지관 내 통합된 사례관리 회의 운영 - 전문 인력 배치와 사례관리에 대한 적절한 슈퍼비전 제시

○ 세부기준 1.1.2 : 사례관리 실행

세부기준	세부내용
1.1.2 사례관리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별맞춤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규 사례 적극적 발굴 - 장애인 또는 가족(보호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의 사례관리 동의서 보관 - 시간 순서에 따라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사정, 사정회의(재활계획회의), 통보 및 동의, 서비스 제공, 사례회의, 종결, 사후지원의 체계적 제공과 그에 따른 기록



■ 기준 2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자원

○ 세부기준 1.2.1 : 지역사회자원 활용

세부기준	세부내용
1.2.1 지역사회 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완전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통합을 이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관리 - 지역사회 연계형 통합사례회의 참여 또는 운영 -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연계

2. 서비스

■ 기준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 세부기준 2.1.1 : 서비스 이용자 안내

세부기준	세부내용
2.1.1 서비스 이용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장애 특성에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받는다. -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관 안내서의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목적 ■ 서비스 내용, 대상, 기간, 비용 ■ 법적 자격을 충족하는 관리자와 담당 직원의 자격증과 경력 ■ 이용자 권리에 대한 설명 ■ 이의제기 절차 - 장애인복지관은 운영목적, 목표, 철학,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제공 조건 등에 대한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목적을 문서로 작성 -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정보는 예비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적절한 형식(적절한 언어, 그림,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된 설명)으로 제공 - 서비스 상담에 필요한 기본자료, 자원목록 등의 구비

○ 세부기준 2.1.2 : 이용 상담

세부기준	세부내용
2.1.2 이용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은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 장애인복지관은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비 이용자 및 가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인적 사항 ▪ 의사소통 방법 ▪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내용과 형태 ▪ 필요한 치료, 교육, 훈련과 재활프로그램 등 ▪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 ▪ 위험요소 ▪ 소득 ▪ 장애관련 필요 보조기구 ▪ 신체적, 정신적 보건 케어 등



■ 기준 2 | 개인의 욕구와 선택

○ 세부기준 2.2.1 : 욕구 사정

세부기준	세부내용
2.2.1 욕구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가 사정되고, 욕구의 변화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 사정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확인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병력, 심리적, 사회적 정보 ■ 이전에 제공받은 직접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 필요시 관련 전문가에게 이용자에 관한 평가 요청 - 욕구 사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 능력, 욕구, 선호도 등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목표의 변화 ▪ 관련 전문 분야로부터 입수된 새로운 정보 ▪ 기타 이용자로부터 확인된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욕구 사정과 결과의 기록 및 보관 - 이용자가 원할 경우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 의해 사회, 교육, 언어, 심리, 직업영역 등의 사정 시행 - 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 기능(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정의 내용과 형태를 갖추 - 사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문서로 제공하며, 결과를 개별서비스 이용 계획에 반영

○ 세부기준 2.2.2 : 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세부기준	세부내용
2.2.2 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욕구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시간, 이용료, 서비스 과정, 이용자 권리 등이 기록된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친구, 권익옹호자, 보조인,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함 -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에는 제공 될 서비스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정결과로부터 도출된 계획 ■ 필요한 경우 서비스 선택과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 설명과 내용 합의 ■ 공격적이거나 남을 해하거나 자해할 성향이 높은 이용자를 위한 개별화된 조치사항 및 절차 확립 -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은 주기적인 점검, 평가결과에 의해 조정, 반영해야 함 -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은 이용자 욕구와 지원되는 서비스 기능(기능강화, 가족지원, 권익옹호, 직업, 문화여가, 사회서비스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내용과 형태를 갖춘 -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에는 서비스 목표, 서비스 과정과 방법, 제공기간, 서비스 시간, 이용료, 이용자 권리 등이 기록된 서비스 계약서를 함께 작성



■ 기준 3 능력개발

○ 세부기준 2.3.1 : 기능강화,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2.3.1 기능강화,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기능강화 및 교육과 직업,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등의 지원을 받는다. - 능력개발 증진을 위한 각종 기능강화 서비스 지원 - 생애주기별 교육과 직업적인 기회를 위한 지원 -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 기준 4 지역생활지원

○ 세부기준 2.4.1 :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2.4.1 가족, 문화여가, 생활환경, 사회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질 만족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 가족기능강화와 양육지원, 가족 내 역할 증진을 위한 가족 지원 - 삶의 질 만족과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문화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빈곤, 건강, 생활 및 주거환경 등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에 의한 지원 - 발달지원 및 일상생활 증진과 사회참여 증대를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지원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기준 1 개인정보 보호

○ 세부기준 3.1.1 : 개인정보 보호

세부기준	세부내용
3.1.1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개인의 모든 정보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이용자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문서화된 지침 또는 규정 구비 -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관리 - 개인파일, 전산프로그램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잠금 장치 설치

■ 기준 2 정보제공

○ 세부기준 3.2.1 : 서비스 정보 제공

세부기준	세부내용
3.2.1 서비스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등을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서비스 목적, 내용, 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물의 비치 및 제공) - 장애인복지관내에 안내데스크 또는 안내판 설치 - 홈페이지 운영 및 소식지를 통해 정보 제공 - 상담이나 복지관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지정 - 이용자의 특수성을 배려하는 정보 표기



○ 세부기준 3.2.2 : 이용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제공

세부기준	세부내용
3.2.2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명백히 보장을 받아야 하며, 또한 이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의 명문화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또는 가족(혹은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 및 상시 게시

■ 기준 3 참여증진

○ 세부기준 3.3.1 : 이용자 참여증진

세부기준	세부내용
3.3.1 이용자 참여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요구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정기적인 이용자 간담회 혹은 이용자모니터위원회(혹은 이용자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혹은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회의 내용의 공개

■ 기준 4 고충처리

○ 세부기준 3.4.1 : 고충처리 방침 및 절차

세부기준	세부내용
3.4.1 고충처리방 침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과 민원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고충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고충처리 접수 및 과정, 처리기간 등의 문서화 -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 지정 - 고충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고충처리에 대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의 문서화 - 홈페이지, 건의함 등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기준 5 차별금지 및 인권옹호

○ 세부기준 3.5.1 : 차별금지 및 노력

세부기준	세부내용
3.5.1 차별금지 및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 받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권리침해와 구제 등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지역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 및 권리침해와 관한 다양한 활동 및 지원(무료법률상담, 지역 관련 위원회 참석, 관련 캠페인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활동 등)

○ 세부기준 3.5.2 : 인권옹호

세부기준	세부내용
3.5.2 인권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등에 참석하여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보호와 권리보장을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옹호, 학대 및 괴롭힘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발생시 처리 과정 등의 문서화 -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의 장애인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



4. 지역사회 네트워크

■ 기준 1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세부기준 4.1.1 : 지역장애인 정책 및 복지서비스 확대

세부기준	세부내용
4.1.1 지역장애인 정책 및 복지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에 참여 및 활동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장애인복지정책 수립에 참여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관련된 각종 회의 참석 및 지원활동(조사, 연구, 현장의견 제시 등) ■ 장애인복지관련 정책 제언(서면, 회의 참석 등) ■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 지지활동 및 캠페인 - 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및 공동으로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등 ■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별 또는 공동 조사 및 연구 ■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 형성

○ 세부기준 4.1.2 : 지역장애인관련 기관 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4.1.2 지역장애인 관련 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시설을 개방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장애인시설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구축 : 정기적, 비정기적 네트워크 형성 ▪ 장애인복지시설 : 거주시설,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관련 제반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 장애인단체 :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 등 - 지역 장애인시설과 단체에 복지관을 개방하고 사업 및 서비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개방 : 정보공개(경영방침, 사업내용, 이용안내 등), 시설 및 기자재 개방 및 대여 ▪ 지역의 장애인시설(단체)과 사업 및 서비스 연계

■ 기준 2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

○ 세부기준 4.2.1 :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

세부기준	세부내용
4.2.1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교육 또는 지역사회조직화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 :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한 지역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지역사회조직화 : 장애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조직화 사업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지역주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 지역사회 제반 행사에 장애인들의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주민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장애인들의 참여 지원

○ 세부기준 4.2.2 : 장애인식개선

세부기준	세부내용
4.2.2 장애인식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겪는 지역사회 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사업계획에 장애인식개선 사업 수립 ■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실행 - 교육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자료와 진행 방식의 차이를 둠 -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자료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팸플렛, 벤허 등 각종 인쇄물과 물품 제작 및 배포



■ 기준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세부기준 4.3.1 : 지역사회 네트워크

세부기준	세부내용
4.3.1 지역사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 등과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연계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침(사업계획)에 지역사회연계사업 촉진 내용이 있고, 사업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경영이념과 운영방침에 지역사회연계의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에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사업 수립 - 공공기관 또는 민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고용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참여 - 주민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풀뿌리 주민모임 등 각종 주민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 지역사회 단체(개인)와 공식적인 연계(협약)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 또는 협약서를 근거한 공식적인 연계

■ 기준 4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 세부기준 4.4.1 : 후원사업

세부기준	세부내용
4.4.1 후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후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후원사업 관련 법령에 의거한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자원개발과 후원사업을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금품 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화된 지침 마련과 그에 따른 시행 - 다양한 후원사업 안내 및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 결연,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후원사업 안내 - 외부자원개발을 통한 후원사업 활성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지원이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부자원개발(공동모금회, 기업의 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원을 확보)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후원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후원행사 실시

○ 세부기준 4.4.2 : 자원봉사자 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4.4.2 자원봉사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통해 역량강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에 대한 지침이 명문화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사업을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의 문서화 - 자원봉사자 관리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책정 - 자원봉사회 구성 및 자원봉사자 의견 수렴 - 자원봉사자실 마련(겸용 공간 포함)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기초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등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반 교육과 훈련 ▪ 관리 : 지지, 격려, 슈퍼비전, 활동내용 전산관리 및 인증서발급, 간담회, 야유회 등



○ 세부기준 4.4.3 : 홍보활동

세부기준	세부내용
4.4.3 홍보활동	<p>○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한다.</p> <p>- 장애인복지관 소개 및 자원개발(후원, 자원봉사, 지역연계등)의 내용을 충실히 갖춘 정기적 홍보물 제작 및 배포</p> <p> ■ 리플렛, 요람, 가이드북, 핸드북, 관보, 안내지 등</p> <p>-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p> <p> ■ TV, 신문, 라디오, 정기간행물, 인터넷 방송, 기타 등</p> <p>-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확보한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홍보 실시</p> <p>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p> <p> ■ 포털사이트 연계홍보,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홍보</p>

5. 인력

■ 기준 1 인력의 확보

○ 세부기준 5.1.1 : 직원의 확보

세부기준	세부내용
5.1.1 종사자의 확보	○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인원에 대비하여 직원을 충분하게 확보한다.

○ 세부기준 5.1.2 : 법적 자격과 경력

세부기준	세부내용
5.1.2 법적 자격과 경력	○ 해당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적 결격사항이 없어야 하며, 관련 경력의 유무를 확인하여 선발한다.

○ 세부기준 5.1.3 : 직원의 선발¹²⁾

세부기준	세부내용
5.1.3 직원의 선발	○ 상위법(규정 및 지침)이 반영된 인사규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 12)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 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해야 한다(2014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기준 2 인력개발

○ 세부기준 5.2.1 : 신입직원교육

세부기준	세부내용
5.2.1 신입직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입직원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관의 사명, 제규정 및 지침, 직무내용, 업무처리 절차, 장애인복지관의 최소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 신입직원교육 교재는 자체 제작 또는 기존 자료 사용 - 교육기간은 수습기간 이내에 완료

○ 세부기준 5.2.2 : 훈련과 개발

세부기준	세부내용
5.2.1 훈련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직원의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가치, 흥미, 이해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직원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반영 - 경력이나 직위에 맞는 다양한 내·외부 교육 실시

■ 기준 3 슈퍼비전

○ 세부기준 5.3.1 : 슈퍼비전

세부기준	세부내용
5.3.1 슈퍼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문 및 슈퍼비전을 받는다.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내부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 - 자문 또는 슈퍼비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에 반영

■ 기준 4 근무평정 및 포상

○ 세부기준 5.4.1 : 근무평정 및 포상

세부기준	세부내용
5.4.1 근무평정 및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직무성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내·외부 포상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근무평가지표를 통해 직무성과, 수행능력, 태도에 대한 정기 평가 실시 - 평가와 연계된 포상 실시

■ 기준 5 근무여건¹³⁾

○ 세부기준 5.5.1 : 고충처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5.5.1 고충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공식적인 체계 구축 및 시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고충처리 및 권익지원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고충처리 위원에 의한 체계적인 고충처리 시행 * 단,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적용 예외임

○ 세부기준 5.5.2 : 자치조직 운영지원

세부기준	세부내용
5.5.2 자치조직운 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의 활기차고 신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모임 지원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 상조회, 친목회, 동아리 등 자치모임을 위한 환경 및 예산 지원

13)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시정을 위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2014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 세부기준 5.5.3 : 직원의 안전관리

세부기준	세부내용
5.5.3 직원의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의 안전을 위한 제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 준수한다.- 직원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준수- 정기적인 직원의 건강검진 실시

6. 시설운영

■ 기준 1 복지관의 접근성

○ 세부기준 6.1.1 : 복지관의 위치

지표	세부내용
6.1.1 복지관의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의 접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수단이 정기적으로 운행되거나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한 지역인 경우 장애인복지관 자체 이동수단으로 이용자의 이동편의 도모 - 자가운전자 또는 도보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안내 표지판을 국도 또는 지방도로 등에 설치 노력하거나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

■ 기준 2 복지관의 내·외부 환경

○ 세부기준 6.2.1 : 내·외부의 환경

지표	세부내용
6.2.1 내·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한 복지관의 내·외부의 공간 및 안전성 확보하고, 위생 및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안전을 위해 시설물관리와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실시 -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며 관련 사항 기록 - 건물의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불법개조 등) - 장애인복지관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시 즉시 개선 - 장애인복지관은 편안하고, 밝고, 통풍이 잘 되고,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밝기와 난방 및 냉방 등이 제공 - 장애인복지관 이용을 위해 각 층별 공간 배치도와 층별 안내 표지판을 제공 - 장애인복지관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 - 전염병의 확산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준 3 개방성

○ 세부기준 6.3.1 : 정보공개

지표	세부내용
6.3.1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 조직의 사명, 사업내용, 재무자료, 각종 위원회 회의 결과 등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정보를 시설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공개

○ 세부기준 6.3.2 : 복지관 개방성

지표	세부내용
6.3.2 복지관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개방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시설물을 개방한다.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장애인복지관의 공간 또는 기자재와 설비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개방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기준 4 사명

○ 세부기준 6.4.1 : 사명진술

지표	세부내용
6.4.1 사명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사명의 명문화와 사명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점검, 수정, 공유 등을 실행한다.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의 명문화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을 직원 및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 - 설립이념, 조직의 목적, 미션, 비전 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 -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실행, 매년 점검, 수정

■ 기준 5 운영계획 및 운영평가

○ 세부기준 6.5.1 :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

지표	세부내용
6.5.1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욕구와 만족도 및 기타 외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계획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 ■ 운영목표 및 운영방침 ■ 사업계획 및 평가 ■ 외부환경 변화 등 -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 운영계획은 장애인복지관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부합되게 수립 - 운영계획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

○ 세부기준 6.5.2 : 운영평가

지표	세부내용
6.5.2 운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정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 평가체계 마련 - 평가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 - 운영 평가 시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조사 결과를 참고하며, 평가결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



○ 세부기준 6.5.3 :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지표	세부내용
6.5.3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욕구와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고 공개한다. -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매년 이용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조사 - 조사결과는 이용자 및 열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

■ 기준 6 문서관리

○ 세부기준 6.6.1 : 문서관리

지표	세부내용
6.6.1 문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관리 규정 또는 지침의 마련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장애인복지관내의 정보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관리 규정 또는 지침 마련

○ 세부기준 6.6.2 : 정보화의 수준

지표	세부내용
6.6.2 정보화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전산화 및 안전장치를 구축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포함)에 걸친 사항의 전산화 구축과 운용(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등)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한 전산화 안전장치 구축

■ 기준 7 재무관리

○ 세부기준 6.7.1 : 회계의 투명성

지표	세부내용
6.7.1 회계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회계에 관여하는 모든 직원의 재정 보증보험 가입 －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



I. 총 칙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2. 최저기준의 준수

1. 이 기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이므로 시설은 이 기준을 이유로 서비스 수준을 낮출 수 없다.
2. 시설은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령, 장애인복지법령 및 기타 장애인관련법령, 근로기준법령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II. 이용자의 인권

기준1. 인격의 존중과 정당한 편의제공

- 2.1.1.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한다.

기준2. 차별금지

- 2.2.1.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이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성별, 혈연, 종교, 출신학교, 출신지역,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정도, 기타 개인적인 선호·특징·조건·지위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기준3. 정보제공

- 2.3.1.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은 개인정보와 기록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3.2.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이 제공받는 정보에는 시설의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 이용방법(기한, 이용료, 내용 등), 이용자의 권리 및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며, 정보제공을 위한 원칙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준4. 비밀보장

- 2.4.1.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문서화되어 기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관리 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준5. 자기결정권

- 2.5.1. 시설은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 2.5.2. 시설 이용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시설 임직원은 이용자에게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시설의 환경

기준1. 시설의 접근성

3.1.1. 시설은 모든 이용자, 이용자 가족 등이 접근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기준2. 시설의 환경

3.2.1.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은 이용자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건물의 공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2.2. 시설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자원봉사자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작업실 등과 같은 설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3.2.3. 시설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련하여 보호작업장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90제곱미터 이상, 근로사업장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4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2.4. 시설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의 작업실 규모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준3. 편의시설

3.3.1.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IV. 시설의 운영

기준1. 핵심가치와 비전

- 4.1.1. 성공적으로 조직의 사명을 수행하는 조직 미래의 모습을 담은 조직의 비전과 시설 운영 목적, 목표가 수립되어 있고, 문서를 통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2. 법인이사회

- 4.2.1. 법인이사회는 조직의 장·단기계획을 세우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결정하고 이에 관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 4.2.2. 법인이사회의 구성원은 조직의 사명에 헌신해야 하며,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3. 운영위원회

- 4.3.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이용자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이용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시설이용자 또는 시설이용자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4.3.2.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는 직원, 이용자 및 운영위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기준4. 사업계획 및 관리

- 4.4.1. 시설의 연중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4.4.2.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 정보들을 기록하고, 원칙과 법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
- 4.4.3. 시설은 사례 및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등이 명시된 정보(문서) 관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5. 평가

- 4.5.1. 시설은 매3년에 한번씩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결과를 이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준6. 재무관리

- 4.6.1.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7. 시설 투명성

- 4.7.1. 시설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4.7.2.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산 및 결산, 후원금,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식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V. 안전관리

기준1.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

- 5.1.1. 이용자는 시설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준2. 시설의 안전점검

- 5.2.1. 시설 건물은 안전기준에 부합되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기준3. 시설 및 설비 위험요소에 대한 고지

- 5.3.1. 시설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신체장애, 감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VI. 인력관리

기준1. 직원 채용 및 전문성

- 6.1.1. 시설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배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6.1.2. 시설의 직원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6.1.3. 시설은 적법한 절차와 시설의 공식적인 지침(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명시, 채용절차 명문화,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수행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기준2. 훈련과 개발

- 6.2.1. 시설은 직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이후 매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6.2.2. 시설의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표가 작성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원의 역할과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 6.2.3 시설은 매년 직원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인사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Ⅶ. 지역사회 연계

기준1. 자원봉사

- 7.1.1.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매뉴얼화된 교육자료로 사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실적이 기록 및 관리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기준2. 시설의 개방

- 7.2.1.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의 기자재와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VIII. 서비스

기준1. 서비스의 기본 원칙

- 8.1.1. 시설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 8.1.2.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재가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2. 서비스 과정

- 8.2.1.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의 접수, 진단 및 판정 절차에 대해 문서화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8.2.2.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은 서비스의 계획, 제공 내용, 평가과정 등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은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기준3. 서비스의 제공

- 8.3.1.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사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문서화



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3.2. 개별화된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러한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8.3.3.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 점검하는 종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4. 작업활동 프로그램

8.4.1. 시설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기관 특성,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2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8.4.2 시설은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직업평가, 통근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이외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5. 재활프로그램

8.5.1.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근로사업장은 시설의 특성, 이용인의 장애 정도, 유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재활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사업장에 한함)

- 8.5.2.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호작업장은 시설의 특성, 이용인의 장애 정도, 유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 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 훈련 등을 주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6. 서비스 결과

- 8.6.1.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Ⅸ. 근로장애인

기준1. 근로장애인의 권리

- 9.1.1. 시설은 근로장애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의 권리 및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9.1.2. 시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야 한다.
- 9.1.3. 시설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자원의 개발 및 시설 생산품의 판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9.1.4. 근로장애인은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장애인은 근로과정과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할 수 있다.



기준2. 근로장애인의 선발

- 9.2.1.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근로장애인)를 선발할 때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선발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문서화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 9.2.2. 시설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3. 고충처리

- 9.3.1. 시설은 근로장애인의 고충처리 및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고충처리를 위한 담당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고충과 관련한 개선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7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사업

- (실종 아동·장애인 발견신고 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관서(전화 : 국번없이 182번)에 신고
 -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정신의료기관의 장 포함)은 아동·장애인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거나 보호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각각 지자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
- ※ 특히,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등 관련 지침(’09.9.29)”을 숙지하여 보호시설등에서는 신상카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

1. 실종 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가. 실종아동등의 정의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 아동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나.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

- 신고처 - 국가경찰관서(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신고의무자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보호시설
<p>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p> <p>※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p>

다. 신상카드 작성·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종 아동·장애인을 보호하게 된 때(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라.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14년 하반기 시행예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

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마련 고시하여야 함

-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정보 발령 절차
-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 미 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 경찰 도착 후 발령해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정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을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



- 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바. 수색 또는 수사

-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사. 벌칙 등

위반 사항	벌칙·과태료
○ 미신고보호행위의 경우(불법양육행위 포함)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경찰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실종아동·장애인의 발견을 위해 보고 또는 자료 요청, 출입·조사할 경우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4년 하반기 시행 예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보호시설장이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할 경우 ○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14년 하반기 시행예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실종 아동·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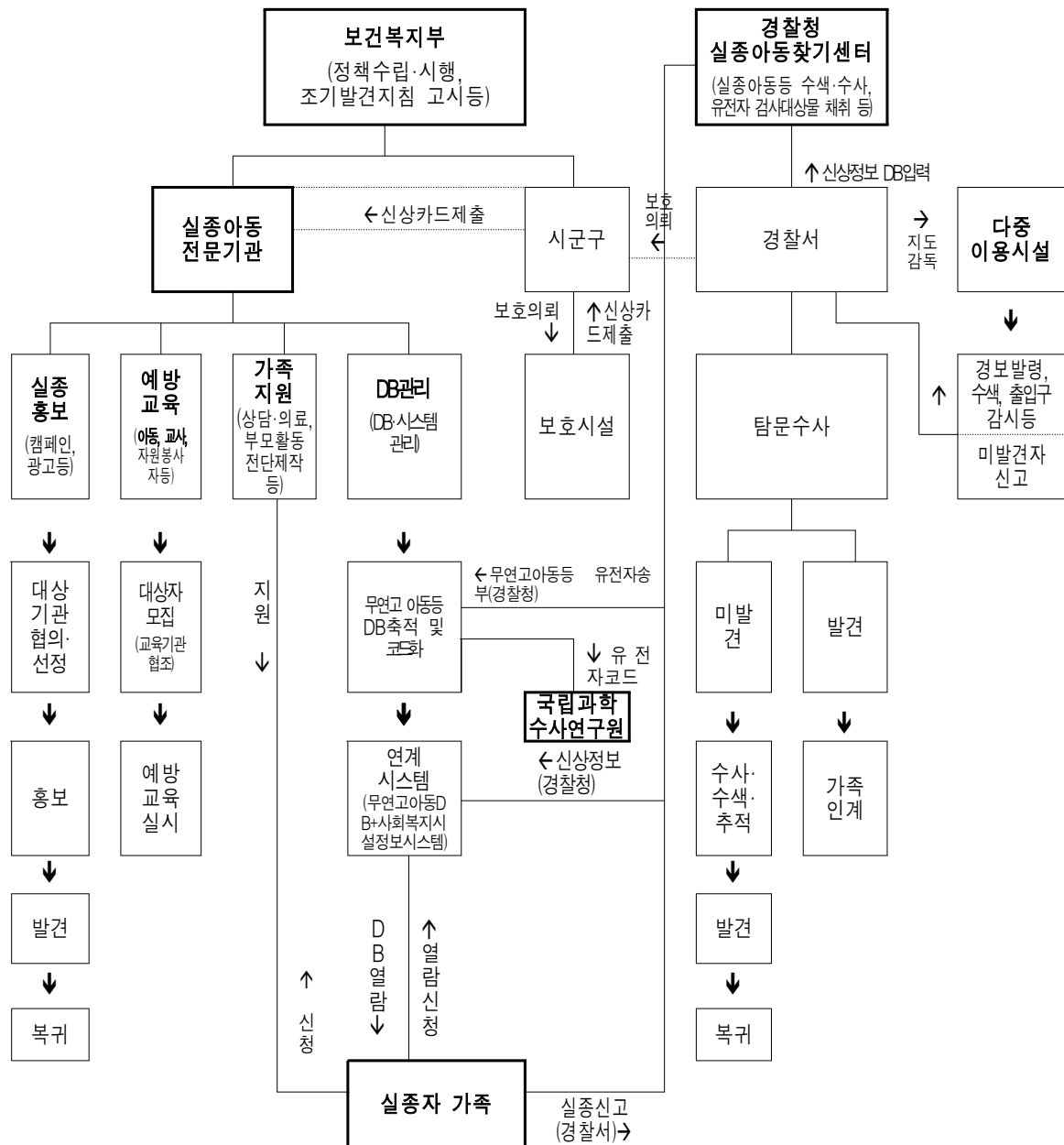


가. 협력체계(밑줄친 부분은 '14년 하반기 시행예정)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립 및 시행 • 무연고아동등 신상 카드 DB 구축 •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 기타 필요 사항 • 실종아동등 발생예 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신고 접수 • 수색 및 수사 •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 지침이 준수 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등 발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제출 여부 지도·감독 • 관계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아동등이 신고 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



나. 업무 진행도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가. 의무사항

(1) 무연고 아동등 일시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일시보호센터 현황 첨부)

- 실종아동등 발생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보호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우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일시보호센터 개요

■ 추진배경

- 실종아동 등 발생시 아동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분산·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소재추적이 어려워 장기실종으로 연계될 가능성 증대
- 특히 장애인이 경우 지리 변별력, 의사 전달력, 상황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낮아 보호자로부터 이탈될 경우 장기실종으로 연계되어 수색·수사등 사회적·경제적 비용 유발

■ 일시보호센터 역할

- 실종아동등 발생시 일시보호센터에서 우선 보호조치
- 신상카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2호)

(2)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 지자체의 장이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등에 보호조치한 경우, 보호시설 등에서 신상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호)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즉시 제출하도록 지도·감독
-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종아동등을 보호할 경우 신상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호)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운영중인 “실종아동찾기 연계시스템” (www.missingchild.or.kr)을 활용하여 제출



- 특히, 2009년 9월 29일 통보한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보호시설 등에서 신상카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3) 관계장소 출입·조사

-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음
-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의 가족등을 동반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함

나. 행정조치사항

(1) 신상카드 제출 관리

- 실종 아동·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들에 대한 신상카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2)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무연고자 점검 철저

- 지자체의 장은 실종아동·장애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의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 등 일제 점검시 적극 협조하며,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소·전원·퇴소·신상카드 제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3)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인수인계 및 교육

-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공무원 변동시 반드시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철저

(4)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업무 관련 관계기관 간 적극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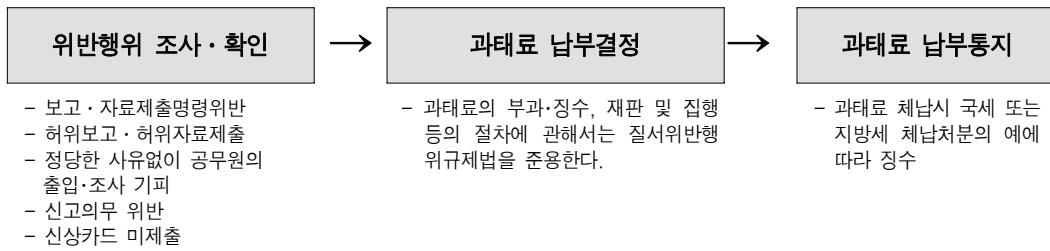
-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채취, 출입·조사 등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DB구축, 발생예방 사업, 홍보·교육 업무, 가족지원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2) 과태료 징수절차



4.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이란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 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u>아동</u> 및 장애인 ○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u>아동</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u>아동</u> 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호적)는 있지만 시설입소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부랑인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 (정신보건시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5. 신상카드 제출방법



가.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의 2) 제출방법

홈페이지 직접입력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시설보호검색' 에서 '신상카드제출' 클릭 ③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 후 발급) ④ 신상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호) 또는 신상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클릭 ⑤ 신상카드 입력 화면에서 신상카드 앞쪽, 뒤쪽 입력 후 저장 ⑥ 작성된 신상카드를 출력하여 보관
이메일 송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기타자료-신상카드 서식 다운받아 사용 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이메일(reunion@childfund.or.kr) 송부
우편송부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의 자료실-기타자료-신상카드 서식 다운받아 사용 ③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우편 송부(서울시 중구 무교동 95 어린이재단 2층 실종아동전문기관 (우)100-170)

[참고자료]

○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현황 [2014년말 현재 총 63개소]

시도	일시보호 센터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서울 (3) (3/0)	서울시아동 복지센터	아동 종합시설	이기영 (2040-4200)	강남구 수서동 산 4-1	실종아동	50	서울특별시 (기·미아, 가출·부랑아, 피학대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꿈나무마을	아동 양육시설	김용숙 (351-2001)	은평구 응암1동 42-5	실종아동	1,050	서울특별시 (3세미만 영아, 18세미만 경증장애아동, 정서장애)
	시립동부 아동상담소	아동 종합시설	김보애 (2248-4567)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실종아동	140	서울특별시 (약물·알콜·도박·상습·가출부랑 등 치료필요 아동)
부산 (3) (1/2)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호시설	최송엽 (051-583-7314)	부산.금정.장전2동 산38-12	실종아동	30	부산광역시
	아이들의 집	장애아동 양육시설	민광한 (051-542-5980)	부산.해운대.반송동 614	실종장애인 (6세미만)	41	부산광역시
	천마재활원	장애아동 양육시설	황소진 (051-247-4084)	부산.서.암남동 산13-5	실종장애인 (6세이상)	95	부산광역시
대구 (1/0)	SOS아동 보호센터	아동일시 보호시설	정해수 (053-756-7348)	대구 수성구 만촌1동 634-4	실종아동	30	대구광역시
인천 (2) (1/4)	보라매아동 일시보호	아 동 일시보호	이계순 (032-747-1102)	인천 중구 운북동 797-1	실종아동	50	인천광역시
	동 심 원	지적장애 영 아	장순분 (032-818-4737)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55-4	실종장애인	50	인천광역시
	성촌의 집	지체장애	김영주 (032-422-0573)	부평구 십정2동 586-2	실종장애인	80	남동, 부평, 연수, 옹진
	인정재활원	지적장애	홍인식 (032-574-0250)	서구 석남3동 491-1	실종장애인	50	중구, 등구, 남구, 서구
	색동원	중증장애	김범철 (032-362-9300)	강화군 길상면 길적리 835-27	실종장애인	60	계양, 강화
광주 (2) (1/1)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공동생활 가정	한선희 (062-385-1391)	광주 서구 쌍촌동 1355-1	실종아동	7	광주광역시
	어 등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	백은희 (062-944-4727)	광주 광산구 덕림동 15	실종장애인	30	광주광역시
대전 (3) (1/2)	성우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익자 (042-636-5727)	대전 대덕구 연축동269	실종아동	60	대전광역시
	평강의집	장 애 인 시 설	노준호 (042-620-8700)	대전 대덕구 대화동39-1	실종장애인 (14세미만)	77	대전광역시
	동 심 원	장 애 인 시 설	김연환 (042-581-2254)	대전 서구 오동 277-3	실종장애인(14 세이상)	80	대전광역시
울산 (3) (1/2)	울산양육원	아동 양육시설	이덕재 (052-277-5636)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실종아동	150	울산광역시
	행복동지	공동생활 가정	강정호 (052-276-0740)	울산 남구 신정1동 713-1 운포가/502	실종장애인 (여자)	4	울산광역시
	울 산 나눔터	공동생활 가정	이숙자 (052-211-2442)	울산 중구 북정동 116-15	실종장애인 (남자)	4	울산광역시



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시도	일시보호 센터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경기 (2) (2/0)	경기남부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 호 소	심양금 (031-445-7188)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실종아동	70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경기북부 아동일시 보호소	아동일시 보 호 소	나기노 (031-877-2849)	의정부시 녹양동 318-5	실종아동	45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 (4) (1/3)	강원도아동 복지센터	아동일시 보호시설	고송곤 (033-762-3462)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773-1	실종아동	35	강원도
	남강단기 보호센터	장 애 인 단기보호 시 설	오준오 (033-244-1602)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45-4	실종장애인	10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원 주 시 장애인단기 보호센터	장 애 인 단기보호 시 설	이명숙 (033-766-1722)	원주시 단구동 1486-2	실종장애인	10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보람의 집	장 애 인 단기보호 시 설	심영미 (033-647-4686)	강릉시 교1동 1815-3	실종장애인	10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북 (6) (6/0)	충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완진 (043-216-139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실종아동	7	청주시, 증평군
	진여원	아동 양육시설	박현기 (043-851-6013)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556	실종아동	29	충주시
	제천 영육아원	아동 양육시설	제인화이트 (043-645-1614)	제천시 고암동 253-3	실종아동	90	제천시, 단양군
	충북 해능보육원	아동 양육시설	왕희택 (043-260-1107)	청원군 옥산면 환화리 29-8	실종아동	105	청원군
	영실에육원	아동 양육시설	이준호 (043) 731-4114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479-1	실종아동	105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꽃동네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이경애 (043) 877-7714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50	실종아동	100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충남 (5) (4/1)	삼 일 육 아 원	아 동 양육시설	김옥화 (041-572-7795)	충남 천안시 쌍용동 220-4	실종아동	100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보 령 원	아 동 양육시설	이정은 (041-931-2335)	충남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568	실종아동	49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계룡학사	아 동 양육시설	유창학 (041-735-0703)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151-5	실종아동	95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새감마을	아 동 양육시설	조은진 (041-337-4046)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94-6	실종아동	60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성 모 복 지 원	장 애 인 시 설	안숙영 (041-543-7861)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49-2	실종장애인	100	충청남도
전북 (3) (2/1)	구세군 군산후생원	아 동 양육시설	조혜란 (063-445-9331)	전북 군산시 신흥동 58-10	실종아동	7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정읍 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이숙자 (063-535-3017)	전북 정읍시 시기동 180	실종아동	80	정읍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아름다운 마 을	정신지체인 시설	이금숙 (063-563-7332)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283	실종장애인	30	전라북도

시도	일시보호 센터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전남 (4) (3/1)	목포아동원	아동 양육시설	이상해 (061-276-0078)	목포시 용해동 829	실종아동	120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나주금성원	아동 양육시설	조복래 (061-331-7646)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453	실종아동	120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순천성신원	아동 양육시설	주옥금 (061-744-2964)	순천시 인제동 101-6	실종아동	90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목포광명원	장애인 생활시설	하제룡 (061-462-7356)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442-3	실종장애인	103	전라남도
경북 (13) (12/1)	임마뉴엘 영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김정숙 (054-434-2821)	경북 김천시 교동 591	실종아동 (4세미만)	140	경상북도
	포 함 선린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이희동 (054-252-4404)	경북 포항시 환호동 69-4	실종아동 (4세이상)	105	포항시, 울릉군
	경주 성애원	아 동 양육시설	원순이 (054-746-4826)	경북 경주시 구정동 616-51	실종아동 (4세이상)	70	경주시
	김천 베다니성화원	아 동 양육시설	김성원 (054-436-4773)	경북 김천시 지좌동 432	실종아동 (4세이상)	88	김천시
	안 동 경안신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신복 (054-858-6439)	경북 안동시 정상동 521	실종아동 (4세이상)	90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구미 삼성원	아 동 양육시설	신영화 (054-452-8487)	경북 구미시 형곡동 73-3	실종아동 (4세이상)	100	구미시, 칠곡군
	영천 희망원	아 동 양육시설	이상근 (054-335-3633)	경북 영천시 작산동 130	실종아동 (4세이상)	80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상주 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한재덕 (054-532-4172)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35	실종아동 (4세이상)	105	상주시
	신망 애육원	아 동 양육시설	황영숙 (054-555-2811)	경북 문경시 영신동 422	실종아동 (4세이상)	105	문경시, 예천군
	의성 자혜원	아 동 양육시설	박철진 (054-834-2902)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136	실종아동 (4세이상)	124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 경북 기독보육원	아 동 양육시설	김홍기 (054-732-0426)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408	실종아동 (4세이상)	70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성주실로암 육아원	아 동 양육시설	박승덕 (054-932-3551)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평리 703	실종아동 (4세이상)	100	성주군, 고령군
	안 동 애명복지촌	장애인 생활시설	배영호 (054-585-8870)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	실종장애인	130	경상북도
경남 (3) (2/1)	동보원	아동 양육시설	김영남 (282-6434)	창원 사파동 116	실종아동	105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통영시, 거제시,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진주기독 육아원	아동 양육시설	정순희 (746-3622)	진주시 평거동 386번지	실종아동	79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무궁애학원	장애인 생활시설	박민현 (382-9856)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935-4	실종장애인	60	경상남도



시도	일시보호 센터명	시설 종류	시 설 장 (연 락 처)	시설소재지	보호 대상자	정원	관할지역
제주 (3) (2/1)	빙세기 실종 아동 일시 보호센터	공동생활 가정	김은정 (064-712-1391)	제주시 노형동 944-7	실종아동	7	제주시
	제남아동복지 센터	아 동 양육시설	김선자 (064-739-1020)	서귀포시 서호동 584	실종아동	80	서귀포시
	창암 실종 장애인일시 보호센터	장애인 생활시설	박광수 (064-799-1555)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19	실종장애인	50	제주도